

#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법」제 13, 14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2020  
년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임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제 11, 12조에 규정된 국가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향후 개선 과제 및 정책 방  
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법 제 3장 제 13, 14조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 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 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1. 13.]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 11, 12조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제목개정 2010. 4. 7.]

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10. 4. 7.]



# 참여 연구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홍한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	강선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도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자문위원(가나다 순)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영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하 K-SDGs)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으로 수립되었다. K-SDGs는 2015년 UN의 2030의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하여 자국화한 것으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목표별 214개 지표를 대상으로 2020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14개 지표 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197개 지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중 국가의 공식 승인통계가 활용 가능한 99개 지표에 대해서는 4단계 정량 평가를 시행하였다.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관련 연구결과나 부처 내부 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하여 수록하였다. 평가기준년도는 '18년으로 '20년의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 등 '18년 이후의 상황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별 지표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하여 2030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99개 지표에 대한 4단계 정량 평가 기준은 <표 1>과 같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국가 지속가능성 '목표순향도'의 4단계 평가

평가 의미	날씨 표현
최근 5년간의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목표 방향만 있는 경우 장·단기 추세 모두 목표방향 진행)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이나 현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불가 (목표 방향만 있는 경우 장기정체, 단기적으로 목표방향 진행)	
정체 상태	
최근 5년간 목표 반대방향으로 진행	

〈표 2〉 전략별 4단계 정량평가 결과(국가승인통계 활용 평가가능 지표 수: 99개)

Ⅰ 전략 1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 중 위 가 처 분 소 득 50%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여부별)	-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농가소득(천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발토양산도(pH) -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 친환경농업인증면적비율(%)	
	- 당뇨병 조절률(%) - 성인남성흡연율(%) - (WHO담배규제기본협약의이행) - 신생아사망률(%)	- 인구10만명당 자살률(%) - 15세이상인구1인당 알코올섭취량(ℓ) -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 연간천명당 말라리아발병률(%) - OECD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 공공병상수 - 장애인건강권 확보 - 장애인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건강권 확보 - 장애인만성질환 유병률(%)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학습참여율(%) -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 Wee클래스 설치비율(%) - 특수교사일인당 특수학생수	- 초등학교 취학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용률(%) - 초·중등전문상담교사배치비율(%)	-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비율(%) - 보육교사중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비율	- 학업중단율(%) (다문화학생)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 의회와지방의회 여성비율	-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달성률(%)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 인구집단별 고용률(%) (55세이상고용률) - GDP대비가계소득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율' 가용 통계가 없어 '국민연금보험 가입률'로 대체하여 평가 수행(가입유형별, 성별)







② 전략 2 :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구분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p>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상수도보급률 (%)</li> <li>- 농어촌상수도보급률 (%)</li> <li>- 농어촌하수도보급률 (%)</li> <li>- 수질 ' 좋음 ' 등급비율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등급달성률(%)</li> <li>- 상수도누수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1인당 상수도사용량(ℓ/일/인)</li> </ul>
 <p>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수(만호)</li> <li>- 1차에너지대비재생에너지 비중(%)</li> <li>- 친환경차확대수(만대)</li> </ul>		
 <p>13 기후변화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차확대수(만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li> </ul>
 <p>14 해양생태계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평가 지수값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li> <li>- 바다숲조성 누적면적(ha)</li> <li>- 연안평균pH농도적정범위(8.0~8.2)유지</li> <li>- 감척어선수(건)</li> <li>- 해양보호구역지정개소수(개)</li> <li>- 어가소득(백만원)</li> <li>- 어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C 대상 어종수(어종)</li> <li>- 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해양수산연구개발투자비중(%)</li> </ul>	
 <p>15 육상생태계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렵밀거래 단속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li> </ul>

**③ 전략 3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b>맑음</b>	 <b>맑거나 흐림</b>	 <b>흐림</b>	 <b>뇌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고용률(%)</li> <li>-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li> <li>-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증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li> <li>- 사고사망만인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일인당 실질 GDP성장률</li> <li>- 인구집단별고용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GDP에서 관광 분야 기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보급률(km/천명)</li> <li>-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li> <li>- GDP대비연구개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자원 생산성 (GDP /DMC), 자원 강도(DMC/ GD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만호)</li> <li>- 인구십만명당사회재난으로인한 사망인구(명)</li> <li>- 1인당도시공원면적 (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수급가구 (만호) 및 재정(조원)</li> <li>- 대중교통수단분담률 (%)</li> <li>- 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대비 국가복구예산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li> <li>-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li> <li>-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구매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폐기물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li> <li>- 일반국민의 환경의식수준(%)</li> </ul>

**④ 전략 4 :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 ⑤ 전략 5 : 지구촌 협력**

	 <b>맑음</b>	 <b>맑거나 흐림</b>	 <b>흐림</b>	 <b>뇌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li> <li>- 아동학대발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청렴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NI대비 ODA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li> </ul>



**K-SDGs 1번**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별, 장애여부 등과 상관없이 빈곤 인구 비율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장을 달성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목표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2030 목표대로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중위 가처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30 목표인 12.5%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측정하는 지표인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취약계층의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방향성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계 직접 본인부담률(%)’ 지표는 최근 10년간의 장기 추세와 최근 5년간의 단기 추세 모두 특별한 추세 없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또한 OECD 및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업 급여 보장 기간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다.



**K-SDGs 2번**은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다.

‘농가소득’이 2030 목표치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만톤)’의 경우, FAO<sup>1)</sup> 기준에 따르면 정부양곡 적정재고량은 쌀 연

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간소비량의 17-18% 수준인 80만 톤이어야 한다. 최근 5년간 80만톤 이상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g/kg)’ 및 ‘밭 토양 산도’의 전국 평균값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두 수치 모두 적정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밖에 농경지의 인산이나 칼슘 같은 양분상태는 적정함량보다 과다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토양개선을 위한 적정한 비료사용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에 대한 농촌진흥청 자체 자료에 따르면 내병·충성, 내한성 등 기후변화 대응 특성에 따라 식량작물 10작물 128종, 원예작물 16작물 81품종, 특용작물 5작물 22품종, 사료작물 3작물 35품종 등 총 34작물 266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 수’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유전자원 서비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년 1월 현재 총 1,599종, 237,043 자료의 식물이 종자유전자원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중 식량자원은 275종 178,797자원, 원예자원은 525종 30,759자원, 특용작물은 346종 23,759자원, 기타작물은 453종 3,608자원이다.



**K-SDGs 3번**은 전 연령대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만성 질환이나 감염병 등의 질환 관리, 정신건강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방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부목표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만성질환 관리의 측면에서 ‘당뇨병 조절률(%)’ 및 ‘성인 남성 흡연율(%)’ 지표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현 추세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정체 상태에 있고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정책 및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모자 보건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신생아 사망률(%)’은 유의미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은 유의미한 추세가 보이지 않는데, 고령 산모의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섭취량(L)’,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연간 천명당 말라리아 발병률’ 등의 건강 및 사고 관련 지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보였으나 2030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상 수’는 2015년부터 뚜렷한 추세 없이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총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나 수익성은 낮은 필수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나 공공병상 비율 등의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K-SDGs 4번**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모든 아동 및 성인이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기술·직업·대학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목표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훈련교육 경험 비율(%)’ 등의 교육 지표는 현재의 성장률이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 및 초·중등 교육 관련 지표인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2030 목표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ISA나 TIMSS와 같은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의 우리나라 결과는 OECD 국가 중 상위 성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최근 5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K-SDGs에서는 아직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한 재점검 과정이 필요하다.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또한 유의미한 감소 추세를 보여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집단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전 국민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K-SDGs에서는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을 2030년까지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 중이다.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과 보육교사 양성체계 정비 노력이 요구된다.



**K-SDGs 5번**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을 추구하는 목표로, 성차별 및 성폭력을 철폐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세부목표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발생 사건 및 미검거율(%)’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의 감소세면 2030년까지의 목표인 3.32%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의 원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은 2014년 68.8%에서 2018년 71.9%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2030 목표치인 83%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성장률이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인 ‘공학계 여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후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한 평가가 요구된다.

정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SDGs에서는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수용률(%)’을 평가 지표로 두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무보수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 시간은 미혼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세 이상 남녀 모두 일에는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지만 가사노동에서는 미혼 여자가 미혼 남자에 비해 약 40분 정도 더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DGs 6번**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이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를 통해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물순환 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은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은 13~15% 부근에서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상수도 누수율(%)’과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도 누수율(%)’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목표치 9.2%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은 지속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전국 수질목표기준 평가 중 ‘BOD 기준에서의 수질등급 달성률(%)’을 2030년까지 85%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2030년까지 ‘수질 ‘ 좋음’ 등급 비율’을 8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목표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K-SDGs 7번**은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로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및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소비 행태의 전환에 대한 세부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해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에서 에너지복지가 개선되어야 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수급, 공급에 있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4년 4.75%에서 2018년 8.30%로 증가 추세에 있어 2030년 목표치인 20%를 달성하기에 현재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에너지 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도 2014년 4.01%에서 2018년 5.56%로 증가 추세에 있어 2030년 목표인 13.6%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비중 2030년 목표치 20%는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현재의 증가 추세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선진국 기준으로 공격적인 2030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의 경우 2014년 0.20(Toe/백만원), 2017년 0.19(Toe/백만원)로 소폭 감소했다. 2030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4단계 정량 평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지표값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격적인 목표치를 세우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m<sup>2</sup>·년)’는 업무용 건물, 호텔, 병원, 상업용, 아파트 등 자료 가용한 범주들의 지표값이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또한 목표치가 없어 4단계 정량 평가는 적용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볼 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2004년 155.4(Toe/m<sup>2</sup>·년)에서 2016년 93.8(Toe/m<sup>2</sup>·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확대 수(대)’는 2014년 1,075대에서 2018년 31,696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30 목표치가 880만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진행 중이긴 하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충전소 등 아직 인프라도 부족하고 전기차에 대한 대중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K-SDGs 8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5년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는데 내수 증가세 둔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세 감소 등 다각도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집단별(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고용률(%)’ 또한 5년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용률(%)’ 및 ‘남녀 임금격차(%)’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지금의 성장 추세로 2030 목표 63.9%를 달성하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녀 임금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2030 목표 85.5%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및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2030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추세를 보인다.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인 ‘사고사망만인률(%)’은 감소 추세이나 2030 목표치 0.22%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 기여율(%)’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분야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2030 목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K-SDGs 9번**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목표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구축하도록 세부목표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도로 보급률(km/천명)’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좋아지는 추세를 보여 현재 성장률로 2030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R&D 과제의 산업화 성공률’ 지표 대신 본 평가에서 다룬 ‘사업화 R&D 과제 지원 건수’는 관측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은 지난 5년간 12%에서 15% 사이의 값을 보였으나 산출결과 값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후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국내 자원생산성/자원강도’는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여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DGs 10번**은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보건, 교육, 자산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다. '55세 이상 고용률(%)'은 최근 5년간 정체 상태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소득' 또한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도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와 1분위의 소득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 2015년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11로 OECD 평균인 6.62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 수준을 203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K-SDGs 목표로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2016년 5.45로 배율이 높아졌다가 2017년 다시 5.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K-SDGs에서는 '노인 빈곤율' 및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국가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년 「빈곤 통계연보」를 통해 노인 빈곤율과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지표로 하여 노인 빈곤율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시장소득 중위 40% 기준 노인 빈곤율은 51.7%, 경상소득 중위 40%기준 노인 빈곤율은 35.2%, 가처분소득 중위 40%기준 노인 빈곤율은 32.7%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중위 40%기준 노인 빈곤율은 22.8%, 가계지출 중위 40%기준 노인 빈곤율은 53.9%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한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년 4월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은 34.8%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1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주민 보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가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주민들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크며 산업재해를 당하는 비율도 이주민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표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주자의 산업재해율과 이주자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률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산업재해율은 내국인 0.5, 외국인 0.91, 사망만인률은 내국인 1.01, 외국인 1.28이다. 특히 건설업의 사망만인률이 내국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K-SDGs 11번**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만호)’와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인구 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인구’는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저상버스 보급률(%))’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2030 목표 50%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 예산액’은 유의미한 추세 없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2015년 이래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적정 나쁨일수 수준에 대한 2030 목표치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평가는 보류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일\*GDP 10억원)’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 목표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평가는 보류하였다.

녹지공원 접근성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K-SDGs지표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3$ )’과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이 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 목표 11.6%를 달성할 수 있다.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은 지역 내 공공건축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그 설치의 정도가 적절한 건축물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80.14%로, 2013년 67.4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K-SDGs 12번**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국가지속가능 생산·소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은 2030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2030 목표 83.8%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추세로 나타났고 ‘식품 폐기물 지표’는 뚜렷한 추세 없는 정체 상태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각별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본인의 ‘환경의식 수준’과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 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요구 정도를 평가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 본인의 환경 의식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 0.5% 이상 증가하여 2030년 75점의 환경의식수준을 갖는 것이 지표의 목표치이나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아져 의식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효율적 자원 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물질발자국’ 및 ‘국내물질소비량(DMC)’이 있는데, 국내의 물질발자국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및 GDP당 물질발자국은 유사한 수준이다. 국내물질소비량은 2000년도 이후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다. GDP당 물질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비교 대상국들의 공통된 추세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에서 고시하고 있다. ‘19년까지의 확보한 유해성 정보물질의 누적치는 1694건이다.



**K-SDGs 13번**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위한 목표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지표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친환경차 확대 수(대)'는 목표 7과 지표를 공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 목표 20%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추세인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좀 더 공격적인 목표치 선정이 필요한 것을 보이며, '친환경차 확대 수(대)'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030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K-SDGs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을 2030까지 최소 608MtCO<sub>2</sub>, 나아가 574MtCO<sub>2</sub>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 방향과 반대로 아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계·지자체 적응 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 지표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지침」을 2016.8월 제정하고, 2019년 12월 개정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http://kaccc.kei.re.kr/>)의 '기후적응정책'에서 '20년 7월 기준 15개 광역 지자체와 32개 기초지자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SDGs 14번**은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해양관리체계의 확립, 수산자원 관리,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세부목표 및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평가 지수(WQI) 기반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연안 평균 pH농도', '감척어선 수',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어가소득(백만원)' 및 '어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등 많은 수의 지표가 최근 5년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평가 지수(WQI) 기반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은 한국 연안을 해역별로 구분하여 해수수질을 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지표로, ' 좋음' 비율이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 나쁨'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연안 해수수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연안 평균 pH농도' 또한 적정범위인 (8.0-8.2) 사이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바다 상태환경과 수산자원의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인 '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ha)'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현 추세를 유지하면 2030년 목표인 54,000ha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 또한 2030년까지 39개소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매년 1-2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있는 현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2030 목표 39개를 달성할 수 있다. 어가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인 ' 어가소득(백만원)' 및 ' 어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율(%)'도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한 성장률을 보였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TAC 대상 어종 수'를 2030년까지 30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11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K-SDGs에서는 2017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1,200척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추세면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 14년부터 ' 18년까지 정체 중이다. 2015년 중국 5.5%, 일본 7.55%, 미국 8.2% 보다 낮은 수치로 2030 목표 6.0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비중 확대가 요구된다.



**K-SDGs 15번**은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육상 및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태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 등을 위한 세부목표 및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은 2010년 이후의 추세를 유지하면 2030년 목표인 700ha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밀렵 밀거래 단속실적’은 2015년 실적이 7,768건으로 유난히 좋았던 것 이외에 최근 5년간 특별한 추세 없이 정체 상태에 있다.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K-SDGs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용, 산림조성 등 산림경영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산림면적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률(%)’ 지표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통계연감」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급 지정 현황을 제공 중에 있다. 18년 기준 국내 야생생물 4만 9천종 중 26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다.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표로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외래생물 유입은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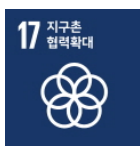
**K-SDGs 16번**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다.

‘5대 범죄(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검거율(%)’ 및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근 10년 및 최근 5년간 유의미한 상승 추세에 있다. ‘5대 범죄 검거율(%)’은 첫 목표치 수립 당시 ‘17년 달성률 78.2%가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22년 이후의 목표를 “지속적인 확대”로 선정하였다. ‘11년부터 ‘18년까지의 장기 추세와 ‘13년부터 ‘18년까지의 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 발견율’의 2030목표 또한 ‘지속확대’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표 값의 증가가 단순히 아동학대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방향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법정 전체 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건수 비율’이 모니터링 지표로 선정되어 있다. 1심 무죄판결은 ‘14년부터 ‘18년 사이 무죄선고인원 및 무죄 선고율에서 소폭의 등락 추이를 보이고,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심 무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소폭의 등락변동을 보이고 있다, 지표방향성을 특정할 수 없어 평가는 보류하였다.

‘국가청렴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로 측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본 보고서 평가기준 연도인 2018년까지 56, 55, 55, 54, 53, 54, 57점을 기록하였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CPI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20년 1월 발표한 '19년도 CPI는 59점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CPI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이래 우리나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K-SDGs 17번**은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된 목표이다. 개도국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세부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개도국 SDGs 이행지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표지표로 ‘GNI 대비 ODA 비율’이 선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ODA/GNI는 2013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권고 0.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0.03~0.04%에 그친다. 최근 5년 추세는 큰 변동 없이 정체 상태에 있으며 2030목표치인 0.3% 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

‘개도국과의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55.2%를 기록하였다.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한 실정어서 무관세조치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세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시장경제 안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지난 5년간 농가 및 어가 소득원이 다각화 되었고 OECD 삶의 질 지수에 따른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하천 및 해양 수질도 좋아지고 있다. 공공 부문의 여성 권한이 증대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친환경차 보급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고 1인당 자전거도로가 점점 늘어나는 등 녹색교통이 예전보다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하지 못하고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연령대별 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가진 청년 및 성인의 수를 증대하기 위한 지표인 직업훈련 경험 비율 및 평생학습 참여율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였다. 폐기물의 재활용이 높아지고 있고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통해 유해성 정보를 계속하여 확보하고 법적으로 화학 사고를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 수를 확대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장애인, 노인, 다문화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불평등 해소와 관련 지표는 대부분 정체 상태에 있거나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도국 지원 및 투자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개도국 대상 ODA 및 투자 규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차 / 례 /

제1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여건 .....	1
제1절 국제 동향 .....	3
제2절 국내 동향 .....	8
제2장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변경계획) 추진상황 점검 .....	13
제1절 K-SDGs의 구성 .....	15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평가 결과 .....	41
제3절 총평 .....	47
제3장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변경계획) 지표 평가 .....	53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55
목표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65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	75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92
목표 5. 성평등 보장 .....	112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123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133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140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	150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157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165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 .....	180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197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	203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	212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	222
목표 17. 지구촌 협력확대 .....	233
제4장 향후 개선과제 .....	239
제1절 평가 결과에 기반한 향후 개선과제 .....	241
제2절 한계 및 향후 평가 개선방향 .....	245
참고문헌 .....	249
부록 I K-SDGs 세부목표별 소관부처 .....	253

## 표 / 차 / 례 /

〈표 1-1〉 HLPF 연도별 국가자세평가보고서(VNR) 발간 국가	4
〈표 1-2〉 2019년 UN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통해 본 현재 발전 분야 및 관심 필요 분야	6
〈표 1-3〉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8
〈표 1-4〉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추진경과	9
〈표 2-1〉 UN SDGs 5P 원칙과 K-SDGs 5대 전략	16
〈표 2-2〉 K-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및 지표	17
〈표 2-3〉 K-SDGs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세부목표 및 지표	18
〈표 2-4〉 K-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세부목표 및 지표	19
〈표 2-5〉 K-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및 지표	21
〈표 2-6〉 K-SDGs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및 지표	23
〈표 2-7〉 K-SDGs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및 지표	24
〈표 2-8〉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및 지표	25
〈표 2-9〉 K-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및 지표	26
〈표 2-10〉 K-SDGs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세부목표 및 지표	27
〈표 2-11〉 K-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및 지표	28
〈표 2-12〉 K-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목표 및 지표	29
〈표 2-13〉 K-SDGs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및 지표	31
〈표 2-14〉 K-SDGs 13 “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및 지표	33
〈표 2-15〉 K-SDGs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및 지표	34
〈표 2-16〉 K-SDGs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및 지표	35
〈표 2-17〉 K-SDGs 16 “인권·정의·평화” 세부목표 및 지표	36
〈표 2-18〉 K-SDGs 17 “지구촌 협력확대” 세부목표 및 지표	38
〈표 2-19〉 2개의 세부목표와 관련된 중복지표	39
〈표 2-20〉 지표가 없는 K-SDGs 세부목표	39
〈표 2-21〉 17개 K-SDGs별 모니터링 지표 수	42
〈표 2-22〉 국가 지속가능성 ‘목표순항도’의 4단계 평가	43
〈표 2-23〉 17개 K-SDGs별 4단계 지표 평가 비율	45
〈표 2-24〉 17개 K-SDGs별 관리 필요 지표	51
〈표 3-1〉 K-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평가 개요	55

〈표 3-2〉 K-SDGs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평가 개요	65
〈표 3-3〉 K-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평가 개요	75
〈표 3-4〉 K-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평가 개요	92
〈표 3-5〉 K-SDGs 5 “성평등 보장” 평가 개요	112
〈표 3-6〉 K-SDGs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평가 개요	123
〈표 3-7〉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평가 개요	133
〈표 3-8〉 K-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평가 개요	140
〈표 3-9〉 K-SDGs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평가 개요	150
〈표 3-10〉 K-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평가 개요	157
〈표 3-11〉 K-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평가 개요	165
〈표 3-12〉 K-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 평가 개요	180
〈표 3-13〉 K-SDGs 13 “기후변화 대응” 평가 개요	197
〈표 3-14〉 K-SDGs 14 “해양생태계 보전” 평가 개요	203
〈표 3-15〉 K-SDGs 15 “육상생태계 보전” 평가 개요	212
〈표 3-16〉 K-SDGs 16 “인권·정의·평화” 평가 개요	222
〈표 3-17〉 K-SDGs 17 “지구촌 협력확대” 평가 개요	233
〈표 4-1〉 Coopman et al.(2016)의 SDGs 상호연계성 범주 및 유형	247
〈표 4-2〉 Nilsson et al.(2016)의 SDGs 상호작용 스케일링	247

## □ 그림 / 차 / 례 /

〈그림 1-1〉 17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3
〈그림 1-2〉 2020년 대한민국 SDG 지수 및 대시보드 .....	7
〈그림 1-3〉 세부목표별 대한민국 평균 목표 도달 거리 .....	7
〈그림 1-4〉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	10
〈그림 2-1〉 K-SDGs 비전체계도 .....	15
〈그림 2-2〉 2030목표치 설정 방식에 따른 K-SDGs 지표 구분 .....	40
〈그림 2-3〉 17개 목표별 모니터링 지표 개수 (총 197개) .....	42
〈그림 2-4〉 17개 목표별 목표순향도 평가 지표 수 (총 99개) .....	44
〈그림 2-5〉 17개 전체 K-SDGs 목표순향도 평가 결과 .....	48
〈그림 2-6〉 사회분야 전략 (K-SDGs 1, 2, 3, 4, 5, 10) 목표순향도 평가결과 (평가활용 지표 수 40) ·	49
〈그림 2-7〉 환경분야 전략3 (K-SDGs 6, 7, 13, 14, 15) 목표순향도 평가결과 (평가활용 지표 수 27) ·	50
〈그림 2-8〉 경제분야 전략3 (K-SDGs 8, 9, 11, 12) 목표순향도 평가결과 (평가활용 지표 수 27) ···	50

# 제1장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여건

- 제1절 국제 동향
- 제2절 국내 동향



## 제1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여건

### 제1절 국제 동향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 2030의제)가 채택되었다. UN 2030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사회·환경·경제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달성을 추구한다.



〈그림 1-1〉 17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p/index.do>)

UN 2030의제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232개의 지표 체계가 SDG 지표에 대한 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의 주도 하에 개발되었다. 2017년 3월 개최된 UN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의 제48차 회의에서 여러 지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합의 되었고, 2017년 7월의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SDG 지표 프레임워크에 나열된 전체 지표의 개수는 244개이나 9개 지표가 2-3개의 서로 다른 목표에서 중복되어 실제 지표 개수는 232개가 된다.

〈표 1-1〉 HLPF 연도별 국가자체평가보고서(VNR) 발간 국가

HLPF 연도	국가자체평가보고서 발간 국가
2016	대한민국, 노르웨이, 독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베네수엘라, 사모아, 스위스, 시에라리온, 에스토니아, 우간다, 이집트, 조지아, 중국, 콜롬비아, 터키, 토고,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2017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네팔, 덴마크,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나코,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냉,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라질, 사이프러스,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체코, 칠레, 카타르, 케냐, 코스타리카,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2018	그리스, 기니, 나미비아, 수단, 니제르, 도미니카 공화국,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리, 멕시코, 몰타, 바레인, 바하마, 베냉, 베트남, 부탄,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스리랑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이집트, 자메이카, 카보 베르데,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키리 바티, 토고,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폴란드, 헝가리, 호주
2019	가나, 가이아나,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동티모르, 레소토,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모리타니, 몽골, 바누아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시에라리온,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에스와티니, 영국, 오만,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채드,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콩고,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터키,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나우루, 뉴질랜드 (EN)

UN의 경제사회 이사회(ECOSOC<sup>2)</sup>)는 UN 2030 의제의 국제적 차원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2016)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6년의 HLPF는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보장 Ensuring that there is no one left behind’을 주제로 모든 SDG 목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17년의 HLPF는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빈곤 퇴치와 번영 증진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하여 SDG 1(빈곤 퇴치), SDG 2(기아 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5(성평등), SDG 9(사회 인프라), SDG 14(해양생태계)에 대해 점검하였다. 2018년 HLPF의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사회 전환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y’이었으며, 주요 점검 목표는 SDG 6(물과 위생), SDG 7(깨끗한 에너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5(육상 생태계), SDG 17(파트너십)이었다. HLPF 2019는

2)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역량 강화 및 포용성과 평등 보장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ity’을 주제로 SDG 4(양질의 교육),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0(불평등 완화), SDG 13(기후 변화 대응), SDG 16(평화, 정의와 제도), SDG 17(파트너십)을 집중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HLPF 2020에서는 “행동 촉진과 변혁의 길: 지난 1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과 이행”을 주제로 하였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모든 회의를 가상으로 개최하였는데, SDGs를 달성하고 진전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국제 사회가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UN 회원국들은 HLPF에서 국가자체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통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국가자체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확대된 43개국, 2018년에는 46개국, 2019년에는 47개국이 국가자체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가자체 평가보고서는 UN의 지속가능발전플랫폼<sup>3)</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N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2019년 보고서<sup>4)</sup>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표 1-2>와 같이 SDGs에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와 집단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였다.

2020년 보고서<sup>5)</sup>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추가 조명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글로벌 노동력의 절반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6억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으로 다시 밀려났다. 또한, 기존의 불평등과 불의를 드러내고 악화시켰다. 선진국에서 사망률은 소외된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노인, 아동, 장애인, 원주민, 이주민 및 난민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

UN의 공식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외에도 지표를 수집하여 각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관은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와 OECD이다. SDSN은 2012년부터 UN 사무총장의 후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자문 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주요 활동 중 하나는 SDG 지수를 정의하여

3) UN 지속가능발전플랫폼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검색일: 2020.06.15

4) 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5) U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표 1-2〉 2019년 UN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통해 본 현재 발전 분야 및 관심 필요 분야

발전 분야	관심 필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심한 빈곤 감소</li> <li>◦ 2000-2017 사이 5세 이하 사망률 49% 감소</li> <li>◦ 예방 접종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 구원</li> <li>◦ 세계 인구 대다수 전기 이용</li> <li>◦ 국가들의 지구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li> <li>◦ 2010년 이후 해양 보호 지역 두 배</li> <li>◦ 불법 어업 해결을 위한 협력</li> <li>◦ 파리 협정 비준한 186개국의 기여 방안 발표</li> <li>◦ 150개국의 급속한 도시화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개발</li> <li>◦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지원하는 300개 이상의 정책 및 도구를 71개국과 유럽 연합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 악화</li> <li>◦ 해수면 상승</li> <li>◦ 해양 산성화 가속</li> <li>◦ 지난 4년간 가장 높은 온도</li> <li>◦ 백만종 동식물 멸종 위기</li> <li>◦ 토지 황폐화의 미점검</li> <li>◦ 인간 고통 종식 및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에 대한 노력 부재</li> <li>◦ 박탈, 갈등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극심한 빈곤 종식을 위한 목표가 위태로워짐</li> <li>◦ 전 세계 기아 증가</li> <li>◦ 세계인구 절반 이상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li> <li>◦ 세계 어린이 절반 이상 읽기·수학 기준 미충족</li> <li>◦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28%만이 현금 혜택</li> <li>◦ 여성들의 구조적 불리함 및 차별 직면</li> </ul>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SDG 지수를 통해 평가, 순위를 산정하고 국가별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분석 대상 국가의 SDG 지수 및 대시보드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는 2016년 149개국, 2017년 157개국, 2018년 156개국, 2019년 162개국, 2020년 166개국이었다. SDG 지수는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나고, 해당 국가의 SDG 평균 달성도로 해석한다. 또한 OECD에서는 SDG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SDG 이행 수준을 평가한 바 있다. 2017년 13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9년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SDSN과 OECD의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이다.



## 제2절 국내 동향

〈표 1-3〉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구분	내용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법」</li> <li>- '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li> <li>- '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li> </ul>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li> <l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0조에 근거</li> <li>-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li> <li>- 2년 단위 이행 점검</li> </ul>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위원회</li> <li>- 소속: 환경부장관 ('00년 대통령소속 출범 → '10년 환경부장관소속 전환)</li> <li>- 구성: 본위원회 50인 이내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전문위원회</li> </ul>
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li> <li>◦ 이행계획 협의·조정</li> <li>◦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li> <li>◦ 의견 제시</li> <li>◦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li> <li>◦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 보급</li> <li>◦ 교육 및 홍보</li> <li>◦ 국내외 협력</li> <li>◦ 주요 정책 및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li> </ul>

우리나라는 2000년에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국내의 지속가능발전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표 1-4〉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추진경과

제 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	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p><b>제 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b></p> <p>비전: 21세기진전국가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현재·미래세대 공영번영)</p> <p>목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p> <p>4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7개 이행과제)</li> <li>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10개 이행과제)</li> <li>지속가능한 경제발전 (13개 이행과제)</li> <li>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5개 이행과제)</li> </ul> </p> <p>48개 이행과제</p> <p>평가 및 환류: 중앙 추진계획 성과점검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p> <p>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p>	<p><b>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b></p> <p>비전: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p> <p>목표: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 확보</p> <p>4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및 자원의 지가성 강화 (10개 이행과제)</li> <li>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6개 이행과제)</li> <li>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5개 이행과제)</li> <li>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4개 이행과제)</li> </ul> </p> <p>25개 이행과제</p> <p>평가 및 환류: 중앙 추진계획 성과점검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p> <p>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p>
<p><b>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0)</b></p> <p>비전: 건강한 국민사회,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포용적 혁신경제</p> <p>4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국토 환경 (10개 이행과제)</li> <li>통합된 민생 사회 (16개 이행과제)</li> <li>포용적 혁신 경제 (12개 이행과제)</li> <li>글로벌 책임 국가 (8개 이행과제)</li> </ul> </p> <p>14개전략</p> <p>평가환류: 국가지속가능성 평가</p> <p>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p>	<p><b>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b></p> <p>K-SDGs</p> <p>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p>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06년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발표하였고 2011년에는 1차 기본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기후변화대응, 환경자원 지

속성 측면을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은 4개 전략, 25개 이행과제, 48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었다. 2차 기본계획 만료 이후 2016년에는 UN 2030의제의 이행과 환경·사회·경제 간의 통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은 4개 전략, 14개 이행과제, 50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었는데, 2018년 12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체계로 변경되었다.



K-SDGs는 2016년의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의 변경계획으로, 기존의 계획이 UN 2030 의제의 SDGs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UN 2030 의제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행정부처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Top-down) 방식이 아닌, 초안 단계에서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한 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수립 과정에서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을 운영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환경 분야의 과제가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계획과 달리 사회분야와 경제분야의 세부목표를 확대하였다. 큰 틀에서는 UN SDGs를 따르되 세부목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현재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 아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214개 지표를 선정하여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선정하였다. 17개 SDGs는 UN의 SDGs와 동일하나 세부목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세부목표는 제외하고 우

리나라의 특수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는 추가하였다. UN SDGs에서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 근절, 여성할례 폐지 등이 있고, UN SDGs와 달리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다.<sup>6)</sup>

한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정석 외(2019)에 따르면,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지방의제 21에서 각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의제수립과 추진기구 구축은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모두 완료가 되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의제 수립이 약 89%, 추진기구 설치가 약 93.4% 완료되었다. 그러나 조직 구성형태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환경분야 중심인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로 기능하고 있어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로의 전환은 미흡한 상태이다. (김태현 외, 2017)

---

6) 환경부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018.12.24



## 제2장

###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상황 점검

- 제1절 K-SDGs의 구성
-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평가 결과
- 제3절 총평



## 제2장

##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상황 점검

## 제1절 K-SDGs 의 구성

## 1. K-SDGs 의 체계

K-SDGs 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으로 수립되어,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은 환경부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통해 공개한 K-SDGs 비전체계도이다.



〈그림 2-1〉 K-SDGs 비전체계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12.24)” p.4

〈표 2-1〉 UN SDGs 5P 원칙과 K-SDGs 5대 전략

UN SDGs 5P 원칙	K-SDGs 5대 전략
사람 (People)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지구환경 (Planet)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번영 (Prosperity)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평화 (Peace)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파트너십 (Partnership)	지구촌 협력

K-SDGs의 5대 전략은 UN SDG의 5P 원칙 (People: 사람, Planet: 지구환경, Prosperity: 번영, Peace: 평화, Partnership: 파트너십)에 대응한다. 〈표 4-1〉은 K-SDGs의 5대 전략을 UN SDGs의 5P 원칙에 대응한 것이다. 목표 단계에서는 K-SDGs가 UN SDGs와 동일한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목표 단계에서는 야외배변 근절이나 여성 할레 폐지와 같이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되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UN SDGs의 세부목표는 삭제하고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등과 같은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목표가 추가되어 있다. K-SDGs의 세부목표 개수는 총 122개인데, UN SDGs의 169개 세부목표에서 14개 신규 목표 추가, 33개 세부목표 통합, 28개의 세부목표는 삭제한 결과이다.

## 2.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구성



〈표 2-2〉 K-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4	지표 8(UN 대비 신규 5)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신규)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신규)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가입유형별, 성별)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신규)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지출항목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신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 EITC : 근로장려세제 CTC : 자녀장려세제



〈표 2-3〉 K-SDGs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1(UN 대비 신규 7)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신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신규) 농가소득(천원) ○ (신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 발토양 산도(pH) ○ (신규)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 (신규)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천건) ○ (신규) 토종종자 확보 수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신규)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표 2-4〉 K-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9(신규 3)	지표 18(UN 대비 신규 9)
3-1	(신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 보장을 확대한다.	○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15~64세 인구)
		○ (신규) 당뇨병 조절률(%)
		○ 성인 남성 흡연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 (신규)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l$ )
		○ (신규)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신생아사망률(%)
		○ (신규)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 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신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번호	세부목표 9(신규 3)	지표 18(UN 대비 신규 9)
3-8	(신규)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치매안심센터 개소</li> <li>○ (신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li> <li>○ (신규) 노인 일자리</li> </ul>
3-9	(신규)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공공 병상 수</li> </ul>



〈표 2-5〉 K-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UN 대비 신규 6)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li> <li>○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li> </ul>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li> <li>○ (신규)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li> <li>○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li> <li>○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li> </ul>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li> <li>○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li> <li>○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li> </ul>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 참여율(%)</li> <li>○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li> </ul>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UN 대비 신규 6)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 도입
		○ 취학률(%)
		○ 학업중단율(%)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 청소년·성인 문해율(%)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학교 내진보강률(%)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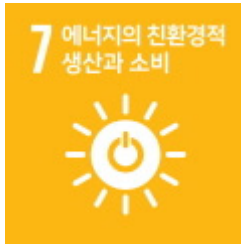
〈표 2-6〉 K-SDGs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UN 대비 신규 1)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신규) 공학계 여학생 비율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표 2-7〉 K-SDGs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7(신규 3)	지표 14(UN 대비 신규 12)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신규) 전국 상수도 보급률(%)
		○ (신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2	(신규)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6-3	(신규)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신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신규) 수질등급달성률(%) ※ BOD 기준
		○ (신규)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 (신규)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도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신규) 상수도 누수율(%)
		○ (신규) 물공급 안전율(%)
		○ (신규)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6-5	(신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신규) 목표수질 달성률(%) ※ 목표수질 달성지점/목표수질 설정지점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생태하천 복원율(%) ※ 복원구간/복원목표 구간
		○ (신규) 수질 ‘ 좋음 ’ 등급 비율(%)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표 2-8〉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4(신규 1)	지표 7(UN 대비 신규 5)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만호)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 (신규)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m <sup>2</sup> ·년)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 오염을 최소화 한다.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 (신규) 친환경버스 확대 수



〈표 2-9〉 K-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11(UN 대비 신규 4)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물질 발자국
		○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여성고용률(%)
		○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신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 (신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신규) 사고사망만인율(%)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표 2-10〉 K-SDGs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5(신규 1)	지표 8(UN 대비 신규 4)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로 보급률(km/천명) ※ 도로연장km/인구천명 ○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3	(신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신규)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신규) 국내 자원생산성(GDP /DMC), 자원강도(DMC/ GDP)



〈표 2-11〉 K-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0(UN 대비 신규 7)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text{가구소득} / \sqrt{n}$ (n : 가구원수)
		○ (신규) 소득격차비율(%)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신규) 소득 5분위 배율
		○ 인구집단별 빈곤율(%) (노인빈곤율) ○ (신규)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 (55세 이상 고용률)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신규) GDP 대비 가계소득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신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 (신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표 2-12〉 K-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9(UN 대비 신규 9)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
		○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신규)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9(UN 대비 신규 9)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나쁨일수</li> <li>○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GDP 10 억원)</li> </ul>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도시공원 면적(m<sup>2</sup>)</li> <li>○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li> <li>○ 보도면적 비율</li> <li>○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li> </ul>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li> </ul>



〈표 2-13〉 K-SDGs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11(신규 3)	지표 20(UN 대비 신규 12)
12-1	(신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신규)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 계획 수립 건수(건)
		○ (신규)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물질발자국
		○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식품 손실 지표
		○ (신규) 식품 폐기물 지표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신규)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 (신규)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신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 (신규)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12-8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신규)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신규)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번호	세부목표 11(신규 3)	지표 20(UN 대비 신규 12)
12-9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신규) 탄소생태발자국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표 2-14〉 K-SDGs 13 “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4(신규 1)	지표 6(UN 대비 신규 6)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신규)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13-4	(신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신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 <sub>2</sub> )



〈표 2-15〉 K-SDGs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4(UN 대비 신규 8)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 (신규)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 (신규) 갯벌복원면적(km <sup>2</sup> )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 TAC : 총허용어획량
		○ TAC 대상 어종수(어종)
		○ (신규) 감척어선 수(건)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신규) 어가 소득(백만원)
		○ (신규)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만원)



〈표 2-16〉 K-SDGs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8(신규 1)	지표 13(UN 대비 신규 4)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신규) 산녹색보호지수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국가산림경영지표 확장(건)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신규)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15-8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 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신규)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 (신규) 도심/생활권 복원(ha)



〈표 2-17〉 K-SDGs 16 “인권·정의·평화”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13(신규 1)	지표 14(UN 대비 신규 14)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계속)

번호	세부목표 13(신규 1)	지표 14(UN 대비 신규 14)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 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16-13	(신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표 2-18〉 K-SDGs 17 “지구촌 협력확대”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UN 대비 신규 9)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 GNI 대비 ODA 비율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 (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K-SDGs 의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는 총 214개이다. 214개의 지표는 4개의 세부목표를 제외한 118개의 세부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표는 하나의 세부목표와 관련되나, 4개의 지표가 두 개의 세부목표와 관련된 중복 지표이다. 두 개의 세부목표와 관련된 중복 지표 목록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2개의 세부목표와 관련된 중복지표

지표	관련 K-SDGs 세부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친환경차 확대 수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국내 자원소비량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물질 발자국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세부목표 특성상 지표를 설정할 수 없는 세부목표들이 있다. 현 K-SDGs 구성에서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세부목표는 아래 <표 2-20>와 같다.

<표 2-20> 지표가 없는 K-SDGs 세부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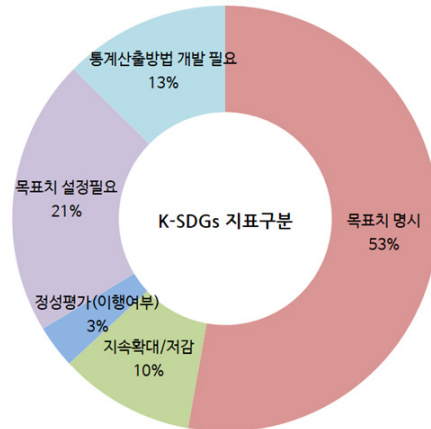
K-SDGs 세부목표	비고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 확정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17-5.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전체 214개 지표 중에서, 2030 목표치가 있는 지표는 140개(65.42%),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지표는 45개(21.02%), 통계산출방법 개발이 필요한 지표는 27개(12.62%), 기타 지표는 2개(0.93%)이다. 기타 지표 2개 중 하나는 “세부목표 4-1.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의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 결과 산출’과 “세부목표 16-6.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의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 지지도/만족도 평가 결과’로, 2030 목표가 ‘결과 반영’으로 되어있다.

전체 214개 지표 중에서, 목표치가 명시된 지표 113개(53%), 목표 방향만 ‘지속확대’ 또는 ‘지속저감’으로 명시된 지표 22개(10%), 이행여부만을 판단하는 정성평가 지표 7개(3%)가 2030 목표치가 제공되어 있으며,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지표 45개(21%), 통계산출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지표 27개(13%)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정성평가 지표는 세부목표 4-7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교육 정책 이행’,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세부목표 12-1의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세부목표 16-8의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취득제도 수립’, 세부목표 16-11의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위원회 권고안 이행’, 세부목표 16-12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이다.

목표치 설정 구분	개수(비율)
목표치 명시	113(53%)
지속확대/지속저감	22(10%)
정성평가	7(3%)
목표치 설정 필요	45(21%)
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	27(13%)



〈그림 2-2〉 2030목표치 설정 방식에 따른 K-SDGs 지표 구분

##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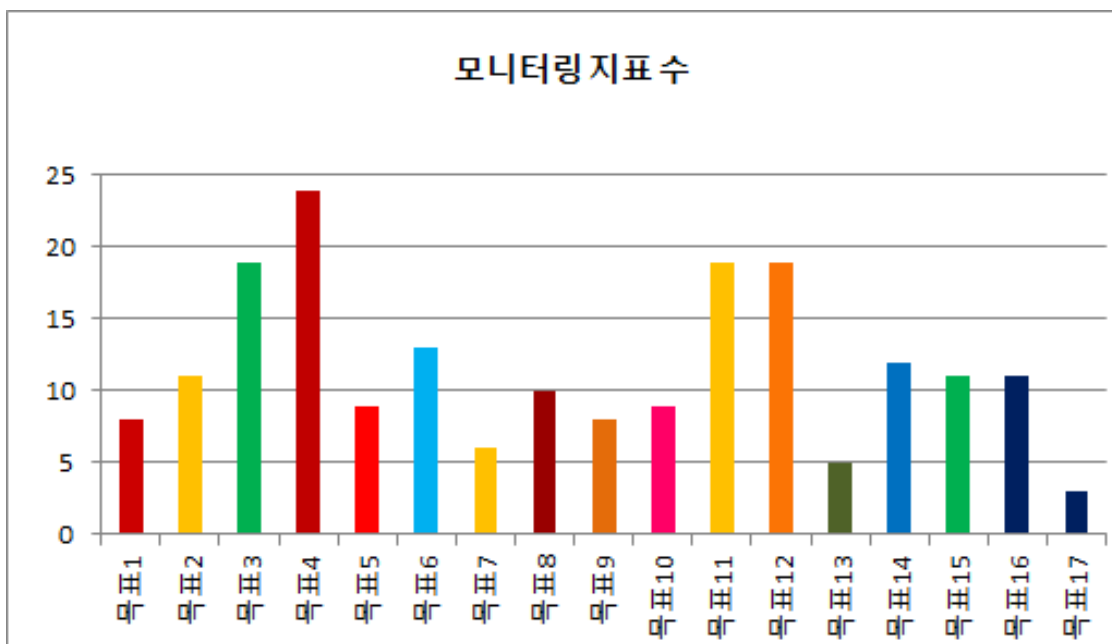
### 1. 자료 구성

K-SDGs 지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이루기 위해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되어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로부터 산출하는 것이 아닌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발행한 공식 통계자료로 산출하는 지표만을 이용해 평가를 수행하였고, 공개 가능한 부처 내부 자료 등 참고통계를 추가 수록하였다. 각 목표별로 수립되어 있는 전체 지표의 수가 서로 다른 만큼 평가가 가능한 지표수도 상이하다. 또한 공식 통계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평가에 사용하기 곤란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1번 목표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로 나아가는 것이 “빈곤 감소”의 목표에 맞는 방향이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것이 국가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므로 최근의 추세가 국가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예로 11번 목표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2030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정성지표가 7개 있는데, K-SDGs가 수립된 지 초기일 뿐 아니라 다음 절에서 소개할 4단계 정량 평가 방법에 상응하는 평가를 적용할 수 없어 본 보고서 평가에는 제외하였다. 다만 정성평가 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제3장에서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모니터링한 지표의 총 개수는 197개이고, 이중 국가 공인 승인 통계를 활용해 4단계 평가를 진행한 지표는 99개이다. 17개 목표별 평가 가능 지표수는 <표 2-21>, <그림 2-3>과 같다.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13개의 지표가 평가 가능한 지표수가 가장 많았고, 목표 4 “교육 증진”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목표 10 “불평등 해소”,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는 2개의 지표만 평가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10번 K-SDGs “불평등 해소”의 경우 국가 공인 통계가 아닌 통계까지 활용하면 활용 지표수를 크게 늘릴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21〉 17개 K-SDGs별 모니터링 지표 수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6	목표7	목표8	목표9
8	11	19	24	9	13	6	10	8
목표10	목표11	목표12	목표13	목표14	목표15	목표16	목표17	계
9	19	19	5	12	11	11	3	197







〈그림 2-3〉 17개 목표별 모니터링 지표 개수 (총 197개)

## 2. 평가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승인 통계가 있는 99개 지표에 대해서는 <표 2-22>와 같이 ‘맑음 ☀️’, ‘맑거나 흐림 ☀️☁️’, ‘흐림 ☁️’, ‘뇌우 ⚡️’의 4단계로 각 지표를 평가하였다. 맑음에서 뇌우로 갈수록 지속가능성이 좋지 못함을 뜻한다. 본 보고서의 4단계 평가는 이번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가 K-SDGs 수립 이후의 첫 평가임을 감안하여 ‘2030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30 목표를 향해 현재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인 ‘2030 목표를 향해 현재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목표순향도**라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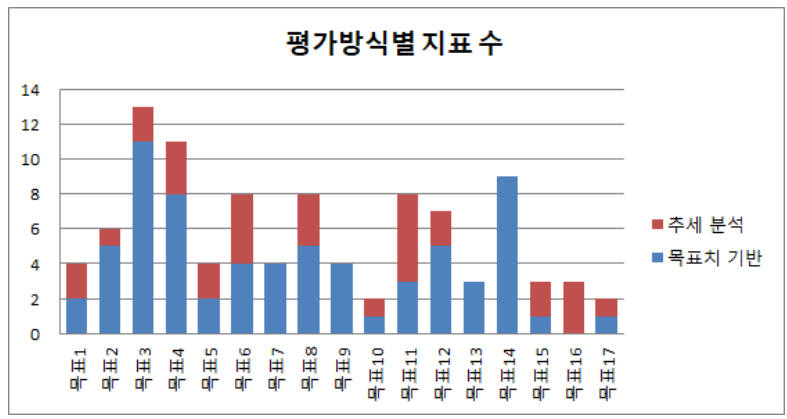
<표 2-22>국가 지속가능성 ‘목표순향도’의 4단계 평가

평가 의미	날씨 표현
최근 5년간의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목표 방향만 있는 경우 장·단기 추세 모두 목표방향 진행)	
목표 방향으로 진행중이나 현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불가 (목표 방향만 있는 경우 장기정체, 단기적으로 목표방향 진행)	
정체 상태	
최근 5년간 목표 반대방향으로 진행	

어떤 지표의 목표순향도가 ‘맑음☀️’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최근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 2030 목표 달성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표의 현재 수준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목표 7과 13에서 공통지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표 2-22>의 평가 원칙에 의거하면 ‘맑음☀️’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사이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목표로 잡고 있는 20% 발전 비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평가가 가능한 K-SDGs 지표들은 여기서 다시 2030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는 지표, 목표 방향만 명시되어있는 지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는 지표는 2018년 기준 5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혹은 연평균감소율)이 2030년까지 요구되는 연평균증가율보다 높은지를 판단하여 평가하였다. 5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이 요구되는 연평균증가율의 95% 이상이면 목표순향도를 ‘맑음☀️’ 평가하고, 5%부터 95% 사이에 있으면 목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2030 도달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맑거나 흐림☁️’으로 평가하였다. ‘흐림☁️’은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을 때의 평가이며, ‘뇌우⚡️’는 목표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의 평가이다. 목표 방향만 있는 경우에는 OECD의 추세분석 방법론<sup>7)</sup>을 이용하여 추세만으로 4단계 평가하였다. 장기(10년)추세와 단기(5년) 추세가 목표 추세를 만족할 경우 ‘맑음☀️’, 단기 추세만 만족할 경우 ‘맑거나 흐림☁️’을 할당하고, ‘흐림☁️’ 및 ‘뇌우⚡️’는 마찬가지로 정체상태 혹은 목표 반대방향 진행에 할당하였다. <그림 2-4>는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17개 각 목표별로 목표순향도 평가를 수행한 지표수를 평가방식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지표 중 목표 방향은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추세분석 시행 후 정체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면 ‘흐림☁️’,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일 경우 평가 보류하였다. (예,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4단계평가는 보류 )

















<그림 2-4> 17개 목표별 목표순향도 평가 지표 수 (총 99개)












7) 연도-지표값의 스피어만Spearman 상관계수를 유의수준 10%로 검정

### 3. 목표별 평가 결과

17개 K-SDGs별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목표순항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2-23>과 같다. <표 2-23>의 숫자는 해당 범주에 할당된 지표의 수를 나타내고, 괄호 안 백분율은 해당 목표에서 국가 공인 승인 통계가 있어 4단계 평가가 가능한 지표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2-23> 17개 K-SDGs별 4단계 지표 평가 비율

K-SDG 목표					승인통계이용 평가활용률
 1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1 (25%)	1 (25%)	2 (50%)	0 (0%)	4/8 50%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4(67%)	0 (0%)	2 (33%)	0(0%)	6/11 54.5%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3 (23.0%)	6 (46.15%)	3 (15%)	1 (7.6%)	13/18 72.2%
 4 포용적 평등한 교육	5 (50%)	3 (25%)	2 (16.7%)	1 (8.3%)	11/27 44.4%
 5 성평등 보장	2 (50%)	1 (25%)	1 (25%)	0 (0%)	4/9 44.4%
 6 건강하고 깨끗한 물관리	4 (50%)	2 (12.5%)	1 (25%)	1 (12.5%)	8/14 57.14%
 7 에너지의 전환 공정하고	1 (25%)	3 (75%)	0 (0%)	0 (0%)	4/7 57.1%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3 (37.5%)	2 (25%)	2 (25%)	1 (12.5%)	8/11 72.7%
 9 산업혁신과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3 (75%)	0 (0%)	1 (25%)	0 (0%)	4/8 50%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0 (0%)	0 (0%)	2 (100%)	0 (0%)	2/10 20%

K-SDG 목표					승인통계이용 평가활용률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4 (50%)	1 (12.5%)	3 (37.5%)	0 (0%)	8/19 42.1%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3 (42.9%)	1 (14.3%)	1 (14.3%)	2 (28.6%)	7/20 35%
 13 기후변화 대응	1 (33.3%)	1 (33.3%)	0 (0%)	1 (33.3%)	3/6 50%
 14 해양생태계 보전	7 (78%)	0 (0%)	2 (22.2%)	0 (0%)	9/14 64.3%
 15 육상생태계 보전	1 (33.3%)	0 (0%)	1 (33.3%)	1 (33.3%)	3/13 23.1%
 16 인권, 정의, 평화	2 (66.6%)	0 (0%)	1 (33.3%)	0 (0%)	3/14 21.4%
 17 지구촌 협력	0 (0%)	0 (0%)	1 (50%)	1 (50%)	2/9 22.2%

※ 표 해석시 유의점

◦ 각 목표의 결과는 서로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표 2-23>의 결과를 이용하여 K-SDGs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K-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보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K-SDGs 지표는 수립 당시에 평가를 전제하지 않고 각 목표별로 독립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목표별로 지표 구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사회 분야 지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부족하여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환경 분야의 ‘상수도 보급량’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달성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분야를 대표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지표이다. 목표간 지표 구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표 2-23>을 근거로 지속가능성 순위를 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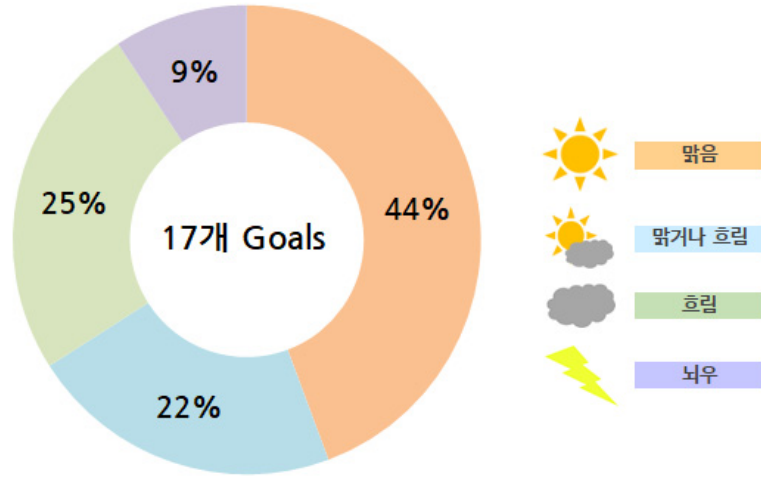
#### 4. 「2020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차이

「2018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18년에 작성되어 K-SDGs 수립 이전으로 84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는 2012년 대비 2016년 데이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단순 증감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84개 중 지표의 평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7개 지표(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멸종위기 종 수,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수, 소비자물가지수, 조세부담률)와 중간에 통계산출방법이 달라진 지표 1개(유소년전염병 예방주사)를 제외하고 76개의 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였고, 극히 일부의 지표만 달성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어 OECD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상의 50개 이행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평가하였는데, 2018 보고서에서 평가한 성과지표들은 정부 행정 부처가 세부과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설정하게 되므로 높은 달성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국가 승인통계로서 목표순향도 평가가 가능한 99개 지표에 대해 4단계 날씨평가를 수행하였다. 4단계 날씨평가는 2018 보고서처럼 단순히 5년 전 지표값 대비 증감만을 판단하지 않고 2030 목표치를 고려하여 지표의 현재 성장률이 2030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를 판단하였다. 2030 목표치가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OECD(2019)의 추세분석 방법과 같은 방법(연도-지표 값의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사용하여 지표의 장·단기 추세를 판단한 후, 이에 기반을 두어 4단계 날씨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용한 지표 혹은 대체지표가 아직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배경, 관련 제도 및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 제3절 총평

모니터링을 진행한 197개 지표 중 승인통계가 있어 4단계 평가가 가능한 99개 지표 중에서 42개(44%) 지표가 ‘맑음☀️’, 21개(22%) 지표가 ‘맑거나 흐림☁️’, 25개(25%) 지표가 ‘흐림☁️’, 9개(9%)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그림 2-5〉 17개 전체 K-SDGs 목표순항도 평가 결과

사회 분야의 K-SDGs 전략인 “전략1.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표용사회 구현”은 “목표 1.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 4. 모두가 누리는 교육 증진”, “목표 5. 함께하는 성평등 보장”, “목표 10. 소외 없는 사회를 위한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다. 전략 1에서는 총 40개의 지표가 평가되었으며, 15개(40%) 지표가 ‘맑음☀️’, 11개(27%) 지표가 ‘맑거나 흐림☁️’, 12개(28%) 지표가 ‘흐림☁️’, 2개(5%)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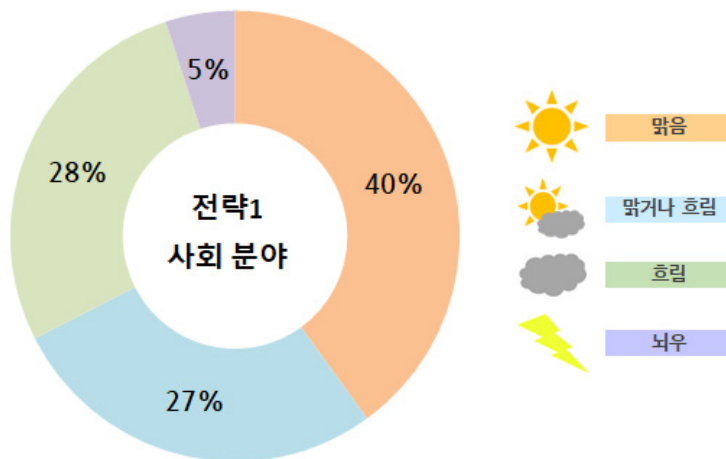
환경 분야의 K-SDGs 전략인 “전략 2.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은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 2에서는 총 27개의 지표를 목표순항도 평가에 활용하였다. 14개(52%) 지표가 ‘맑음☀️’, 6개(22%) 지표가 ‘맑거나 흐림☁️’, 4개(15%) 지표가 ‘흐림☁️’, 3개(11%)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경제 분야의 K-SDGs 전략인 “전략3.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을 포함하는 K-SDGs 목표는 “목표 8.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R&D 확대”, “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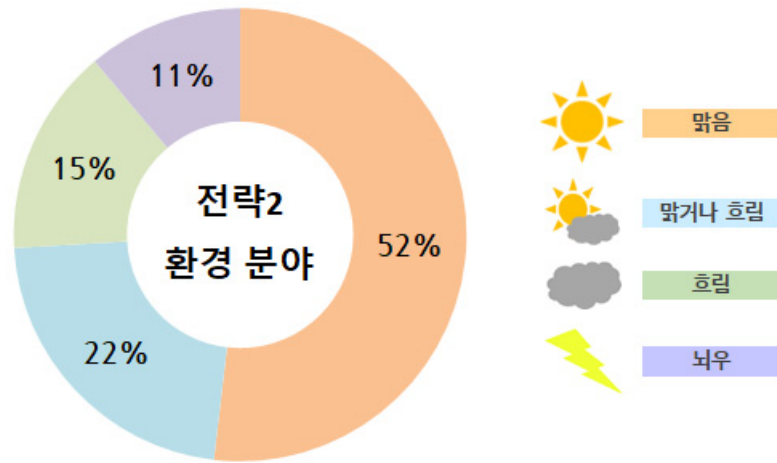
증진”이다. 평가에 활용한 총 지표 수 27개이며, 13개(48%) 지표가 ‘맑음☀️’, 4개(15%) 지표가 ‘맑거나 흐림☁️’, 7개(26%) 지표가 ‘흐림☁️’, 3개(11%) 지표가 ‘뇌우⚡️’로 평가되었다.

“전략 4.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구축”과 “전략 5. 지구촌 협력”은 각각 K-SDGs 16, 17만을 포함한다. 평가 활용 지표 개수도 각각 3개와 2개로 매우 적다. 전략 4, 즉 K-SDGs 16 “인권·정의·평화”의 목표순향도 평가 결과는 ‘맑음☀️’ 2개(‘5대 범죄 검거율’, ‘아동학대 발견율’), ‘흐림☁️’ 1개(‘국가청렴지수’)이며, 전략 5, 즉 K-SDGs 17 “지구촌 협력 강화”의 목표순향도 평가 결과는 ‘흐림☁️’ 1개(‘GNI 대비 ODI 비율’), ‘뇌우⚡️’ 1개(‘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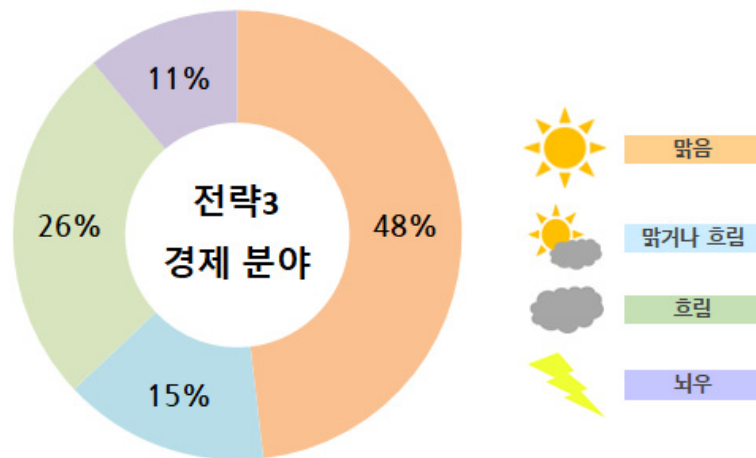
사회·환경·경제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의 목표순향도 ‘맑음☀️’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우⚡️’ 비율은 환경·경제 분야가 비슷하고 사회 분야가 가장 낮았다. 2030 목표를 향한 올바른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지표의 비율은 ‘맑음☀️’비율과 ‘맑거나 흐림☁️’의 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분야 67.5%, 환경분야 74%, 경제분야 63%로 나타났다.



〈그림 2-6〉 사회분야 전략 (K-SDGs 1, 2, 3, 4, 5, 10)  
 목표순향도 평가결과 (평가활용 지표 수 40)



〈그림 2-7〉 환경분야 전략3 (K-SDGs 6, 7, 13, 14, 15)  
 목표순항도 평가결과 (평가활용 지표 수 27)




〈그림 2-8〉 경제분야 전략3 (K-SDGs 8, 9, 11, 12)  
 목표순항도 평가결과 (평가활용 지표 수 27)

〈표 2-24〉는 각 K-SDGs 목표에서 목표순항도가 ‘흐림 ☁’, 혹은 ‘뇌우 ⚡’로 판정되어 소관부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상술하였듯, ‘맑음 ☀’이나 ‘맑거나 흐림 ☀☁’의 평가는 지표의 현재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추세에 대한 평가일 뿐이므로 〈표 2-24〉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2-24〉의 지표는 각 분야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때의 참고사항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표 2-24〉 17개 K-SDGs별 관리 필요 지표

K-SDG 목표	☁	⚡
	○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 공공 병상 수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 학업중단율(%) (다문화학생)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인구집단별 고용률(%) (55세 이상 고용률) ○ GDP 대비 가계소득	

K-SDG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li> <li>○ 대중교통 수단분담률(%)</li> <li>○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폐기물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li> <li>○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C 대상 어종 수</li> <li>○ 정부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렵밀거래 단속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청렴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NI 대비 ODA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li> </ul>

## 제3장

#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지표 평가





## 제1장

##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제1절 개요

〈표 3-1〉 K-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 로 줄인다.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정량평가 보류. 방향성 설정 필요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실업급여 순수소득 대체율	-	참고통계 제공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sup>8)</sup> (가입유형별, 성별)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 다.	○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지출항목별)	-	참고통계 제공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 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 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 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 EITC : 근로장려세제 CTC : 자녀장려세제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8)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명확한 정의 및 가용 통계를 활용할 수 없어 ‘국민연금보험 가입률’로 대체하여 평가 수행

K-SDGs 1번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모든 곳에서의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목표로 4개 세부 목표와 관련된 총 8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중위 가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가계 직접 본인부담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총 5개 지표가 국가 공식 통계에서 가용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빈곤 감소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 복지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것이 국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등 목표 방향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목표순향도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였다.

날씨 평가를 수행한 4개 지표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30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어 최근 5년 연평균성장률이 2030 목표에 충분한지를 계산하여 목표순향도를 평가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지속 확대하는 것이 2030 목표로 명시되어 있어 추세분석을 통해 목표순향도를 평가하였다. ‘가계직접 본인부담률’의 경우 K-SDGs 목표치 설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지표이나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현재의 장·단기 추세가 정체 상태에 있어 목표순향도를 ‘흐림’으로 평가하였다.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식 통계는 없으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 을)이 OECD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이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고,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 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sup>9)</sup>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지출항목별)’은 지출항목별 통계는 통계산출방법 개발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나, 통계청 KOSIS에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에 대한 전체 통계<sup>10)</sup>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18년 기준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하위 수준이다.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는 먼저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를 의미하는지, ‘중앙정부 통합재

9) 서형수 전 의원 블로그, “[190123 보도자료]재취업 어려운데...실업급여는 부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soo2016&logNo=221448839976&categoryNo=28>

10) KOSIS “공공사회 복지 지출(OECD)”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D21\\_OECD](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D21_OECD)

정 규모'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EITC+CTC 지출 규모'는 주소지별 합계인지, 혹은 성별·가구유형별·연령별·부양자녀 인원별 합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EITC+CTC 주소지별 합계)/(중앙 정부 총 지출)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 지출 규모'를 계산하였는데, 2017년까지는 근소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8년 1.56%로 크게 증가하였다.

### 관련 정책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관련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미만 소득 가구에 생계비 지원, 2009년부터 근로 저소득층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장학금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의료 직접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2018년부터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하였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제2절 가용 지표 목록

### 세부목표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 중위가처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8.2	17.5	17.6	17.3	16.7	12.5	

지표 정의:  $\frac{\text{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원수}}{\text{표본선정가구원수}} \times 100(\%)$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고:

-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연평균성장률로는 2030 목표인 12.5%를 달성할 수 없음

####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추정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	-	803,385	808,575	822,417	837,310	증가 추세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	-	879,597	880,356	885,964	1,027,572	증가 추세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의료급여 수급자 수	-	1,343,775	1,319,780	1,302,248	1,306,568	방향성 없음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급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선정된 급여 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3%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비고: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를 말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수선유지금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를 의미함.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필요 금액을 지원받는 가구를 말함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감소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2030까지의 목표 방향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가 보류함

**세부목표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5.0	36.4	37.0	37.5	38.0	36.8	36.6	37.4	37.3	36.2	목표치 설정 필요	

지표 정의: 100-건강보험보장률

$$\text{건강보험보장률} = \frac{\text{건강보험급여비}}{\text{건강보험급여비} + \text{법정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본인부담금}} \times 1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고:

- 우리나라의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 현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10년 장기 추세, 5년 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음
-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로는 2030까지 유의미한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체 상태로 최종 평가

◦ (참고) OECD 제공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실직 후 2개월 시점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55	55	55	55	56	56	57	59	62	-
EU	71	72	71	69	69	69	69	69	69	-
OECD	68	69	69	68	68	68	67	68	68	-

**실직 후 12개월 시점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23	23	23	22	23	23	32	33	32	-
EU	56	57	56	54	53	52	53	53	55	-
OECD	56	57	54	52	52	50	51	51	51	-

지표 정의:  $\frac{\text{실직 후 순소득}}{\text{실업 전 순소득}} \times 100$

- 22세 이후 지속적인 고용 기록이 있는 40세 구직자 기준 계산
- 실업 전 순소득은 현금 소득과 근로자가 지급하는 소득세 및 사회 보장 의무 부담금 고려.  
실업급여에는 실업 보험 및 실업 부조 포함. 가족 수당은 포함하고 퇴직금 수령액은 제외

자료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비고:

- 순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NRR)는 가구 단위에서 한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유인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임. 사회보장급여의 충분성을 측정하는 지표

- 현 K-SDGs 지표의 정의는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이며 OECD 관련 지표명은 ‘실업 상태에서의 순소득 대체율’로 개념상 포괄되는 변수 및 정의의 범위에 차이 있음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직 후 5년 평균이 OECD 국가 평균 28%보다 낮은 10% 기록. 또한,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
-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보장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기 때문에 실직 후 2개월이 된 시점과 12개월 이후 시점 사이의 NRR 격차가 큼.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OECD 및 EU 가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

#### ◦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률(%)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8.0	80.3	82.1	82.9	83.5	84.4	85.9	-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text{국민연금에 가입한 임금노동자수}}{\text{전체 임금노동자수}} \times 100$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고:

- K-SDGs의 지표 정의는 ‘국민연금 납부율’이나 정의 및 산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을 대체지표로 하여 평가 수행
- 자료 가용한 2011년부터 2017년 자료를 기반으로 추세분석 수행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7년) 추세, 2013년부터 2017년(5년) 추세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목표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 (참고)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9.7	10.2	10.5	10.6	11.1
스웨덴	26.8	26.3	26.4	26.1	26.1
덴마크	28.8	29.0	28.7	28.1	28.0
프랑스	32.2	32.0	32.0	31.8	31.2
영국	21.9	21.6	21.2	20.8	20.6
네덜란드	18.1	17.7	17.5	17.0	16.7
일본	21.9	21.9	-	-	-
미국	18.8	18.8	18.9	18.9	18.7

출처: KOSIS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 (원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01.)

비고: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 공표(2019.1월)된 결과이고, 이후 자료는 잠정치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6%의 절반 수준을 기록
- 현재 KOSIS에서 공시하는 산출 값은 가족 공공지출, 공공 및 개인 사회적 지출, 무능력 관련 공공지출, 노인 및 최빈층 공공지출의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4	-	5.4	5.9	5.7	4.6	

지표 정의: 주택법에 의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설비, 환경 등을 만족하지 않는 주거지에 사는 가구 수와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비고:

-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정해놓은 지표로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됨
-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까지는 2년 단위 조사 통계임. 5년간의 평균 감소율을 유지하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세부목표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참고) 근로 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 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근로장려금 EITC	1,056,562	1,057,397	1,196,707	1,338,096	4,300,342
자녀장려금 CTC	657,398	570,023	465,740	403,287	627,847
합계 EITC+CTC	1,714,460	1,627,420	1,760,377	1,829,802	5,027,654

출처: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연보

비고:

- EITC, CTC 지출 합계금액을 해당 년도의 정부예산 금액으로 나누면 K-SDGs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표인 “정부 예산 대비 근로 빈곤층 대상 재정사업의 지출 규모”에 부합

-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EITC+CTC 지출 합계)/(중앙 정부 총 지출) 값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표값	0.66	0.63	0.70	0.68	1.10

-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크게 증가하였음
-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에 대한 정의 및 ‘EITC+CTC 지출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를 의미하는지,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EITC+CTC 지출 규모’는 주소지별 합계인지, 혹은 성별·가구유형별·연령별·부양자녀인원별 합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함
- 2019년부터 EITC 반기 지급 규모 도입. 2020년 기준 반기 EITC는 지금까지 2019년 12월, 2020년 6월 총 2회 지급
- 국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신뢰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2030 목표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제2장

## 목표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제1절 개요

〈표 3-2〉 K-SDGs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가소득(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g/kg)	-	참고통계 제공
		○ 발토양 산도(pH)		
		○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	프로그램 소개
		○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	참고통계 제공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종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천건)	-	참고통계 제공
		○ 토종종자 확보 수	-	참고통계 제공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K-SDGs 2번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은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다. 5개 세부 목표와 관련된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통계로 날씨 평가가 가능한 지표는 총 6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소득’이 2030 목표치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의 경우, FAO<sup>11)</sup> 기준에 따르면 정부양곡 적정재고량은 쌀 연간소비량의 17-18% 수준인 80만 톤이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80만 톤 이상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및 ‘밭 토양 산도’의 전국 평균값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www.ndsl.kr)에서 서비스하는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논토양 유기물 함량과 밭토양 산도’는 적정 범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농경지의 인산이나 칼슘 같은 양분상태는 적정함량보다 과다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토양개선을 위한 적정한 비료사용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는 국가공인 통계 자료는 아니나 농촌진흥청 자체 자료에 따르면 내병·충성, 내한성 등 기후변화 대응 특성에 따라 식량작물 10작물 128종, 원예작물 16작물 81품종, 특용작물 5작물 22품종, 사료작물 3작물 35품종 등 총 34작물 266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병·충성, 내재해성을 갖춘 식량작물과 원예작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 대상지 20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확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유전자원 서비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현재 총 1,599종, 237,043 자료의 식물이 종자유전자원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 중 식량자원은 275종 178,797자원, 원예자원은 525종 30,759자원, 특용작물은 346종 23,759자원, 기타작물은 453종 3,608자원

1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다. 현재 K-SDGs 지표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가축유전자원 점 수’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현재 토종자원 및 국내육성품종인 소, 돼지, 닭, 염소, 사슴, 메추리 등 총 6축종 21품종 59,540개체이다. 축종별로는 소 2품종 5,295두, 돼지 8품종 15,825두, 닭 6품종 35,403수, 염소 1품종 1,378두, 사슴 3품종 329두, 메추리 1품종 1,310수이다.

토종종자는 농업유전자원 서비스 시스템 종합포털<sup>12)</sup>에서 국내 야생종, 야생근연종, 재래종, 잡초형 자원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 관련 정책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등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도입하여 인증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한 후 결과공표 및 인증기관 관리에 활용 중에 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책금융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서비스를 통해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비료량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작물 재배 적지, 농경지 화학성, 토양특성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과부하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실행한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sup>13)</sup>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을 도모하고자 농업유전자원 서비스 시스템 종합포털을 개발하여 농업유전자원 보존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총 81개의 지자체 및 대학·민간연구소가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 <http://genebank.rda.go.kr>

13) 농식품부 보도자료(2020.01.0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되어 있다. 가축 유전자원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축유전자원 보존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총 12개의 지자체 및 대학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 세부목표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0.6	88.1	88.2	82.1	82.1	84.9	84.4	89.2	88.2	88.5	지속 확대	

지표 정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영양조사에서,

("우리 식구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식구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소득수준 하위가구 수)/(조사대상 소득수준 하위가구 수)×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고:

- 전체 가구 중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다양한 양의 식품을 확보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 소득 수준은 통계청의 기준인 5분위 기준을 따름
- 추세분석 결과 10년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5년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관측할 수 없었음. 단기 추세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평가 기준에 의해 '흐림' 평가

## 세부목표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 농가 평균 소득 (농업외소득)(천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4,799	14,939	15,252	16,269	16,952	18,516	

지표 정의: 농가의 평균 농업외소득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비고:

- 농가 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분
- 2018년 기준 농가 소득 중 농업외소득 40.3%, 농업소득 30.7%, 이전소득 23.5%, 비경상 소득 5.5%의 비중으로 구성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주어진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실질적인 농가 혹은 농업소득의 증대로 연결시켜야 함. 농가의 농업외소득이 안정되어야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 구축 가능
- 5년간의 연평균상승률이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6.1	21.5	27.4	29.7	33.1	45	

출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요 지표<sup>14)</sup>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비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1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실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 주요지표  
<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133&menuId=5365>  
 검색일: 2020.07.16

- 을 위한 제도연구, 사업관리·점검 등 정책금융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5년간의 연평균상승률이면 2030 목표인 45% 달성 가능

**세부목표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93	4.47	4.84	4.94	4.92	10	

지표 정의: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전체 경지면적)

출처: 농산물품질 관리원(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통계청(전체 경지면적)

비고:


-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등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인증관리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음. 2017년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도입함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은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까지 감소한 후 소폭 증가함. 추세 분석 수행 결과 유의미한 추세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

◦ ①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g/kg) 및 ② 발토양산도

①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g/kg)

연도	2007	2011	2015	2019	적정 범위
논	24	26	26	27	20-30
연도	2005	2009	2013	2017	적정 범위
밭	25	24	24	27	20-30

② 발토양산도

연도	2005	2009	2013	2017	적정 범위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pH	5.9	6.2	6.3	6.4	6.0-7.0	6.4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 보고서(~2012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자원 변동 평가 (4년 1주기, 사차사업) 보고서 (2013-2016)
- 2017-2019 자료는 2021년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로 공개 예정

비고:

-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 및 ‘발토양산도’의 전국 평균값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http://ndsl.kr>)에서 서비스하는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를 통해 찾을 수 있음
- 국가정책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논토양 유기물 함량’ 및 ‘밭토양산도’는 적정 범위 내에서 증가추세
- 농경지의 인산, 칼슘과 같은 양분상태는 적정함량보다 과다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토양개선을 위한 적절한 비료사용 필요
- 현 K-SDGs에서 2030년까지 ‘발토양산도’ 6.4를 목표로 하고 있음. ‘토양 유기물 함량’, ‘발토양산도’의 경우 2030 목표 기달성

◦ (참고) 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과부하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실행
-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 활동 등을 시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현재 사업대상지 20개소에서 시행 중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확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먼저 선정해야 함

◦ (참고)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품종수	170	23	17	22	14	20	266

작물	작목 및 품종수	기후변화 대응 특성*						
		작기적응	내병·내충	내서성	내한성	내습성	내염성	내도복성
식량 작물	10작물 128품종	11	81	2	7	19		41
원예 작물	16작물 81품종	38	25	11	10	1		
특용 작물	5작물 22품종	3	11	4			2	7
사료작물	3작물 35품종	12			35			
합 계	34작물 266품종	64	117	17	52	20	2	48

\* 단일 품종이 여러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각 특성별로 중복하여 적용

출처: 농촌진흥청

비고:

- 국가공인 통계자료는 아닌 농촌진흥청 자체 자료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음
- 내병충성, 내한성 등 기후변화 대응 특성에 따라 식량작물 10작물 128종, 원예작물 16작물 81 품종, 특용작물 5작물 22품종, 사료작물 3작물 35품종 등 총 34작물 266품종 개발

## 세부목표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 (참고)농업유전자원 보존현황

#### 농업(식물) 유전자원 보존 현황

연도	~2011	2013	2015	2017	2019
보존현황 (누적)	172.6	191.3	210.2	223.5	237.0

#### 농업(가축) 유전자원 보존 현황

연도	~2011	2013	2015	2017	2019
보존현황 (누적)	8.0	18.1	35.2	47.3	57.6

- 농촌진흥청에서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을 도모하고자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 종합포털을 개발하여 농업유전자원 보존현황 공개
- 2020년 1월 기준 총 81개의 지자체 및 대학민간연구소가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기준 총 12개의 지자체 및 대학을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함
- 2020년 1월 현재 총 1,599종, 237,043 자원의 식물이 종자유전자원으로 보존. 이중 식량자원은 275종 178,797자원, 원예자원은 525종 30,759자원, 특용작물은 346종 23,759자원, 기타작물은 453종 3,608자원
- 2020년 7월 현재 토종자원 및 국내육성품종은 소, 돼지, 닭, 염소, 사슴, 메추리 등 총 6축종 21품종 59,540개체


### ◦ (참고) 토종종자 확보 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종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625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2019년 12월 기준 토종종자 확보 수는 54,783자원
- 이 중 식량작물은 43,132자원, 원예작물은 4,208자원, 특용작물 7,074자원, 기타작물 369자원

- 농업유전자원 서비스 시스템 종합포털(<https://genebank.rda.go.kr/>)에서는 재래종, 야생종 등 토종종자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자원을 검색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세부목표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정부비축미 평균 재고량(만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7.8	135.3	170.2	186.3	143.5	80	

지표 정의: 비상시 대비 비축목적으로 시가에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과 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비축미 연평균 보유량

출처: 연도별 공공비축 시행계획

비고

-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수준 재고관리 유지를 통해, 쌀 수급안정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용 할인 공급이 가능함
- 세계식량기구(FAO)의 권장량은 국민 총 소비량의 17-18% 수준임. 이 기준에 의하면 쌀 80만톤 이상에 해당하며, 매년 80만톤 이상을 꾸준히 유지 중에 있음

## 제3장

##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제1절 개요

〈표 3-3〉 K-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5~64세 인구)	-	참고통계 제공
		○ 당뇨병 조절률(%)		
		○ 성인 남성 흡연율(%)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이행)		
		○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인구10만 명당 자살률(%)		
		○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ℓ)		
		○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	통계산출방안 제공
3-3	교통사고등각종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신생아사망률(%)		
		○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	-	참고통계 제공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평가 보류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치매안심센터 개소	-	자료부족, 정량평가 보류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노인 일자리*	-	참고통계 제공
3-9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공공 병상 수		

\* 노인 일자리: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를 측정하는 것인지, 정부사업과 무관한 노인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K-SDGs 3번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은 전 연령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표로, 총 18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9개 세부목표와 관련된 총 18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공식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치매안심센터 개소’ 두 개 지표는 목표치 설정 없이 추세만으로는 의미있는 평가를 할 수 없어 최종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평가에 사용한 13개 지표 중 K-SDGs에 명시되어 있는 2030 목표치에 기반하여 평가한 지표는 10개(76.92%)이다. 나머지 지표 중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국제비교가 가능하여 OECD 상위 5개국 평균값을 2030 목표치로 놓고 평가하였다.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은 K-SDGs에 목표가 ‘지속확대’로 명시되어 있어 장·단기 추세를 분석하였다. ‘공공 병상 수’는 장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단기 추세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목표3에서 2030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는 지표 중, 현 추세대로면 203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는 ‘당뇨병 조절률’, ‘성인 남성 흡연율’, ‘신생아 사망률’로 나타났고, 목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목표치 도달에는 모자란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수’, ‘결핵발생률’, ‘연간 천명당 말리리아 발병률’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지표는 장·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추세가 목표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3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관련해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는 목표치를 2018 시점의 OECD 상위 5개국 평균으로 설정하여 평가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삶의 질 지수가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2030년 추정치도 현 OECD 상위 5개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 추세분석으로 평가한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지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갑자기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흐림’으로 평가되었지만, 2019년부터 이전의 감소 추세에 다시 복귀한다면 ‘지속 저감’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 병상 수’ 지표는 자료 가용성 문제로 4년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유의미한 증가 추세는 관측할 수 없었다.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는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줄이려는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의 사망률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95.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4.1개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만성호흡기 질환은 질병분류코드 J30에서 J98까지를 특정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호흡계통 질환(코드 J00-J98)’까지만 볼 수 있어,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통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아동 비만 유병률’은 현재 비만 유병률을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비만 유병률 추이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만 9세~만24세)은 모집단에서 일부 제외된다. 또한, BMI 평균만 보고하고, 비만 유병률을 따로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비만통계자료집 2013-2017」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율을 참고통계로 제시하였다.

‘노인 일자리’ 지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를 측정하는 것인지, 정부사업과 무관한 노인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표 의미가 불분명하여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경향을 참고통계로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은 정부의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을 통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및 국가승인통계 제120019호에 근거하여 정책통계를 생산한다.

##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나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수준이 저조함에 따라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만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2019년「2019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자살예방백서를 통해 지역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자살 현황 및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근거 중심의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 관리를 위해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 9월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발표되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하는 정책을 2019년 본격 시행하여 2022년 전국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였다. 또한 고령자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카메라안전표시·과속방지턱과 같은 보행자 보호시설을 확대하였다.

한편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추진하며,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와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도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를 격상하고 강화하였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 세부목표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 ◦ (참고) 국내 비감염성 질환 사망자 내역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악성신생물	150.9	150.8	153.0	153.9	154.3
당뇨병	20.7	20.7	19.2	17.9	17.1
순환계통 질환	113.9	116.9	118.1	119.6	122.7
호흡계통 질환	47.6	54.6	57.5	63.7	73.6


지표 정의:  $\frac{\text{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text{기준연도 주민등록 인구}} \times 100,000 \text{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비고

-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줄이려는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의 사망률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65세 이상 고령자의 95.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4.1개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 암(코드 C00-C97), 당뇨합병증(코드 E10-E14), 심혈관계질환(코드 I00-I99), 만성호흡기질환(코드 J00-J99)으로 인한 사망률임. K-SDGs 지표는 만성호흡기질환(코드 J30-J99)으로 인한 사망률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고려한 통계산출이 되어야 함

### ◦ 당뇨병 조절률(%)

연도	2007 -2009	2010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9.4	28.6	26.6	32.9	-	36.0	


지표 정의:  $\frac{\text{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당뇨병 유병자 수}}{\text{기준연도 당뇨병 유병자 수}} \times 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고:

- 2018년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음
- 당뇨병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암,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와 함께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최근 연평균성장률을 고려하면 2030 목표까지의 요구 연평균성장률 달성 가능

### ◦ 성인남성흡연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2.3	38.3	39.4	37	35.8	29	

지표 정의:  $\frac{\text{흡연 중인 인구 수}}{\text{표본 인구 수}} \times 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고:

- 흡연은 흡연인구 본인의 건강상태는 물론 간접흡연 및 산모-태아 물질대사 교환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인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 WHO의 흡연규제협약이 이행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가능
- 최근 연평균감소율에 의하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 ◦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63.0	66.9	63.3	59.6	65.6	63.5	64.8	-	-	-	

지표 정의:  $\frac{\text{일반건강검진 수검 등록장애인 인구}}{\text{일반건강검진 대상 등록장애인 인구}} \times 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와 건강 통계

- 2010~2012년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8 장애통계연보>(p.56) 참조.

- 2013~2016년 자료는 국립재활원의 <장애와 건강 통계>를 참조

비고:

- 중증질환 치료 후 후유증 등으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과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국제적 흐름과 전략, 장애인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 이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음 (출처: 국립재활원, 2016 장애와 건강 통계)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구축한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국가승인통계를 토대로 하여, 전체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 기초자료로서 국가단위의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원자료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있지 않아 국립재활원의 통계 보고 참조
- 장·단기 추세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

### ◦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0.2	-	-	75.8	-	-	81.7	-	68	

지표 정의:  $\frac{\text{경증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 인구}}{\text{당해연도 등록장애인 인구}} \times 100(\%)$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비고: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게 나타나며, 장애 특성에 따라서 만성질환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장애인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양한 장벽 존재.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정책 및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 (출처: 국립재활원(2011) 장애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본 지표는 자료 3년을 주기로 해서 자료 제공
- 2030년까지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을 68%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세부목표 3.2.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

####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추정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7.3	26.5	25.6	24.3	26.6	17.3	11.9	

지표 정의:  $\frac{\text{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수}}{\text{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 \times 100,000(\text{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비고: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기록
- 자살은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으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분류됨
- 감소 추세에 있으나 5년간의 추세로는 2030 목표 11.9%를 달성하기 어려움

#### ◦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L)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추정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69	8.92	9.09	8.68	8.65	-	8.56	7.2	

지표 정의:  $\frac{\text{출고량} \times \text{주류별 도수}(L)}{\text{15세 이상인구}}$

출처: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인구추계, 통계청

비고:

- 음주가 가능한 인구의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
- 알코올은 200여 종의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와 부상 유발
- 감소 추세이나, 5년간의 평균 감소율은 2030 목표에 도달하기 부족함

◦ **(참고)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함
- 정부에서는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 수립.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요소가 된 환경에서, 역기능의 최소화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디지털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현황 파악이 더욱 중요해짐
- 본 지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하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기초 정책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요구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14조 및 국가승인통계 제1200019호에 근거함)

-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5.22., 2015.6.22.>
    -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 ▶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승인된(2006년 11월 지정)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20019호)
- 


〈표〉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단위 : %)	'11	'12	'13	'14	'15	'16	'17	'18
과의존	8.4	11.1	11.8	14.2	16.2	17.8	18.6	19.1
고위험	1.2	1.9	1.3	2.0	2.4	2.5	2.7	2.7
잠재적위험	7.2	9.2	10.5	12.2	13.8	15.3	15.9	16.4

자료: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

### 세부목표 3.3. 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

#### ◦ 교통사고 사망자수(천명당)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0.094	0.091	0.085	0.081	0.073	0.03	

지표 정의:  $\frac{\text{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text{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 \times 1,000(\text{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비고:

-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WHO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로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삼아 왔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50% 경감시키고자 함
- 감소추세이긴 하나 2030 요구 목표치에 비하여 부족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30 요구 연평균감소율 대비 장기적인 감소 추세는 84.1%, 단기적인 감소 추세는 88.9%로, 감소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관리를 통해 연평균감소율을 더 감소시키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세부목표 3.4.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 결핵발생률(인구 10만명당)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7.9	62.5	59.8	54.4	51.0	18	

지표 정의:  $\frac{\text{당해연도 결핵신환자수}}{\text{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 \times 100,000(\text{명})$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현황

비고:

- 결핵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과거의 질병이라 인식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젊은 연령층의 주된 사망 원인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 장·단기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2030 요구 목표치에 비하여 부족한 감소세
- 2030 요구 연평균감소율 대비 장기적 연평균감소율은 58.8%, 단기 연평균감소율은 86.71%로, 최근 5년간 감소율이 크게 좋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관리를 통해 2030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천명당 말라리아 발병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0.012	0.014	0.013	0.010	0.011	0.002	

지표 정의:  $\frac{\text{신규 말라리아 감염자}}{\text{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 \times 1,000(\text{명})$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정전염병 감염보고

비고:

- 우리나라는 3일열 원충이 1970년대에 사라졌고, 1993년 이후 다시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증상이 열대열 말라리아처럼 심각하지 않음
- 국내 말라리아는 대부분 해외여행 도중 감염된 것
- 최근 5년간의 감소 추세가 2030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크게 부족함

세부목표 3.5.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35	1.57	1.72	0.99	1.15	1.10	0.87	0.84	0.78	1.13	지속 저감	

지표 정의:  $\frac{\text{당해연도 모성 사망자수}}{\text{당해연도 출생아수}} \times 10,000(\text{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 인구동향조사

비고:

- 안전하지 못한 출산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산모 사망률을 보임.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고령 산모의 증가
- 장기적으로는 유의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2018년 산모 사망자수가 증가하여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추세가 관측되지 않음
- 2019년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18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저감’이라는 2030 목표 달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음

### 세부목표 3.6.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 신생아사망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0.17	0.18	0.17	0.17	0.17	0.17	0.15	0.16	0.15	0.16	0.14	

지표 정의:  $\frac{\text{신생아 사망자수}}{\text{당해연도 출산수}} \times 1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비고:

- 신생아 사망은 산모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출생 후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해 각종 감염에 노출되는 등의 이유에 의해 주로 발생
- 임신 기간 중 산모의 영양 상태에 따라 신생아의 사산으로 이어지거나 신생아 조기사망의 위험을 높임. 기본적인 위생과 보건시스템 구축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모자 보건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신생아 사망률에 큰 변동이 없어 장기 연평균감소율은 2030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이후의 단기 연평균감소율은 2030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감소율인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아동·청소년 비만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표값	15.3	15.0	15.6	16.5	17.3	-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통계자료집 2013-2017

비고:

-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를 이르고,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함
-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BMI)  $25\text{kg}/\text{m}^2$  이상
-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조사>에서 제공하는 비만 유병률 추이는 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이고,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만 유병률을 따로 보고하지 않음
- 위 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통계자료집 2013-2017」에서 “학생건강검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공한 통계 자료임

세부목표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mu\text{g}/\text{m}^3$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26	26	25	23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PM2.5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치

PM2.5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비고:

- 최근 미세먼지와 질환 관련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세기관지에 영향을 미쳐 천식, 만성 기관지염, 기도 폐쇄 등을 유발하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급사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 여겨지고 있음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부터 월별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고 있음
- 단기 추세분석 결과만 보면 목표순향도를 ‘맑음’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목표치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 추세분석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 보고서에서는 판단 보류

### 세부목표 3.8.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	-	166	256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1:1 상담·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에서 원스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시군구 보건소 내 기반시설을 말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비고:

- 보건복지부의 「2017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증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 현재 2개의 자료만 있어 추세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 불가
- 누적지표이므로 203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래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적정 목표치 설정 후에 지표 평가 가능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Better Life Index(BLI) 中 삶의 만족도 점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7	5.8	5.9	6.0	6.1	9.74 (2018상위 5개국 평균)	

지표 정의: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됨. 개인의 '삶의 질'과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임. 11개 영역(주거/소득/직업/공동체/교육/환경/시민참여/건강/삶의 만족/안전/일과 삶의 균형)의 25개 지표를 포함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삶의 만족' 영역의 점수를 활용함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비고:

-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와 저출산, 사회갈등 심화, 자살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등장으로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어 삶의 질 측정 필요성 대두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17.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 대한민국의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삶의 만족도 부분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
- 2018년 기준 삶의 만족도 부문 상위 5개국(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의 평균 점수는 9.74임. 최근 5년간의 추세로는 현재의 상위 5개국 평균에 도달할 수 없음.

◦ (참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연도	2014	2017
응답자수	10,279	10,073
현재 참여중(%)	4.3	6.7
참여 경험 있음(%)	4.3	4.6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4.6	3.5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비고:

- K-SDGs에 지표로 명시되어 있는 “노인일자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를 측정하는 것인지, 정부사업과 무관한 노인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노인 고용률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정의마련이 필요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통계를 참고 통계로 제공함

세부목표 3.9.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공공 병상 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63,476	64,735	64,385	63,924	목표치 설정 필요	

지표 정의: 병상이란,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재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허가받은 병상 수)을 말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비고:

- 2017년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은 낮은 필수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있음. 공공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로 OECD 최하위임(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 현 추세면 2030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의미한 추세를 관측할 수 없었음. 2030 목표치 설정 이후에 재평가가 요구됨




**제4장**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제1절 개요**

〈표 3-4〉 K-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	참고통계 제공
		○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	통계산출방안 제공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참고통계 제공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통계산출 방법 개발 필요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통계산출 방법 개발 필요
		○ 고등교육 이수율(%)		<b>추세분석 평가</b>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	통계산출방안 제공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평생학습 참여율(%)		<b>목표치 기반 평가</b>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b>목표치 기반 평가</b>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통계산출방안 제공
		○ 취학률(%)	-	통계산출방안 제공
		○ 학업중단율(%) <small>(다문화학생)</small>		<b>목표치 기반 평가</b>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	참고통계 제공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자료부족, 정량평가 보류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	지속가능발전 교육 설명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	메타데이터 부재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	메타데이터 부재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설정 필요
		○ 학교 내진보강률(%)	-	자료부족, 정량평가 보류
		○ Wee 클래스 설치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b>목표치 기반 평가</b>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b>목표치 기반 평가</b>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 지자 비율		추세분석 평가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추세분석 평가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메타데이터 부재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목표치 기반 평가

※참고

- 취학률 : 전체 취학률 자료만 있음.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100%에 근접하나 세부목표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학생 취학률 및 다문화학생 취학률에 대한 통계산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출처 불분명

K-SDGs 4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하는 목표로, 총 10개 세부목표와 이에 관련된 2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4개 지표가 가용 지표이며, ‘청소년·성인 문해율’, ‘일반 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학교 내진 보강률’은 평가를 보류하고 나머지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일반학교 특수학교 설치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보류하였고, ‘청소년·성인 문해율’ 및 ‘학교 내진 보강률’의 경우 가용자료가 2개뿐이어서 평가를 보류하였다.

목표3에서 2030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는 지표 중, 현 추세대로면 203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는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로 나타났고, 목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목표치 도달에는 모자란 지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지표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나 매년 OECD 평균과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 국제평가’ 지표는 K-SDGs 지표에서는 PISA 점수와 TIMSS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PISA는 OECD 주관으로 3년 주기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 시험이고, TIMSS는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의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이다. K-SDGs에서는 PISA는 3개 과목 평균, TIMSS는 2개 학교급 4개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목표순향도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두 기관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상황을 제공하였다.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은 K-SDGs에서는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 결과를 산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매년 제공하고 있는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을 참고통계로 제공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국가 수준 결과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3단계의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정책 이슈

교육부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매년 시행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문항은 선다형과 서답형으로 구성된다. 2017년 이후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어 시행 중이다.

영유아 사교육 양상 심화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정과제로서 ‘적정 학습시간 법제화를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선정한 바 있다. 2007년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시행 중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양적 확대와 접근 기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향후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황정원, 2018)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높은 민감부담비율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정부부담률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민감 부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높은 민감 부담률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학등록금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고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 (참고)학업성취도 국제평가 (PISA, TIMSS)

- K-SDGs는 ‘PISA 3개 과목 평균’, ‘TIMSS 2개 학교급 4개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합하는 국내 공식 통계가 부족하여 참고통계 제시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PISA 2018)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PISA 모든 영역에서 상위 성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PISA는 만 15세 이상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 비교 연구임.

PISA 2018 대한민국 결과

구분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OECD (37개국)	전체 (79개국)		OECD (37개국)	전체 (79개국)		OECD (37개국)	전체 (79개국)
대한민국	514	2~7	6~11	526	1~4	5~9	519	3~5	6~10
OECD 평균	487			489			489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OECD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 결과 발표”

-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는 4년 주기로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를 시행.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육관련 정보를 참여국에 제공함.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수학, 과학 성취도 순위가 매우 우수한 편임. ‘15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과학 성취도는 각각 3위, 2위이고, 중학교 2학년의 수학, 과학 성취도는 각각 2위, 4위임

◦ (참고)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16			2017			2018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중3	보통학 력이상	90.1	68.2	74.7	84.9	67.6	72.6	81.3	62.3	65.8
	기초 학력	7.9	26.9	21.3	12.5	25.3	24.2	14.3	26.6	28.9
	기초학 력미달	2	4.9	4	2.6	7.1	3.2	4.4	11.1	5.3
고2	보통학 력이상	84.1	78.2	86	75.1	75.8	81.5	81.6	70.4	80.4
	기초 학력	12.7	16.5	8.9	19.9	14.3	14.4	15	19.2	13.4
	기초학 력미달	3.2	5.3	5.1	5	9.9	4.1	3.4	10.4	6.2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 평가
- 인지 및 비인지적 영역에서의 전인적 평가결과로 국가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수단이 되는 지표
-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시행
- 표집과 전수의 형식으로 전환되던 시기들이 있었고, 2017년 이후 표집으로 시행
- K-SDGs의 정식 지표는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임.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을 산출하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 지표임

**세부목표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참고)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 본 지표는 통계산출방법론 개발이 먼저 필요한 지표임. 지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지표 정의에 앞서 영유아의 심리 사회적 안녕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요구됨
- 초등학교 입학 아동 중 특수아의 비율이나 취학 전 장애 영유아 현황의 대체자료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파악 가능
-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영유아의 건강상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장애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율은 0.9%, 질병이 있는 비율은 0.5%, 장애 및 질병이 있는 비율은 0.1%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의 영유아 가구가 장애영유아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분	영유아 가구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장애	0.3	1.1	1.4	0.9	0.3	0.5
질병	0.2	0.8	0.5	0.5	0.3	1.2
장애 및 질병	-	0.2	-	0.1	-	-
양호	99.5	97.9	98.1	98.6	99.4	98.3
(수)	(1,412)	(1,195)	(1,271)	(3,878)	(3,637)	(2,516)

자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7.5	48.9	49.8	50.7	50.6	75	

지표 정의: 유치원 취원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비고:

- 가정의 소득수준 및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3-5세 유아에게 취학 전 무상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생애 초기부터 출발점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한 지표
- 국내 통계자료는 “체계적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만 3-5세 아동이 취원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여 집계한 자료임
- 장·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장률로는 2030년 목표치 75%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2.7	23.6	24.2	24.8	25.4	44	

지표 정의: (국·공립 유치원 학생 수)/(전체 유치원 학생 수)

출처: 교육통계연보, 보육통계

비고:

- 국공립시설 설치 확대를 통하여 영리사업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높은 부모 부담 수준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표
- 201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2030 목표인 44%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

◦ **(참고)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 본 지표는 통계산출방법을 먼저 개발해야 하는 지표임
- 영유아의 가정학습은 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정학습 환경에는 언어 및 학습에 따른 도구·시간, 관계성·반응성, 아동의 생활 습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강, 영양 등이 모두 포함
-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 정보 및 국가수준에서 활용되는 척도 부재. 영유아에 대한 가정학습(보육,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효과 분석이 없으며 대상이 영유아라는 점에서, 주보육자나 교육자를 통한 간접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

- 영유아 인구 추계 및 구성비 등은 「유아교육 보육 주요통계」(육아정책연구소)에서 파악 가능. 주요 통계 중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외식, 의료 통계를 가족의 경제력 등과 같은 가정학습의 환경변수(외부적 요인)로 고려 가능

**세부목표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참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 본 지표는 통계산출방법에 대한 개발이 먼저 필요한 지표임.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 특히 장기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속한 기술개발과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음. 이 상황에서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기간의 단축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기본 교육과 평생교육을 결합하여 숙련의 기술적 합도를 제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도입된 지표
- 만 25~64세 성인의 연령대별 총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개설·운영되는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 비율(%)로 정의 가능.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학위교육과정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 모두 포함되며,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학력보완교육, 재취업을 위한 자격이수 등 과정,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재직자 재교육과정 등을 말함.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인의 양질 고등교육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임
-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서 발표하는 ‘만 25~64세 성인이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함. 교육부의 평생교육통계는 평생교육통계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직접조사) 및 수집데이터를 활용하며,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통계 수집하고 있음

### ◦ 고등교육 이수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4.6	45.5	46.9	47.7	49.0	48	

지표 정의: (해당 연령 고등교육 이수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 10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비고:

- 만 25-64세 성인의 연령대별 총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 고등교육 이수 정도는 고등교육 기회의 접근 및 완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임
- 고등교육 이수율은 장·단기 모두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2018년 기준 49%로 2030 목표인 48%를 달성. 현재의 48%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본 지표가 지향하는 바임

### ◦ (참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현황

- K-SDGs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을 지표로 제시
- 공교육비는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준을 보여주는 교육 투입의 대표적인 지표. 부담주체에 따른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대적 투자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각 주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
- 매해 OECD의「Education at a Glance」에서 발간하는 자료 이용 가능. 단, OECD 통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제공되나, 이에 대한 민간부담비율은 별도의 산출 필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현황〉

(단위: PPP환산액, %)

연도	구분	민간재원	OECD 평균대비비율
2007 (10)	OECD평균	3,988 (30.9)	177.4
	한국	7,074 (79.3)	
2008 (11)	OECD평균	4,266 (31.1)	165.4
	한국	7,056 (77.7)	
2009 (12)	OECD평균	4,118 (30.0)	170.7
	한국	7,030 (73.9)	
2010 (13)	OECD평균	4,275 (31.6)	169.6
	한국	7,250 (72.7)	
2011 (14)	OECD평균	4,299 (30.8)	168.6
	한국	7,247 (73.0)	
2012 (15)	OECD평균	4,553 (30.3)	177.4
	한국	6,975 (70.7)	
2013 (16)	OECD평균	4,653 (29.5)	135.3
	한국	6,293 (67.5)	
2014 (17)	OECD평균	4,843 (30.0)	130.4
	한국	6,316 (66.0)	
2015 (18)	OECD평균	4,853 (31.0)	133.3
	한국	6,470 (64.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세부목표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평생학습 참여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6.8	40.6	35.7	34.4	41.2	38.4	

지표 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사람 수) ÷ (주민등록인구)

출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

비고:

-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참여를 통해 개인 차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지역의 경제발전,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는 프로그램
- 2018년 기준 2030 목표 달성

◦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4.1	11.8	12.9	14.5	18.7	18	

지표 정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구직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비고:

- 전 국민, 경제활동인구, 구직자, 재직자 중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기회를 얻어 직접 참여한 수를 나타내는 지표. 직업교육훈련의 양적 규모 측정
- 2018 기준 2030 목표치 18%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

**세부목표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필요
- 다수의 지표에서 성별, 지역별 지표에 대해 분리통계가 제한적인 상황임
- 이에, UN 형평성 지수 산출식을 따르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DPI = \frac{[In di]d}{[In di]a}$$

DPI = the Dimension(Gender, Wealth, Location, etc.) Parity Index  
 Indi = the Education 2030 Indicator i for which an equity measure is needed  
 d = the likely disadvantaged group(e.g. female, poorest, etc.)  
 a = the likely advantaged group (e.g. male, richest, etc.)

이 형평성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하다는 의미이고, 0에서 2까지의 수치로 산정


◦ (참고) 취학률(%)

- 취학률 지표는 특정 연령집단의 학생들이 학교에 충분히 다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교육체계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치원	40.3	41.1	44.2	47.7	47.5	48.9	49.8	50.7	50.6
초등학교	99.1	98.7	98.5	97.3	96.7	99.1	98.6	97.3	97.4
중학교	96.5	95.6	95.6	95.7	96.4	95.3	94.3	94.2	97.9
고등학교	91.7	92	92.5	92.5	93.2	92.5	93.1	93.7	92.4
고등교육 기관	70.1	68.4	68.4	68.7	68.2	67.5	67.4	67.6	67.6

- 취학률은 교육기본통계조사의 학생 수와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
-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률은 재학 중인 해당 학교급에서 해당 연령대의 학생 수로 산출하기 때문에 100%에 근접함
- 다문화 학생 취학률 출처 부재.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를 모집단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통계가 산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학률을 활용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2016)는 본 조사의 가구 구성표에서 가구원의 만 연령을 조사하여 시점인 본 조사대상인 다문화가구 내 자녀들의 취학적령인구 집단 파악
- 장애인 학생 취학률 출처 : 교육기본통계조사의 학생 수와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산출.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연령 재적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취학률에 대한 통계치는 부재한 실정
- 세부목표를 고려할 때 지표의 필요성과 목적이 취약집단의 취학률을 통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별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취약집단들에 대한 산식을 따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03	1.01	0.85	0.88	1.17	-	1.0	

지표 정의: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수/다문화학생수)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비고:

- 취약집단의 학업중단율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지표
- 취약집단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전 국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
- 가용자료의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은 증가추세에 있어, 2030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음

**세부목표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참고)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PIAAC)**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OECD에서 수행하는 성인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국제 조사로,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해 성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스킬을 측정
-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측정
- 김용성(2017) 이 PIAAC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16-65세)의 스킬 활용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업무 관련 문제에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문제해결 스킬의 활용은 상당히 부진함. 직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자가 다양한 스킬을 활용하는 정도는 OECD PIAAC 국가 중 하위권(33개국 중 29위) 에 속함

◦ **청소년·성인 문해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4	-	-	7.2	-	-	보류

지표 정의: 중학학력 미만(수준 1-3) 인구 비율

출처: 교육부, 성인문해능력 조사

비고: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문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성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각 연령대의 독해 및 산술능력에 대한 조사 및 일정 수준 이상 판정을 받은 인구 비율에 대한 자료는 국내 조사를 통해 구축되기 시작. 3년 주기로 제공
- 현재 가용자료가 2개뿐이므로 유의미한 추세 분석을 할 수 없어 목표순향도 평가는 보류하였음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 관련 국가교육 정책 이행**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SD)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유네스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이행 계획)을 말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2011년부터 ESD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2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료”를 배포함

**세부목표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3.46	34.07	34.52	34.81	35.34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수/일반학교 전체학급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비고:

- 일반적으로는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해 통학해야 하나, 특수학교 인근 지역주민의 비호의적인 인식 등 때문에 원할 경우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지표
- 특수학급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통계에서 초, 중, 고 개황통계를 통해 학급수 확인이 가능하나, 초등학교의 경우 따로 특수학급 수 파악이 어려움. 추가적인 지표 항목 데이터 구축 필요
- 단기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 목표치 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판단 보류

◦ 학교 내진보강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	-	24.9	36.7	100	보류

지표 정의: (내진보강 누적실적/내진보강대상) \* 100

출처: 행정안전부

비고:

-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여부 또는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지표로 활용
- 현재 2개의 자료만 사용할 수 있어 유의미한 추세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평가 보류

◦ Wee 클래스 설치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8.1	52.2	53.9	55.6	61	100	

지표 정의: (Wee클래스 설치 학교 수/전체 초·중·고 학교수)\*100

출처: 교육부

비고:

- Wee 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 Wee 클래스 설치 비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여 학교환경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5년간의 연평균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 목표인 100%를 달성할 수 있음

**세부목표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OECD 평균)	0.8 (1.2)	0.9 (1.1)	1.0 (1.1)	0.9 (1.1)	0.7 (0.9)	-	-	OECD 평균	

지표 정의: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용/GDP)\*100

출처: 교육부 및 OECD

비고:

- 공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알 수 있는 국제지표임
- 교육기관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교육비와 가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의
- 2014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다시 감소추세. 매년 OECD 평균과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현 추세대로면 OECD 평균을 달성한다는 2030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움

**세부목표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6	-	-	76.2	-	-	76.3	목표치 설정 필요	

지표 정의: (보육교사 중 학사학위소지자 수/보육교사 수) \* 100

출처: 보육실태조사

비고:

-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단일화하여 2030까지 학사 학위 소지자로 설정, 이에 따른 법령 개정 필요

- 보육교사의 경우 현재의 이수학점 중심에서 학과 중심(유아교육, 보육 전공)으로 양성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세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OECD 추세방법론에 의한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 자료 가용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0.06%로 매우 저조. 추세 분석 결과로 아직 지표가 정체상태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흐림☁️’ 평가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37	5.23	5.18	5.08	4.95	4.86	4.80	4.68	4.62	4.53	지속 감소	

지표 정의: (특수교육 학생 수) / (특수교육 교사 수)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비고: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담당 교원 및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지표
- 장·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 추세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4.81	15.95	16.73	17.35	22.84	100	

지표 정의: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초·중고 학교 수/전체 초·중고 학교 수)\*100

출처: 교육기본통계

비고:





- 학생과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역량이 갖추어진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소외된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 상담 및 교육적 지원
- 단기 연평균성장률이 2030까지의 요구 연평균성장률 대비 90%의 성장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 추세로는 2030 목표인 100% 달성에는 부족함

**제5장**      **목표 5. 성평등 보장** 

**제1절 개요**

〈표 3-5〉 K-SDGs 5 “성평등 보장”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참고통계 제공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	통계산출방안 제공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참고통계 제공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	통계산출방안 제공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공학계 여학생 비율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K-SDGs 5번 “성평등 보장”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을 추구하는 목표로, 7개 세부목표와 이에 관련한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공식 통계를 통해 평가가 가능한 지표는 5개 지표이며, 이중 ‘공학계 여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2030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하였다.

성폭력 발생사건에 대한 미검거율은 최근 3년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목표순향도 ‘맑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평가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종적으로 ‘맑음☀️’ 평가하였다. 2014년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미검거율(4.9%)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목표순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의회 및 지방의회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은 5년간 미세하게 증가하긴 하나 그 정도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은 지표의 정의에 국내 공식 통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대체 가능한 통계를 제시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발생 통계원표’에 입력되어 있는 가정폭력 여부와 ‘피의자 통계원표’에 입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가정폭력 신고건수’에 대한 간접적인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실신고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가 부족하여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참고 통계를 제시하였다.

## 관련 정책 이슈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수립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공분야 여성 종사자 및 관리자이며, 매년 분야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4급 이상, 지방과장급 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공공기관 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 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 해양경찰, 정부위원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수용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3.2	81.4	84.2	85.2	85.1	-	

지표 정의:

$$= \frac{(\text{수용} + \text{일부수용})\text{과제수}}{\text{개선의견과제수}} \times 100$$

출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평가결과:

-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및 소녀 대상 차별철폐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평등의 우선 조건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선언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평등 관련 법제도 유무와 이를 강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존재 여부를 의미함
- 증가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체상태로 판정

**세부목표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참고)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 국내 통계가 지표정의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대체가능한 통계로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제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발생 통계원표’에 ‘가정폭력 여부’를 입력하고, ‘피의자 통계원표’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있어 ‘가정폭력 신고 건수’의 통계 산출 가능
-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국민안전 실태조사, 전국 범죄피해조사, 범죄 통계, 성폭력 실태조사 등의 국가 승인 조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성별, 연령별, 범죄유형별 피해자 현황이 집계되어 있으나, 현재 조사로는 피해 여성의 성경험 여부, 성적파트너 등 친밀한 대상으로부터의 폭력 실태를 측정할 수 없음
- 참고 자료

성별	2016					
	전체		직접 나서서 말린다	경찰에게 신고한다	주위에 알린다 (소리를 지르는 등)	관여하지 않는다
	사례수 (명)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전체	387	100.0	4.1	79.2	5.4	11.2
여성	183	100.0	1.1	83.7	7.1	8.1
남성	204	100.0	6.9	75.1	3.8	14.1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9	3.6	3.3	3.4	3.6	3.3	

지표 정의:  $\left\{ 1 - \frac{(\text{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간및강제추행 총 검거건수})}{(\text{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간및강제추행 총 발생건수})} \right\} \times 100$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비고:

-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3.3-3.6의 미검거율 유지 중
- 2016년에 2030 목표치인 3.3을 달성하고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감소율은 2030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평가 기준에 의해 '맑음☀️' 평가

**세부목표 5.3. 무보수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참고)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
-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보수돌봄에 대한 가시화 및 가치부여가 필수적
-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158분, 남성은 28분으로 여성이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
- 가사노동 시간은 미혼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20세 이상 미혼 남녀 모두 일(수입노동)에는 비슷한 시간을 사용하지만, 가사노동에서 미혼 여자가 미혼 남자에 비해 약 40분 정도 더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

〈표〉 20세 이상 남녀인구의 연령에 따른 행동별 평균시간(요일평균)

(단위/시간:분)

연령	행동	2014			2009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대	일	3:23	3:27	3:19	3:28	3:44	3:13
	가정관리	0:47	0:24	1:10	0:54	0:23	1:2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5	0:03	0:27	0:24	0:05	0:41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7	0:02	0:04	0:06	0:01
30대	일	4:16	5:56	2:35	4:17	5:44	2:45
	가정관리	1:39	0:28	2:50	1:43	0:28	3:0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16	0:27	2:05	1:07	0:24	1:53
	참여 및 봉사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40대	일	4:44	5:52	3:34	4:53	6:02	3:41
	가정관리	1:46	0:29	3:05	1:48	0:26	3:12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3	0:13	0:34	0:24	0:11	0:38
	참여 및 봉사활동	0:02	0:02	0:03	0:02	0:01	0:02
50대	일	4:25	5:31	3:20	4:12	5:23	3:00
	가정관리	1:51	0:35	3:08	1:56	0:34	3:1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0	0:05	0:16	0:11	0:04	0:19
	참여 및 봉사활동	0:03	0:01	0:05	0:03	0:01	0:05
60대 이상	일	1:56	2:41	1:21	2:02	2:46	1:28
	가정관리	2:13	0:58	3:12	2:07	0:49	3:07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0	0:08	0:12	0:13	0:09	0:17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3	0:05	0:03	0:01	0:0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세부목표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비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국회의원)	-	-	15.7	-	-	-	17	-	-	지속 확대	
지표값 (지방의회)	20.3	-	-	-	22.9	-	-	-	28.3		

지표 정의:  $\frac{\text{여성 국회의원 수}}{\text{전체 국회의원 수}} \times 100$

$\frac{\text{여성 지방의원 수}}{\text{전체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 수}} \times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성인지통계>

비고:

- 국회 의사결정과정 및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 및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총선 및 지방의회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있으므로 자료 또한 4년 단위 자료임
-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

◦ (참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수립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고, 공공기관 여성임원(21.1%)은 2022년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15)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19.12.31. 기준, 단위:%)

소관 부처	추진 분야	‘17년 실적	‘18년 실적	2019년 실적			‘20년 기존목표	‘21년 기존목표	‘22년 기존목표
				목표	실적	달성률			
인사처	① 고위공무원	6.5	6.7	7.2	<b>7.9</b>	109.7	8.2	9.6	10.0
	② 본부과장급(4급 이상)	14.8	17.5	18.4	<b>20.8</b>	113.0	<b>19.8</b>	21.0	22.5
행안부	③ 지방 과장급(5급 이상)	13.9	15.6	15.9	<b>17.8</b>	111.9	<b>16.8</b>	18.6	20.0
기재부	④ 공공기관 임원	11.8	17.9	18.4	<b>21.1</b>	114.7	<b>18.9</b>	<b>19.4</b>	<b>20.0</b>
	⑤ 공공기관 관리자*	18.8	23.8	24.1	<b>25.1</b>	104.1	25.4	26.6	28.0
행안부	⑥ 지방공기업 관리자**	4.9	6.9	8.1	<b>9.1</b>	112.3	<b>8.8</b>	9.4	10.0
교육부	⑦ 국립대 교수***	15.8	16.6	17.0	<b>17.3</b>	101.8	17.5	18.1	19.0
	⑧ 교장·교감	40.6	42.7	43.0	<b>44.1</b>	102.6	<b>43.5</b>	<b>44.0</b>	45.0
국방부	⑨ 군인 간부	5.5	6.2	6.7	<b>6.8</b>	101.5	7.3	8.1	8.8
경찰청	⑩ 일반경찰	10.9	11.7	12.6	<b>12.6</b>	100	13.4	14.2	15.0
	⑩-1 관리직(신규)	-	5.9	6.1	<b>6.1</b>	100	6.3	6.6	7
해경청	⑩ 해양경찰	11.3	12.0	12.6	<b>12.7</b>	100.8	13.2	13.8	14.4
	⑩-1 관리직(신규)	-	2.2	2.3	<b>2.5</b>	108.7	<b>2.4</b>	<b>2.5</b>	2.6
여가부	⑩ 정부위원회****	40.2	41.9	40.0	<b>43.0</b>	107.5	40.0	40.0	40.0

\* 실적 기준 : ‘관리자 정원 중 여성 수에서 ‘관리자 현원 중 여성 수’로 변경(‘17년 기준과 동일) \*\* (‘18년) 300인 이상 (25개) → (‘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교수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15)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세부목표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참고)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 1975년 제 1차 세계여성대회를 시작으로 1979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1995년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등에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및 인식 확산
-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건, 정보, 교육과 관련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 관련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 UN Women은 15~49세 여성의 성관계와 재생산 관련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을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방식을 제안<sup>16)</sup>(UN Women, 2015). 현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는 “모든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유엔인구기금(UNFPA)은 핵심적인 4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 이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관련 법, 제도의 제정 및 이행 수준을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sup>17)</sup>(UNFPA, 2018a)

16) 세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음: 1) 배우자, 보호자, 부모 혹은 그 외 인물을 포함한 제 3자의 권한 없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2) 연령 및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3)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17) 1) Maternity care service 2) 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 3)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4) Sexual health and well-being(UNFPA, 2018a).

**세부목표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공학계 여학생 비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0.6	20.4	21.2	21.8	23.8	24.2	24.7	25.0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frac{\text{여성 공학계열 입학자 수}}{\text{전체 입학자 수}} \times 100$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학과계열별 입학자 수

비고:

- 여성의 공학계 분야 진출 추이를 통해 STEM 분야에서의 여성 현황을 파악
- 국제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계치의 비교 결과를 통해 여성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현황을 보여주는 함의 제시 가능
- 꾸준히 증가 중에 있으나 목표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 보류

**세부목표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8.8	70.9	69	67.3	71.9	83	

지표 정의:  $\frac{\text{성인지 성과목표 달성}}{\text{성인지 성과목표}} \times 100$

출처: 행정안전부, 성인지결산서

비고:

-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음<sup>18)</sup>
-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성숙한 성평등 사회구조를 구현 하는데 필요한 지표
- 법 혹은 정책의 채택 여부와 더불어 이를 위해 배분된 자원의 여부까지 파악
-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은 2030까지 요구되는 연평균성장률의 40%를 보이고 있음.

18) 성인지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제6장


##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제1절 개요

〈표 3-6〉 K-SDGs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전국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 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 한다.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6-3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 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 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 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 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수질등급달성률(%) ※ BOD 기준		
		○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	지표설명 제공
		○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	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 대체지표 제안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 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 돛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 화를 추구한다.	○ 상수도 누수율(%)		<b>목표치 기반 평가</b>
		○ 물공급 안전율(%)	-	지표설명 제공
		○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 일/인)		<b>추세분석 평가</b>
6-5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 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목표수질 달성률(%) ※ 목표수질 달성지점/목표수질 설정지점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소개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생태하천 복원율(%) ※ 복원구간/복원목표 구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개
		○ 수질 ' 좋음 ' 등급 비율(%)		<b>목표치 기반 평가</b>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	메타데이터 부재

K-SDGs 6번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을 추구한다. 총 7개 세부목표와 이에 관련한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수도 관련 지표들은 목표순향도가 ‘맑음 ’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1995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시설투자에 집중한 결과 면단위 지역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수도 보급률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질 ‘ 좋음 ’ 등급 비율은 2018년의 비율이 2030 목표치 85%에 근접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2016년에도 84%를 달성하였다가 2017년 80%로 다시 감소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수질등급 달성률 및 상수도 누수율은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으나 2030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은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5년간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 지표는 물사용의 효율성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로서, 1인당 물사용량이 적을수록 물사용량이 적거나 누수량이 적음을 나타낸다. 이에 ‘지속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어 목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정책 이슈

-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수돗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상수도 시설 지속 정비 예정
- 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 대상 보급확대. 군 이하 농어촌지역 대상 80%까지 보급 2025년까지 전국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96%까지 향상시킬 예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 정책 추진을 통한 고품질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공급 증가
- 환경부는 누수로 새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하겠다는 방침임
-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고 있음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 전국상수도보급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97.4	97.7	97.9	98.1	98.5	98.6	98.8	98.9	99.1	99.2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text{급수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비고:

- 상수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뿐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

-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1995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
- 장·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증가 추세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2.7	85.8	87.1	88.2	90.2	91.5	92.3	92.7	94.3	94.8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text{상수도보급농어촌인구}}{\text{전체농어촌인구}} \times 100$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비고:

- 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은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구조,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
- 도·농간 상수도 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면단위 보급률 증가
- 장·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증가 추세

**세부목표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어촌하수도보급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2	55.2	59.5	62.1	63.7	65.9	67.1	68.7	70.1	72.6	85	

지표 정의:  $\frac{\text{하수처리구역 내 농어촌인구}}{\text{전체농어촌인구}} \times 100$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비고:

- 하수도 통계는 관로 및 처리장 등의 하수도 시설을 비롯해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 하수처리장의 유입·방류 수질, 하수도 처리원가 및 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 농어촌지역 등 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하수도시설 보급 확대를 통하여 2025년까지 전국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96%까지 향상시킬 예정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지역 확대 및 유입수질을 93%까지 개선 예정
- 장·단기 추세 모두 유의미한 증가 추세

**세부목표 6.3. (신규)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0.9	10.9	11	12.2	12.6	13.5	14.7	15.6	15.9	15.5	-	

지표 정의:  $\frac{\text{하수처리수 재이용량}}{\text{하수처리량}} \times 100$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비고:

- 물 재이용을 통한 효율적 수자원활용은 가뭄대응능력 향상 및 하천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일
- 물 재이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물의 가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 활용 필요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고품질의 공업용수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체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은 10년간 증가 추세이나, 최근 5년간 정체상태

### ◦ 수질등급달성률 (BOD 기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 값	71.1	75.4	73.9	80.9	-	85	

출처: 환경부 공고, 전국 수질목표기준 평가결과

비고:

-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전국 수질목표기준 평가 결과 중 BOD 기준에서의 수질등급 달성률
- 2030 목표는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함
-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30 목표 달성에는 부족함

### ◦ (참고)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

-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유기물의 농도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하여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함. 이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수질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를 통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2015년,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

◦ (참고)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 빗물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정의가 아직 불명확함. 다만, 개별 연구 등에서 일반적으로 빗물을 일정 시설물에 저장하여 잡용수 목적으로 활용하고 건물의 지붕, 도로 등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강우를 이수, 치수, 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본 지표의 개념적인 정의는 전체 지자체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빗물을 활용하는 지자체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지자체에서 강우의 범주에 맞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 비율’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 즉, 지자체별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률을 통해 지자체별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률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초지자체별 설치 규모 등을 꾸준히 추적 관리하되 이용의 효율성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통계 생성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빗물활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대비 연간 이용량’을 바탕으로 한 이용률을 대체 지표로 고려 가능. 2010년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추세. 2011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하여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청사로 법적시설이 확대·추가되었으며 현재는 민간 건물까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의무조성이 법제화되어 설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전국단위 전국 단위 빗물이용시설 설치 개소는 2010년 334개소에서 2017년 2,14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류 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세부목표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상수도 누수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 값	11.1	10.9	10.6	10.5	10.8	9.2	

지표 정의:  $\frac{\text{누수량}}{\text{총급수량}} \times 100$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비고:

-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누수율을 저감하면 신규 수자원 개발비용 절감과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최소화, 상수도 사업 경영 개선을 통한 재정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환경부는 누수로 새는 수돗물을 줄이고자 2028년까지 3조 962억 원을 투입하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중
-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연평균감소율로는 2030 목표 9.2%를 달성하기 어려움

◦ (참고) 물공급 안전율(%)

-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이 가능한 비율'로 정의
- 인구 증가와 이동성 증대, 각종 개발계획은 지역적 용수수요량의 변화를 초래하고 장래 물 부족의 원인이 됨
- 물공급 안전율의 가장 최근 산출치는 2013년도의 62.7%
- 환경부에서는 제 3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16-2025)을 통해 2025년까지 물공급안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79	278	282	280	282	287	289	295	지속 저감	

지표 정의:  $\frac{\text{유수량} - \text{분수량}}{\text{급수인구}} \times 365(\text{일})$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비고:

- 인구가 늘어나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 양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

어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면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용량을 키우는 것보다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
- 1인당 물 사용량이 적을수록 물 사용량이 적거나 누수량이 적음을 나타내어 수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환경부는 2000년 “물절약 종합대책(2000-2006)”을 수립·시행하여 2006년까지 1인당 급수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인당 물 사용량은 절감 효과는 부족함
- 지속 저감이 목표이나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 세부목표 6.5.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 (참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K-SDGs는 ‘목표수질 달성률(%)’을 지표로 제시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의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 효율성 제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광역·기초지자체별 그리고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 수계 효율적 관리,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임
- 시군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현재 국가 단위의 공식 통계는 산출되고 있지 못함

**세부목표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참고)생태하천복원율(%)**

-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 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중 해당 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임
- 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생태계 평가인자별 항목 및 점수를 통해 사업 필요 하천 선정(384개 하천, 2,660km)
- 2016 - 2020년 동안 선정된 하천을(234개 하천, 827km) 우선 복원하고 나머지 훼손된 하천(8,508km)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1년부터 복원 추진할 계획

**◦ 수질 ‘ 좋음 ’ 등급 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1	78	84	80.9	84.3	85	

지표 정의:  $\frac{\text{좋은 물 달성}}{\text{수질평가대상}}$

출처: 환경부, 전국 수질평가

비고

- 환경부의 전국 수질평가에 따른 좋은 물 달성 비율
- 2018년 ‘ 좋음 ’ 등급의 비율이 2030 목표에 근접.
- 현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제7장

##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제1절 개요

〈표 3-7〉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만호)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국가에너지효율지표 (Toe/백만원)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설정 필요
		○ 건물에너지효율지표 (Toe/m <sup>2</sup> ·년)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설정 필요
7-4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 친환경차 확대 수 (만대)		
		○ 친환경버스 확대 수	-	메타데이터 부재

K-SDGs 7번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는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총 4개 세부목표와 이에 관련한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지표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근 5년 동안의 증가 추세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확대 수’ 또한

최근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비록 본 보고서의 평가 기준에서는 2030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으나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므로 다음 모니터링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 속도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나,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와 대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8년 기준 56.5만 가구가 보급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장률로는 2030년 목표인 100만호 달성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효율지표’는 2011년 0.21(Toe/백만원)을 기록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0.2(Toe/백만원)을 기록하다가 2017년 0.19(Toe/백만원)을 기록,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는 세부목표에 부합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목표치 설정 이후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를 보류하였다.

### 관련 정책 이슈

- 본 보고서는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속도가 충분한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맑음☀️’으로 나왔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재생에너지 구성도 폐기물, 바이오, 수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은 미세먼지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구입단계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 세부목표 7.1. 에너지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49.5	52.4	54.6	56.5	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우리나라의 에너지접근성은 100%로 양적 측면의 목표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보장측면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015년도부터 시행
- 바우처사업의 확대 실행은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하고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장률로는 2030 목표인 100만호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치

### 세부목표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75	6.41	6.97	7.60	8.30	20	

지표 정의:  $\frac{\text{재생에너지 발전량}}{\text{총발전량}} \times 100$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비고:

-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발전량, 1차 에너지, 최종에너지 기준 모두 현저히 낮은 수준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폐기물, 바이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 지표만 봤을 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현 추세면 2030 목표치인 20% 달성 가능
- 본 보고서는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속도가 충분한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맑음☀️’ 으로 나왔음에 유의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01	4.55	4.72	5.25	5.56	13.6	

지표 정의: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 (IRES)에서 정의하는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생산+순수출-국제 해양 및 항공 병커 양의 축적 변화량으로 산정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비고:

- 총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태양광, 풍력 등 10개 에너지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고유가 상황 지속 등 외부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투자자와 민간참여에 힘입어 공급량 지속증가,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부 주도로 보급하고 있음
-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 추세면 2030 목표치인 13.6% 달성에는 부족
- 본 보고서는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속도가 충분한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맑거나 흐림☀️’ 으로 나왔음에 유의

### 세부목표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0.21	-	-	-	0.20	0.20	0.20	0.19	-	목표치 설정필요	보류

지표 정의:  $\frac{\text{총에너지투입량}}{GDP(US천\$)}$

출처: 산업부, 에너지통계연보 및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기재부, 국내총생산 지표 참조

비고:

-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효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 효율지표를 통해 국가 및 정책의 효율향상 정도를 확인가능하고, 정부의 비용 효율적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 현 K-SDGs에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 보류

#### ◦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년)

연도	2004	2007	2010	2013	2016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업무용	222.5	215.5	196.9	179	161.5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호텔	457.6	419.1	335.2	292.6	292.4		
병원	461.3	420.6	461.7	364	344.6		
상업용	397.5	356.1	236.2	198.8	179.5		
아파트	155.4	139.3	125.4	108.6	93.8		

지표 정의:

- 주거용건물 : 주거면적(㎡) 대비 연간에너지사용량(kgoe/년)
- 비주거용건물 : 건물연면적(㎡)당 연간에너지사용량(kgoe/년)

출처: 통계청 <http://kosis.kr>

비고:

- 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되고 있는 지표로, 건물준공년도·건물용도 등에 따라 적정에너지사용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가능
- 일부 선진국에서는 건물 신축 시 패시브기능 및 재생에너지 도입 강화. 기축건물은 건물효율화에 많은 장애가 있어 다양한 정책개발과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원단위 관련 DB는 대형건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중소형건물과 주거용 건물 관련 DB는 매우 부족하여 체계적인 에너지원단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모니터링기간 동안 꾸준히 지표 값이 감소하여 있어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 K-SDGs에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 보류

세부목표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 친환경차 확대 수(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075	2,907	5,914	13,826	31,696	880만대	

지표 정의: 친환경차 보급 대수

출처: 환경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현황

비고:

-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은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

- 전기차는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으로 평가되고 있음. 버스 및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혹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정책 추진
-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30 목표 도달에는 아직 부족함

제8장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제1절 개요

〈표 3-8〉 K-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률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물질 발자국	-	통계산출방안 제공
		○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	참고통계 제공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여성고용률(%)		
		○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사고사망만인율(%)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항목 개발 필요

K-SDGs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총 7개의 세부목표와 이에 관련된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8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간 GDP 성장률’은 최근 5년간 정체 상태에 있어 ‘흐림’ 평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2% 이상유지’와 같은 목표치 설정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피보험자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 정체상태에 있으나 2030목표인 2.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맑음’ 평가하였다.

‘인구집단별 고용률’에서는 성별에서는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연령별에서는 30대 고용률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성 및 나머지 연령대,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특별히 2030년까지 63.9% 달성이라는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다. 평가 결과 현재의 증가 추세면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추세 방향은 맞으나 2030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부족한 지표는 ‘남녀 임금격차’와 ‘사고사 망만인율’이다.

‘물질발자국’은 국내 자료에 대한 통계 출처가 부재하여 목표순항도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계를 서술하였고, ‘국내자원소비량’ 또한 UNEP에서 SDGs 통계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국내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산업자원부의 “국내 자원생산성기반 구축사업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국내 물질소비량에 대한 통계를 서술하였다.

### 관련 정책 이슈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에서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고용 지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 정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므로 노동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2	2.8	2.9	3.2	2.7	목표치 설정 필요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비고:

- 빈곤퇴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 최근 5년간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평가함
- 국가의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률 감소는 자연스러운 조건부 수렴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내수 증가세 둔화,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에의 의존성 심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 감소 등 다각도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세부목표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남성	76	75.9	75.9	76.3	75.9	목표치 설정 필요	
여성	55	55.7	56.1	56.9	57.2		
15-19세	7.7	7.8	8	8.4	7.4		
20-29세	57.4	57.9	58.2	57.6	57.9		
30-39세	74.1	74.4	74.7	75.3	75.7		
40-49세	79.1	79.1	79.3	79.4	79		
50-59세	74.2	74.4	74.3	75.3	75.2		
60-64세	58.5	59.6	59.7	60.6	59.4		
장애인	37	34.8	36.1	36.5	34.5		

지표 정의:  $\frac{15 \sim 64\text{세 취업자수}}{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모두 면접 조사를 통해 통계 수집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비고:

- 고용률은 일할 수 있는 인구 중 실제 노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시장 상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개인, 사회 및 경제에 유효한 정책 과제
- 장애인통계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함
- 여성과 50대 이상 고용률이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증가이며,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음
- 여성과 30대 고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나머지 성별, 연령대 별 고용률은 정체 상태에 있어 전체적으로 '흐림' 평가함

**세부목표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참고) 물질발자국**

- 천연자원의 안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원자재 확보에 있어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한 핵심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MF)은 자원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세계 원자재 공급망(supply chain)과 환경자원의 추출, 처리 및 소비에 대한 공동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공 (출처: Wiedmann et al. (2015))
- 최종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출된 총 원자재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특정 국가의 자원에 대한 최종수요(소비와 자본투자)가 국제적인 자원 추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물질적 생활수준을 대표.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내기도 함. 전 세계 총 물질발자국은 1990년 430억 톤에서 2000년 540억 톤, 2017년 920억 톤으로 증가. 2017년의 총 물질발자국은 2000년에 비해 70%, 1990년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로, 2000년 이후 천연자원 추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합당한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물질발자국은 2060년까지 1,900억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세계 물질발자국은 인구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출처: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19/goal-12/>)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한민국의 수치를 찾을 수는 있지만 물질발자국 산식에 필요한 데이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자료의 분명한 국내 출처를 찾을 수 없음.
- 국내의 전체 물질발자국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및 GDP당 물질발자국은 유사한 수준

◦ (참고) 국내물질소비량(DMC)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당 DMC(톤)	13.88	14.34	14.39	14.83	15.03
DMC (백만톤)	581.13	606.48	615.67	641.18	655.2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생산성기반구축사업보고서

- 국내물질소비량(DMC)이란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하고, 국내 환경에서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계산
- UNEP에서 SDGs 통계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의 정확한 국내 출처 불분명
- 매년 국내물질소비량에 대한 자료는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2000년도 이후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해외에서도 자국의 자원소비량에 대한 목표치 설정은 하지 않음. 감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예측은 불가

세부목표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여성고용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5	55.7	56.1	56.9	57.2	63.9	

지표 정의:  $\frac{15 \sim 64\text{세 여성 취업자 수}}{15 \sim 64\text{세 여성 인구}} \times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고:

- 고용률 지표에 대한 설명은 세부목표 8.1의 인구집단별 고용률 참조
-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현재의 증가율을 유지하면 2030 목표인 63.9%를 달성 가능

### ◦ 남녀 임금격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4.1	63.8	64.6	65.9	67.8	85.5	

지표 정의: 고용형태별 임금 및 평균 근로 시간을 활용하여 평균 시간당 임금 계산 후,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총액}}{\text{남성시간당임금총액}} \times 100(\%)$$

\* 시간당임금총액 = 월임금총액/총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비고: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 여성권한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경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찾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녀의 평균 시간당 임금 차이는 2006년부터 측정되고 있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여부와 격차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실질적 통계수단 부재
-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구조, 산업 특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 최근 5년간 2030 목표인 85.5%를 향해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추세임

## 세부목표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2.1	70.1	80	79.4	82.1	목표치 설정 필요	

지표 정의:  $\frac{\text{청년고용의무제이행기관수}}{\text{청년고용의무제적용대상기관수}} \times 100(\%)$

출처: 고용노동부,

비고:

-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개인, 사회 및 경제에 매우 유효한 정책 과제임. 이에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 청년고용이 의무화된 14년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확대되어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실제로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있음
-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지표이나 현 추세면 2030년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4.1	4.9	5.4	4.5	3.8	3.1	3.6	2.4	2.4	3.7	2.3	

지표 정의:  $\frac{\text{금년도피보험자수} - \text{전년도피보험자수}}{\text{전년도피보험자수}} \times 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평가결과:

-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책 모색 절실.
- 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기준과 자산 총액

기준을 따르나, 고용보험 DB의 규모별 피보험자 현황으로는 현 시행령 기준의 중소기업 피보험자 현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의 기준인 3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음.

- ‘피보험자 증가율’ 은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 정체상태에 있으나 2030목표인 2.3%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 평가함
- (참고)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은 75.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국민연금은 69.5%, 고용보험은 70.9%로 각각 -0.3%p, -0.7%p 하락하였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48.0%로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 국민연금은 37.9%로 1.3%p 상승, 고용보험은 44.9%로 1.3%p 상승하였음

**세부목표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사고사망만인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0.58	0.53	0.53	0.52	0.51	0.22	☀️

지표 정의:  $\frac{\text{업무상사고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비고:

-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 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 증가할 전망
- 한국의 경우 다양한 수준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OECD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고용안정성의 저하에 직면한 노동자들, 예컨대 하청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더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이주 여부나 고용 형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 이주노동자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할 필요성이 있음
-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세부목표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 기여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1.55	1.44	1.35	1.44	1.40	1.34	5	

지표 정의:  $\frac{\text{관광사업체연간총매출액}}{\text{국내총생산(명목)}} \times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비고:

-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아시아지역을 상대로 문화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밖의 선진서비스산업국이 선점한 고부가가치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표의 영향력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평가할 여지가 있음
- 2030년 5%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이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9장**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제1절 개요**

〈표 3-9〉 K-SDGs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로 보급률(km/천명) ※ 도로연장km/인구천명		
		○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	정량평가보류. 지표방향 불명확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통계산출방안 제공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대체통계 제공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통계산출방안 제공
		○ 국내 자원생산성 (GDP /DMC), 자원강도(DMC/ GDP)		

K-SDGs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목표이다. 총 5개의 세부 목표와 이에 관련된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5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도로보급률’과 ‘디지털정보 접근성’은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8년 기준 4.53%로 2030목표인 4.29%를 초과달성하였다.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은 통계산출방법이 필요한 지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 산출방법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자원생산성’ 혹은 ‘국내 자원강도’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계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평가 결과 자료 가용한 최근 5년간 큰 변화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은 통계청의 연도별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계의 교통 지출 비중을 산출할 수 있으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표의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아 평가는 보류하였다.

## 관련 정책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확정하였다. 제5차 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03.) “국민 지역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 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도로 보급률(km/천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06	2.09	2.1	2.13	2.14	2.16	

지표 정의: 
$$\frac{\text{도로연장 (km)}}{\sqrt{\text{국토면적 (km}^2\text{)} \times \text{인구 (1000명)}}$$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비고:

- 도로연장이란 도로의 총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연장
- 현재의 연평균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목표 달성 가능

### ◦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3.1	12.5	12.1	15.1	13.7	-	보류

지표 정의: 
$$\frac{\text{교통부문 소비지출}}{\text{전국가구소비지출}} \times 1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비고:

- 가계의 지출항목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물리적인 정보접근성을 측정함
- UN SDGs의 해당 목표의 지표는 운송 및 이동과 경제발전과의 강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인프라적 차원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반면, 가계에서 교통 이용의 소비 비중을 측정하는 것은 산출 결과 값의 방향이 불분명하며, 목표치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 지표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재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 지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 보류

####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2.3	73.7	84.5	91	91.1	97.4	

지표 정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구조화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를 통해 1)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와 2) 인터넷 상시접속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일 반국민의 지수를 100으로 하여 그 격차를 파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비고:

-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
-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에 대한 형평성 유지 여부를 파악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지수를 평가
- 2014년 처음 산출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세부목표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 (참고)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본 지표는 통계산출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지표로 종사자 수(직원수)가 5-19명으로 구성된 국내의 전체 ‘소규모 사업체’ 중에서 부채나 신용대출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을 산출하여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금융 기관이 얼마나 소규모 사업체를 잘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나타냄.
- “소규모 산업”은 적은 자본,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 및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운영. 식품, 의류, 가구 등과 같은 기본 소비재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및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현재 소규모 산업체에 대한 정의가 KOSIS 통계표의 기준과 UN이 소규모 산업체를 규정하는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 지표 개발 시 검토 필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규모가 분류되고 있어 UN의 기업 규모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원자료에 산업체별 종사자 수를 기입하는 항목이 있어서 UN 기준에 맞는 소기업 산업체 수 산출 가능
- 하지만 현재의 통계산출로는 UN의 부채 및 신용대출 조건과 일치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단순한 부채 여부 및 액수 정보만 제한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음

**세부목표 9.3. (신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참고) 사업화 R&D 과제 지원 건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표값	21,205	20,088	28,025	32,99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평가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을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정부가 국가적인과학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기초연구 · 생명연구 · 원자력연구 · 우주기술 · 정보통신 기술 등 각 분야별로 연구개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K-SDGs에서는 ‘R&D 과제의 사업화성공률’을 지표 명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R&D 전체로는 사업화성공률을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 않음
-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를 통해, 국가 R&D 성과보고서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사업화건수도 공개

-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관측기간인 2015년-2017년 동안 큰 변화 없음
- 본래의 K-SDGs 9번 목표인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사업화성공률보다는 ‘혁신적인 R&D’의 촉진 및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

**세부목표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08	3.98	3.99	4.29	4.53	4.29	

지표 정의:  $\frac{\text{국가 연구개발비}}{GDP} \times 10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비고:

-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연구개발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에 대한 역량 강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 2018년 기준 2030 목표를 초과달성

**세부목표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인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참고)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집중도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중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중요한 척도임

- 부가가치 단위를 확정하기 전에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국내 정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 CO<sub>2</sub>eq.)을 당해 연도 GDP로 나눈 수치(10억원 기준) 이때 온실가스란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 PFC, SF<sub>6</sub>를 말함.
- 2018년 한국은행 발간 GDP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2016년도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59.7톤CO<sub>2</sub>eq./10억원으로 1990년도 698.3톤CO<sub>2</sub>eq./10억원 대비 34.2%, 2015년도 472.4톤 CO<sub>2</sub>eq./10억원 대비 2.7% 감소.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GDP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총배출량과 GDP 모두 감소. 1998년 이후 두 지표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감률에 비해 GDP 증감률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감소하는 경향. 2010년, 2011년에는 2009년 악화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

◦ (참고) 국내물질소비량(DMC)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DMC (백만톤)	581.13	606.48	615.67	641.18	655.29	-	
자원생산성 GDP/DMC (10억\$/백만톤)	2.20	2.26	2.41	2.29	2.29	3.03	
자원강도 DMC/GDP (백만톤/10억\$)	0.45	0.44	0.41	0.44	0.44	0.3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생산성기반구축사업보고서 (DMC)

한국은행, 국민소득 (GDP)

- 국내물질소비량(DMC)이란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하고, 국내 환경에서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계산
- 자원생산성 및 자원강도는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 정체상태에 있음
- 매년 국내물질소비량에 대한 자료는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제10장

##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제1절 개요

〈표 3-10〉 K-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평가 결과	비고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가구소득/ $\sqrt{n}$ (n : 가구원수)	-	지표설명 제공
		○ 소득격차비율(%)	-	메타데이터 부재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소득 5분위 배율	-	정량평가 보류. 최신통계 부재
		○ 인구집단별 빈곤율(%) (노인빈곤율)	-	참고통계 제공
		○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	참고통계 제공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인구집단별 고용률(%) (55세 이상 고용률)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참고통계 제공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GDP 대비 가계소득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 기준 준수 정도	-	참고통계 제공
		○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	참고통계 제공

K-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는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보건, 교육, 자산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다. 총 5개의 세부 목표

와 이에 관련된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지표는 총 3개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목표치 수립 당시 5.1의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2015년의 OECD 평균인 6.62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득분위 구별을 위해서는 분위 경계 값을 산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로는 경계 값을 알 수가 없어 평가를 보류하였다.

‘5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의 경우, 최근 5년 중 자료가용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2030 목표인 55%를 달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성장률이고, GDP 대비 가계소득은 2015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은 현재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얻을 수 없다. 통계청은 현재 가계소득을 소득 5분위(또는 10분위)로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어 본 지표 분석을 위해서는 하위 40% 가구의 1인당 소득 증감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노인빈곤율’,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부재한 상태이다.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빈곤율을 ‘전체 노인 중 빈곤선(40%, 50%, 60%) 아래에 있는 노인의 비율’로 정의하여 매년 「빈곤통계연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참고 통계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제공하였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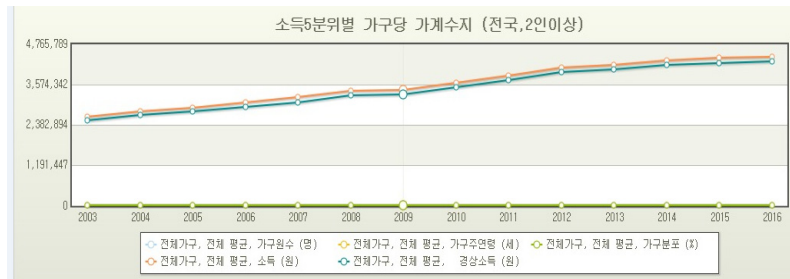
**세부목표 10.1. 하위 40%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참고)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하위 10% 인구의 실질 시장소득은 감소하였고, 10-20% 인구의 실질 시장소득 증가율은 전체 인구의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던 바, 이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이 자료를 현재 소득 10분위 또는 5분위 가구별로 분기

별로 제공하고 있음. 지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위 40% 가구의 1인당 소득 증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변형된 형태의 자료가 필요

- 현재 소득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가 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추가 필요
- 하위소득가구는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분 아니라 지출정도를 반영하는 지표구성 또한 고려 가능



〈그림〉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

자료: 통계청 “KOSIS 100대지표” 중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

**세부목표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소득 5분위 배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41	5.11	5.45	5.1	-	5.1	보류

지표 정의:  $\frac{\text{소득상위 20\% (5분위) 계층의 소득}}{\text{소득하위 20\% (1분위) 계층의 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고:

- ‘5분위 배율’은 5분위와 1분위 소득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1 이상의 값을 갖고,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함을 의미.
- K-SDGs의 2030 목표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인 6.62보다 낮은 5.1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 2016년에는 배율이 늘어났다가 2017년에는 목표치에 재 도달하였으나, 2018년 자료를 알 수 없어 평가 보류

◦ (참고) 노인빈곤율,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점유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여 매년 「빈곤통계연보」 발간
- 「빈곤통계연보」에서는 노인 빈곤율의 기준빈곤선을 중위소득·지출의 40%, 50%, 60%로 하여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음
- 2019년 빈곤통계연보 기준 노인빈곤율은 아래와 같음

〈표 3-15〉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년도 빈곤통계연보)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12	52.3	60.0	66.5	41.2	50.6	58.1	39.3	48.2	56.4	22.7	35.8	47.7	26.4	38.5	50.2
2013	54.0	60.6	67.5	41.3	50.6	58.4	39.1	47.5	56.9	23.9	37.4	49.6	27.7	40.0	52.1
2014	55.0	62.1	68.1	39.6	49.5	57.5	37.2	47.2	56.0	26.0	40.0	52.5	29.2	43.3	55.1
2015	56.2	63.3	70.3	36.9	47.6	56.1	34.7	44.7	53.9	24.1	38.5	51.2	27.9	42.7	53.5
2016	58.3	65.7	71.8	38.9	49.4	57.7	36.3	46.7	55.3	24.3	39.5	51.7	28.9	43.2	54.3

주: 농어가 제외. 단, 지출 자료의 경우 2017년부터 농어가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16〉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16	51.7	58.7	64.8	36.2	45.8	53.1	34.2	43.6	51.4	24.6	37.7	49.9	33.0	45.1	54.6
2017	51.0	58.4	64.8	35.4	44.4	52.6	33.2	42.3	50.6	23.5	35.8	47.2	31.1	42.8	53.0
2018	51.7	59.9	65.4	35.2	44.1	52.7	32.7	42.0	50.4	22.8	36.2	48.0	31.3	43.0	53.9

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 가구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빈곤통계연보」

- 또한, 빈곤통계연보에서는 가처분소득 및 시장소득분위별 순자산점유율 통계 제공

〈표〉 소득 1, 2분위별 순자산점유율

가처분소득 분위별				시장소득 분위별			
연도	2016	2017	2018	연도	2016	2017	2018
1분위	5.09	5.06	4.73	1분위	5.09	5.06	4.73
2분위	5.33	5.48	5.33	2분위	5.33	5.48	5.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빈곤통계연보」 p.80-81에서 발췌

### 세부목표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 인구집단별 고용률(%)(55세 이상 고용률)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6.1	47.2	48.2	48.1	48.4	-	-	55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비고:

- 고령화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시행
- “제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1년까지 55세 이상 고용률을 52%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임. 이는 경제활동인구 본 조사를 활용하여 연도별 증가치 등을 반영한 수치
-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8년 기준 최근 5년인 2014년부터는 정체 상태에 있음

#### ◦ (참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4월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발표.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은 34.8%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1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도 조사하였는데, 79.9%로 본인에 대한 차별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음 (오욱찬(2018),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세부목표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GDP 대비 가계소득**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7.4	55.4	55.7	56.0	56.5	56.9	57.1	56.2	55.7	-		

지표 정의: (가계 총 가치분소득)/(국내 총 생산)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평가결과

-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20년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음.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2위. OECD의 2016년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재분배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부문의 이익이 가계부문으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sup>19)</sup>
-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지표이나, 최근 5년간 정체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에 의해 ‘흐림’ 평가

19) 연합뉴스 (2016.03.27.) “韓 GDP e대비 가계소득 비율 20년간 급락...하락폭 OECD 2위”

###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 (참고)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 이주민들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크며 산업재해를 당하는 비율도 이주민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표.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주자의 산업재해율과 이주자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률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농업, 임업, 어업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안 된 경우가 많고 산재 가입이 되어있어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특히 산업재해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음
- ‘전체 재해율’ 및 ‘사망만인률’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외국인 통계는 현재 미공개로 공문 요청 시 제공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산업재해율’은 내국인 0.5, 외국인 0.91, ‘사망만인률’은 내국인 1.01, 외국인 1.28임. 특히 건설업의 사망만인률이 내국인과 큰 차이를 보임.

#### ◦ (참고)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 이주민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등 건강관리에 있어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큼
- 국내 이주민 대상 실태조사들에 따르면 이주민의 건강상황은 전체적으로는 선주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인데, 이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인구연령구성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큼. 즉 이주민이 선주민에 비해 젊고 건강한 연령대가 많기 때문임
- 이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고령 이주민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선주민보다 나쁜 것으로 파악됨
- 이민자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이주민 미충족의료 경험, 이민자의 건강보험가입비율 등으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① “이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응답자가 평가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 중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로 정의. OECD와 EU 이민자 통합지표에서도 본 문항이 활용되고 있기에 국제 비교 용이. 이주민 연령구조를 선주민(국내출생자) 연령구조로 조정한 지표 생성이 필요함

- ② “미충족의료경험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에 대해 ‘있다’에 응답한 비율로, OECD, EU, 캐나다 통합지표에 모두 포함됨
- ③ “이주민의 건강보험가입비율” 또한 객관적 지표로 국제비교 용이

**제11장**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제1절 개요**

〈표 3-11〉 K-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통계 제공/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최근 통계 부재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지표설명 제공
		○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지표설명 제공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b>추세분석 평가</b>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b>추세분석 평가</b>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지표설명 제공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미세먼지 나쁨일수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톤/일*GDP 10억원)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 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m <sup>2</sup> )		<b>목표치 기반 평가</b>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	통계산출방안 제공
		○ 보도면적 비율	-	통계산출방안 제공
		○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	통계산출방안 제공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	-	지표설명 제공

※참고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시가화지역 중 이용 토지 또는 미개발지 면적에 대한 통계청 자료 부재로 인해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세계문화유산 보존, 보호 예산액: 통계청에서 문화재 세입예산 및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계문화유산에 특정한 보호 예산액 통계는 따로 산출하고 있지 않음

K-SDGs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이다. 8개의 세부목표와 이에 대응하는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K-SDGs 11에서 국가 공식통계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 지표 개수는 총 10개였으나, 이중 3개 지표는 목표순향도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는 2018년 기준에서 10년간 2009, 2010, 2015, 2018년에 한건씩 등재되었다. 2030년까지의 총 등재건수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보류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하여 세계 유산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전국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처음 집계했던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DP 당 일별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당 일별 배출량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보류하였다.

11번 목표의 지표 중에서 2030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지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호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은 2030 목표인 50%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나 현재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에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재정,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은 5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5년 단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나 5년 단위 자료만 존재하여 단기 추세를 파악할 수 없어 평가는 보류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지표 값만 제공하였다.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은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17년과 2018년 두 개의 자료뿐으로 통계적 추세를 파악할 수 없어 본 보고서에서 평가는 보류하고 지표 값만 제공하였다.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보도면적 비율”,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은 통계 산출방법을 먼저 개발해야 하는 지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 관련 정책 이슈

-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예정되어 있다.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해 한하여 행정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사유지 개발 제한이 해제된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139	146	149	162	171	194	227	246	299	지속 확대	


지표 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비고:

- 임대주택 재고는 현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득하여 임대 중에 있는 주택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도별, 유형별, 사업주체별, 임대기간별 재고량을 파악하여 임대주택 동향조사 및 임대주택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임대되고 있는 물량
- 장·단기 추세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추세에 있음

### ◦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수급가수	-	-	94.5	93.6	107	지속확대	
재정	-	-	1.03	0.94	1.13		

지표 정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소요되는 재정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상황

비고:

- 주거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43%는 주거급여 수급이 절실한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수급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최근 3년간 수급 가구수 및 재정에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

**세부목표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0.3	41.9	39.6	41.5	42	40.3	41.3	44.6	43.2	-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text{대중교통수단 여객수송실적}}{\text{육상 교통수단 총 여객수송실적}} \times 100$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통계

비고:

-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중교통 등 에너지 효율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저조
-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 혼잡과 에너지 소비, 오염물질 배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대중교통의 확충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중요
- 장·단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세 없는 정체상태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8.5	20.7	22.3	22.4	23.4	50	

지표 정의:  $\frac{\text{저상버스 대수}}{\text{지내버스 대수}} \times 100$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 종합일반/저상버스 도입 현황

평가결과:

- K-SDGs 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기준으로 2030 목표치를 제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른 통계. 2017년 통계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2016년 이전 통계는 국토교통부 보조금 지원물량 기준으로 작성됨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성장률로 2030 목표 50%를 달성 불가

◦ (참고) 자전거 수단분담률

연도	2000	2005	2010	2015
통근·통학 수단분담률	1.37%	1.24%	1.66%	1.43%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 통계 및 정책자료실<sup>20)</sup>


원 자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비고:

- K-SDGs는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지표로 ‘자전거 수단분담률’ 제시
- 통계청의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통계
- 통계청 원자료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수치
- 통근·통학 목적의 통행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각 수단별 인구를 기준으로 한 자료임. 따라서 모든 목적의 통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인구가 아닌 통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상적인 수단분담률과 차이가 있음. 또한 1년 동안의 총수송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단분담률과 차이가 있음

20)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2&q\\_bbscttSn=20180409173214242](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2&q_bbscttSn=20180409173214242)

◦ (참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0.40	0.41	0.43	0.44	0.55	

지표 정의: 전국 자전거도로 총 길이를 인구수로 나눈 값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비고:

- K-SDGs는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지표로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제시
-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자전거 이용 현황”을 승인 통계로 제공
- 자전거도로 연장은 전국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합을 말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최근 4년간의 증가 추세면 2030 목표인 0.55m/인 달성 가능

세부목표 11.3.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참고)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도시 토지이용의 복합성과 압축성을 강화하여 토지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로, 압축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외곽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시가화지역 내에서 도시개발을 촉진적으로 실행했는지를 이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도시 토지이용의 복합성과 압축성을 강화하여 토지자원을 절약한 정도’로 정의해볼 수 있음. 지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 시가화지역 중 이용 토지 또는 미개발지 면적에 대한 공식 통계청 자료가 부족함
- ‘시가화지역 증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

$$\text{시가화지역 증진율} = 100 - \frac{\text{미개발지 면적}}{\text{시가화지역 면적}} \times 100$$

◦ **(참고)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행정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적, 대의적 도시계획 제도는 시민의 생활 도시계획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계획의 책임성을 저해함. 시민의 직접적인 도시계획 수립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수요와 생활중심적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 시민 참여로 수립되는 도시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실행을 담보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제도를 정립하는데 필요함
- ‘직접 시민참여 방식의 도시계획 수립 제도를 정립하여 시민주도 도시공동체를 형성한 정도’로 지표를 정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개념 정의 및 메타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세부목표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	1	0	0	0	0	1	0	0	1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의 세계유산

비고:

- 국내에서 발굴하여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유산의 등재건수는 국내의 문화유산 보호의 노력에도 직접적 관련이 있음
- 국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발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자체와 정부, 전문가 역량을 표현하는 지표임
- 간헐적으로 1건씩 등재 증으로 평가 보류함

◦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연도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세입예산 (백만원)	39,127	40,459	40,459	목표치 설정 필요	평가 보류
기금수입 (백만원)	151,730	133,463	126,993		

지표 정의: 국가가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와 유지에 지출하는 예산 규모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현황

비고:

- 각 국가와 지방정부가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들이는 노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증진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 등으로 지표 재정의 필요

세부목표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4.7	13.6	13.4	14.5	14.2	13.5	12.0	12.8	11.6	11.1	지속 감소	

지표 정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인구수)×100

- 사고 유형: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 환경오염, 공단내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청(2019),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비고:

- 매년 화재, 도로교통, 산불, 붕괴, 폭발 등 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이며, 각 자료는 소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을 취합한 자료임

- 2018년 기준 2017년과 비교 시 사고발생현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사고와 산불은 감소하였지만 수난, 등산, 환경오염 사고 등이 증가하여 전체 사고건수는 소폭 증가<sup>21)</sup>
- 장·단기 추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속 감소 중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258.87	167.62	208.26	188.50	224.56	목표치 설정 필요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표값	281.67	119.64	204.81	266.77	313.74		

지표 정의:  $\frac{\text{자연재난복구비}}{\text{자연재난피해액}} \times 100$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비고: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이후 투입 요구되는 복구자원의 양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련 회복력과 적응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 장·단기 모두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

◦ **(참고)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한 지방정부 비율” 로 정의할 수 있음
- 복합재난 등 불확실성이 큰 재난에 도시 차원의 사전 예방적 대응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임.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와 복합재난 위험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의 장기간 축적과 공유를 통한 지자체별 맞춤형 계획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황자료에서 지표 값을 확인하기 어려움. 메타데이터의 보완 필요

21) e-나라지표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7) 검색일: 2020.07.20

### 세부목표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 미세먼지 나쁨일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	62	62	60	59	목표치 설정 필요	보류

지표 정의: 대기 연월보(도시측정망과 국가 PM<sub>2.5</sub> 측정망) 통계자료에서 일평균 농도가 기준(35 $\mu\text{g}/\text{m}^3$ )을 초과한 날의 수를 조사

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비고:

- 도시의 대기질을 미세먼지로 판단한다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
-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은 도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도시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PM<sub>2.5</sub>의 농도를 국가측정망에서 측정함
-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목표치 설정 이후 이에 따른 평가가 필요함

####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일\*GDP 10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생활계	0.042	0.037	0.035	0.034	0.032	0.031	0.030	0.030	0.029	0.030	-	보류
사업장 배출 시설계	0.012	0.104	0.099	0.102	0.099	0.098	0.094	0.093	0.090	0.089		

지표 정의: 생활계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톤/일)/GDP10억원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은행, 국민소득

비고:

- 도시화의 영향으로 폐기물 매립지 부족, 소각장 운영, 재활용 대란 등의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정책 추진 필요

- 폐기물발생량은 시·군·구 단위의 가정,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비가연성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시설 등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양을 매년 기초지자체 단위로 조사함
- GDP당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장·단기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GDP당 일별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2030 목표치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는 보류함

**세부목표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6	8.8	9.2	9.6	10.1	11.6	

지표 정의:  $\frac{\text{도시공원 조성면적}}{\text{도시지역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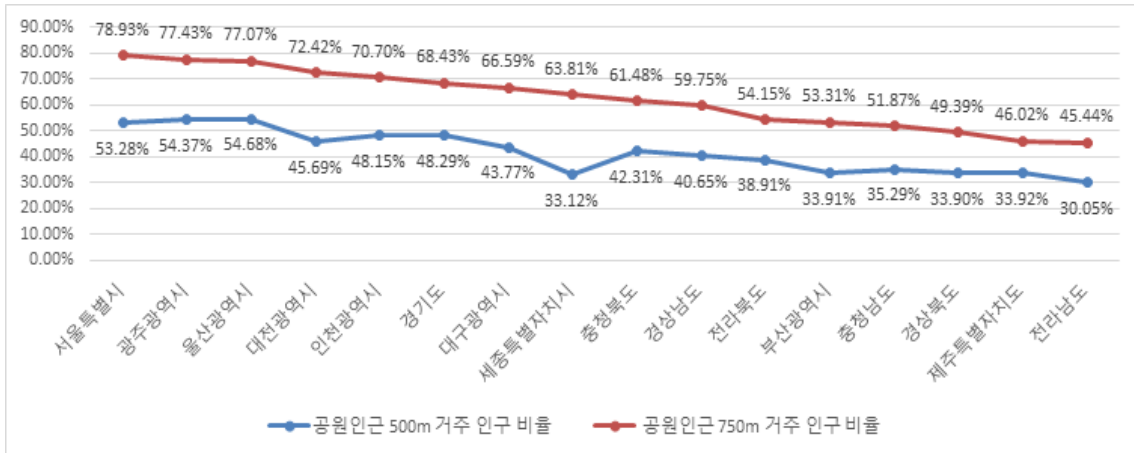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비고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생태계 다양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현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 (참고)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공원 녹지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의 수 및 비율을 산출하여 지속가능 도시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제안된 지표
- ‘공원 접근이 용이한 인구’는 생활권 공원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750m 이내 거주하는 인구로 정의. ‘공원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율’은 시군구 거주인구 대비 ‘공원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율로 정의
- 국토교통부가 연간 발행하는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통해 통계 산출 가능



전국 광역시도별 공원인근 거주인구 비율

자료: 국토교통부(2018)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참고) 보도면적 비율

- 안전하며 접근이 용이한 보행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포용적인 공공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의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 ‘전체 도로’ 대비 ‘보도 면적’을 ‘보도면적 비율’로 정의. ‘전체 도로’는 국가승인통계인 ‘도시계획현황’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정의된 것 중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사용. ‘보도면적’은 시도별 또는 지자체별로 산출한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적자료 사용

$$\text{보도면적 비율} = \frac{\text{보도면적}}{\text{전체도로면적}} \times 100(\%)$$

- 보도 면적의 산출, 집계 체계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으며, 국토부 지정 도시계획현황 자료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와 시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보도'의 면적 산출이 상이함. 2020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동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북도 경산시·군위군·안동시의 면적 비율 산출 가능

〈표〉 서울시 보도면적 비율

지역	보도면적 비율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시	11.80%	11.28%	11.31%	11.60%	11.60%

자료: 서울시 보도현황 통계보고(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 (참고)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 장애인 및 노약자가 건축물에 접근하고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을 공평하고 유연하게 보장하며, 이들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또한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타인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하며, 무장애 공간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 모든 공간과 시설에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실현되어야 함
-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은 지역 내 공공건축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그 설치의 정도가 적정한 건축물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통계산출 가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에 따라 선발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및 작성

공공건축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

	설치율	적정 설치율	도달율
2013	67.49%	59.43%	88.06%
2018	80.14%	74.38%	92.81%

$$\text{설치율} = \frac{\text{장애인편의시설설치수}}{\text{대상건축물내설치기준항목수}} \times 100\%$$

$$\text{적정설치율} = \frac{\text{장애인편의시설적정설치수}}{\text{대상건축물내설치기준항목수}} \times 100\%$$

$$\text{도달율} = \frac{\text{적정설치율}}{\text{설치율}} \times 100(\%)$$

**세부목표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 **(참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

- 국가 전체적으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저성장 및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와 농촌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통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수’로 정의할 수 있음
-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표이므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표 값은 없음

## 제12장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



## 제1절 개요

〈표 3-12〉 K-SDGs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	자원순환 기본계획 소개
		○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	-	지표 소개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물질발자국	-	통계산출방안 제공
		○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	참고통계 제공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식품 손실 지표	-	통계산출방안 제공
		○ 식품 폐기물 지표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	참고통계 제공
		○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	참고통계 제공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설정 필요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지표정의 불명확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로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통계산출방안 제공
		○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	통계산출방안 제공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탄소·생태발자국	-	지표 소개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관련연구 소개

※참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증가율: 국내 발간되는 지속가능보고서 동향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에서 조사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 존재. 최근 연도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기 어렵고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본 보고서 평가에서는 제외
- GDP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메타데이터가 부재함. 김종호 외(2017)의 연구에서 산출방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데이터는 없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함

12 번째 K-SDGs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로, 11개 세부목표와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개 지표 중 총 7개의 지표가 국가 공식 통계로부터 도출되는 가용 통계였고, '생활용품 녹색제품 인증건수' 지표만 평가를 보류하고 나머지 지표에 대해 목표순항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 2조 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생활용품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을 모두 포괄하므로 두 건수의 합으로 정의하였는데, 장·단기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었으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평가는 보류하였다.

'사고 대비 화학물질 수',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은 목표치에 2030 목표치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비율도 점점 좋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현재의 평균성장률로 2030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물' 지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에 폐기하는 식품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10년의 장기 추세 및 5년간의 단기 추세에 특정한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12번 목표에는 2030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표가 두 개 있다.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저감이 목표이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고,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2030년 75점이 목표였으나 2018년 57.1점으로 2013년의 65.5점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관련 정책 이슈

- '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위 법에 따라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수립
- 현재 국내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동향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공식통계로서 통계를 생산해야 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일반국민의 환경의식수준을 국가지속가능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유지해야 함. 신뢰도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문 설계가 보완되어야 함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 세부목표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 (참고)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정책이 국가단위 실행계획이나 여타 다른 계획에 주류화(mainstream)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 계획 및 실행체계 필요
- 현재 국내 소비생산구조가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로 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절차 필요
- 순환자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순환자원 이용이 불편하게 만드는 제품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체제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인 법 집행과 더불어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생산-유통-소비자단체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자발적 이행 유도 필요
  - 1단계(2018~2019년)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더불어 계획 수립 방법론 및 이행체계 수립 연구
  - 2단계(2020~2021년) : 법률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마련
  - 3단계(2022~2030년) : 국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이행평가 체계화를 위해 이행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연차별 지표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추진

#### ◦ (참고) 국가 지속가능 생산소비계획 수립 여부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본계획은 지금까지의 소비·생산에 걸친 지속불가능한 경제 형태를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지속성 및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 사회의 각종 경제활동에 기인한 환경오염 배출 및 자원에너지 사용의 저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촉진하며, 나아가 지구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메가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불가능한 경제행태를 시정·보완하는 계기로 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에너지융합리화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기존 국가계획에서 상당부문 언급되고 있음

## 세부목표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 (참고) 물질발자국

- 천연자원의 안보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원자재 확보에 있어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한 핵심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은 자원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세계 원자재 공급망(supply chain)과 환경자원의 추출, 처리 및 소비에 대한 공동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공(출처: <https://www.pnas.org/content/pnas/112/20/6271.full.pdf>)
- 최종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출된 총 원자재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특정 국가의 자원에 대한 최종수요(소비와 자본투자)가 국제적인 자원 추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물질적 생활수준을 대표.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내기도 함. 전 세계 총 물질발자국은 1990년 430억 톤에서 2000년 540억 톤, 2017년 920억 톤으로 증가. 2017년의 총 물질발자국은 2000년에 비해 70%, 1990년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로, 2000년 이후 천연자원 추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합당한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물질발자국은 2060년까지 1,900억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세계 물질발자국은 인구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출처: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19/goal-12/>)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한민국의 수치를 찾을 수는 있지만 MF 산식에 필요한 데이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자료의 분명한 국내 출처를 찾을 수 없음.

- 국내의 전체 MF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및 GDP 당 MF는 유사한 수준

◦ **(참고) 국내물질소비량(DMC)**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당 DMC(톤)	13.88	14.34	14.39	14.83	15.03
DMC(백만톤)	581.13	606.48	615.67	641.18	655.2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생산성기반구축사업보고서

- 국내물질소비량(DMC)이란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하고, 국내 환경에서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계산
- UNEP에서 SDGs 통계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의 정확한 국내 출처 불분명
- 매년 국내물질소비량에 대한 자료는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2000년도 이후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해외에서도 자국의 자원소비량에 대한 목표치 설정은 하지 않음. 감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예측은 불가

**세부목표 12.3. 식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참고) 식품손실지표**

- 농업은 토지와 물의 주요 사용처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식품 시스템은 식량 안보와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 식품손실 지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상품의 공급망에 따른 식량 손실 비율의 변화지수'로 정의할 수 있음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SDG 지표 틀에서 측정할 식량 손실을 정의할 것을 제안. 식량 손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폐기, 소각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확 이후 / 도축 생산 /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re-enter)되지 않는 모든 농작물 및 가축 식용 상품(예컨대 동물 사료, 산업용도 등)의 손실’을 의미. 수입된 수량에서 보관, 운송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역시 모두 포함되며, 비식용 부위를 가진 모든 상품에 적용
- 식품 망 내의 식품손실 지수(Food Loss Index: 이하 FLI) 범위: SDG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을 위한 식량 손실 지수는 농장에서 수확 후 작업을 시작점으로 소매 수준점까지(소매 시점과 이후 손실은 미포함) 범위로 적용되며, 식품 대차 대조표’(Food Balance Sheets, 이하 FBS) 프레임워크와 연계. 국가 차원에서 지수의 범위는 비교를 위해 5개의 주제로(headings) 국가가 설정한 10가지 주요 상품으로 좁혀짐. 국가는 1회 조사(ad hoc survey)를 통해 생산 개념을 조정하여 지수 범위에서 수확 손실을 포함 할 수 있음

◦ **식품 폐기물 지표**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3,701	13,429	13,264	13,037	12,501	13,222	14,220	14,389	14,400	14,477	-	

지표 정의: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량)/(인구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에 폐기하는 식품의 양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평가결과: 장·단기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음

**세부목표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참고) 유해성 정보 화학물질(개)**

- 환경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2017.10.18.)”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이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
-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던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 개편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에서 고시하고 있음. 확보한 유해성정보물질의 누적치는 아래와 같음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해성정보물질 누적확보 수 (개)	16	274	791	1,143	1,694

◦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개)**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6	56	-	-	-	-	69	69	97	-	140	


지표 정의: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물질의 수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비고:

- 국내에서 법적으로 화학 사고를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 수를 점차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필요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함
- 현재의 장·단기 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4.0	66.3	69.6	91.3	90.6	96.2	97.9	100.7	105.1	108.4	지속 감소	

지표 정의:  $\frac{\text{유해폐기물 발생량}}{\text{등록인구}}$

출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도] 참조

비고:

-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간 건강의 위협은 미래 세대에게 오염 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건강 피해에 따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발생량 저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또한 유해폐기물의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을 산정하여 안전 처리를 평가하고자 함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과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합
-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목표이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세부목표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59	59.2	60	61.6	62	83.8	

지표 정의:  $\frac{\text{재활용처리된 생활폐기물량}}{\text{총 생활폐기물량}} \times 100(\%)$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비고:

- 해당 국가가 재활용을 통해서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국제적인 비교가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임
- 네거티브 재활용 제도 실시를 통해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최대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신기술 개발 촉진
-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2030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7.3	78.2	79.1	80.6	81.6	95.4	

지표 정의:  $\frac{\text{재활용처리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text{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 \times 100(\%)$

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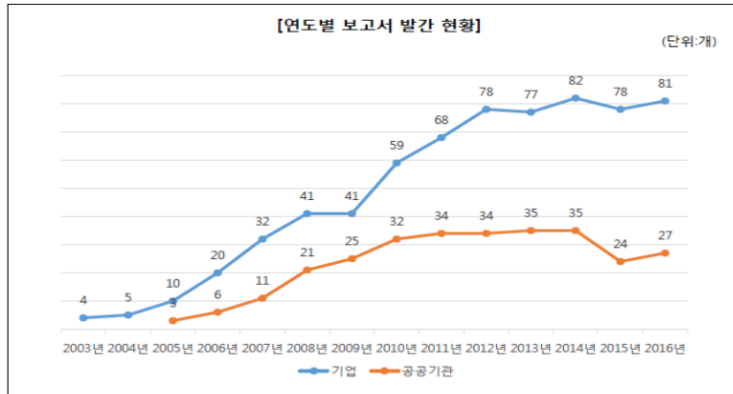
- 사업장 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등 발생 사업장, 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를 의미함

- 생산 단계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제품이 생산되어 선형경제체계에서 순환경제체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필요
-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을 유지하면 2030 목표인 95.4%를 달성할 수 있음

## 세부목표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 증가율

-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정성적, 정량적 성과와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
-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재무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통합한 보고서) 발간 등이 의무화되고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망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2030년까지 현재 발간 기업 수의 약 2배인 200개사를 목표로 함
- 국내에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동향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에서 조사. 기업과 공공기관(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포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단체, 조합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최근 연도에 대한 자료는 열람하기 어려워,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통계로 개발해야 함



〈그림〉 한국의 연도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료: 지속가능경영원(http://bisd.or.kr)

**세부목표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2.9	39.7	42.2	46.1	47	-	70	

지표 정의:  $\frac{\text{녹색제품 구매실적}}{\text{녹색제품 대상품목 총구매액}}$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 녹색구매 통계

비고:

- 공공조달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서비스, 공사를 수급하는 활동으로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점차 그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정부조달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국가 경제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고용창출,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신기술 육성 등 공공성에 부합하며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산정하는 지표
-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을 유지하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환경표지제품	33,816	42,989	54,310	65,680	68,966	76,629	목표치 설정 필요	평가 보류
우수재활용제품	66	86	88	69	85	-		

지표 정의: 환경표지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 개수의 합

출처: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 수

GR제품정보시스템, 자료실, 국가기술표준원 통계

비고:

-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그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을 말함
-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목표치가 불명확하여 평가 보류

세부목표 12.8.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5.5	-	-	-	-	57.1	75	

지표 정의: 일반 국민의 '본인 환경 의식 수준'

설문조사, 환경의식 수준 측정 문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과 선생님 본인의 환경의식 수준은 각각 몇 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환경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비고:

- 본인의 환경의식 수준과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 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요구 정도를 평가
- 1995년부터 3-5년 단위로 시행 중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가늠하고, 환경교육 시행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반영해 환경교육 시책 추진에 반영
- 설문조사가 5년마다 진행되면서 관련 문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표 고정과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상관 분석 등의 설문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응답자 본인의 환경 의식 수준이 5년 전과 비교해 낮아짐. 연 0.5% 이상 증가하여 2030년 75점의 환경의식수준을 갖는 것이 지표의 목표치이나 5년간의 추세는 오히려 낮아졌음

#### 세부목표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 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참고)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 최근 (미세) 플라스틱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플라스틱이 선순환되어 플라스틱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표
-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년 5%의 생산 성장률을 보이나 그 중 24%만이 재활용 되고 있고, 플라스틱 해양폐기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의 약 20퍼센트는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서는 절반 이상의 플라스틱 배출이 어망, 밧줄 등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됨.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2억 7천만 톤이나,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2억 7천 5백만 톤으로 추정됨. 이는 생산량을 웃도는 수치이며, 이전에 생산된 플라스틱의 배출 때문으로 플라스틱 소비 억제와 재활용 제고의 필요성이 시급함
- 현재까지는 플라스틱 소비량에 대한 국가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음. 이소라 외(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은 크게 물질재활용, 화학적재활용, 열 회수(에너지회수)로 나뉘는데 이소라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기준 물질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재생수지(재생 플레이크, 재생 펠렛, 잉고트, 압축플라스틱)로 정의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5)에 따른 목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70% 재활용하는 것

〈표〉 국내 수요량 기준 플라스틱 소비량

구분	산정범위	산정방법	2015년* 기준 한국 통계량
이소라 외 (2019)	LDPE, L-LDPE, EVA, HDPE, PP, PS, EPS, ABS, PVC, PC	플라스틱 총 수요량(생산량-수출량+수입량) / 총 인구수	113.3 kg/인
EUROMAP (2016)	LDPE, L-LDPE, HDPE, PP, PS, ABS, SAN, PET-R, PA, PVC, PC	플라스틱 총 수요량(생산량-수출량+수입량) / 총 인구수	132.7 kg/인
서진원 (2018)	PE, PVC, PP, PS, ABS	플라스틱 총 수요량 / 총 인구수	약 118kg/인

자료: 이소라 외(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부목표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참고) 탄소생태발자국**

- 생태발자국이란 수요 측면에서 식품, 축산물, 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공간,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산림 등에 대한 인류의 수요를 가리키며, 탄소발자국은 “생태발자국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부분”으로 정의(한국생태발자국 보고서(WWF), 2016)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자연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인류의 수요를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지수.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 단위와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임. 생태발자국의 단위로 글로벌 헥타르(gha) 또는 지구의 개수 등을 사용하는데, 수치가 클수록 지구에 해를 많이 끼친다는 의미임. 즉, 의식주 등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 생태발자국은 재생가능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생물학적 생산성을 지닌 토지와 바다의 규모를 측정하는 통계도구이기도 함. 따라서 특정인구의 수요를 측정된 생태발자국을 그 인구를 부양하는데 사용가능한 국내 혹은 전 세계의 생태 용량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한 국가의 수요(생태발자국)가 자국의 공급량(생태용량)을 초과할 경우 생태 적자에 빠지게 되고 이 경우 해당 국가는 무역 등을 통해 생태 용량을 수입하는 등으로 적자 상태를 최소화해야함. 생태발자국의 산정을 통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 환경오염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생태발자국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발자국 면적 기준은 1인당 1.8ha라는 것을 기준으로 국가별 생태발자국의 목표 설정 가능
- 일반적으로는 FA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일부 데이터의 경우, Global Footprint Network의 한국 데이터가 어떤 국내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산정하였는지 불분명
- 기존 연구의 생태발자국 계산 방식을 차용하여 한국만의 (도시별) 생태발자국 값을 계산하는 방법 고려 가능. 문경주(2004), 한순금 외(2011) 등의 연구에서 글로벌 생태발자국 지표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 특히, 한순금 외(2011)의 연구는 GFN이 제시하는 토지형태의 생산성 차이를 국내 지표로 산정하여 향후 새로운 통계 개발 시 그 방법론으로 활용 가능

**세부목표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도 근본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화석연료의 비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대기오염을 악화
-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에너지 세제개편 필요
- 해당지표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절대액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전체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 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메타데이터가 부족. 김종호 외(2017)의 연구에서 통계 산출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본 통계에는 산업부 소관 뿐 아니라 국토부 소관 유가보조금도 포함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조액수(억원)	75,737	89,198	71,309	58,038	52,459
GDP대비(%)	0.55	0.62	0.48	0.37	0.32

자료: 김종호 외(2017)

## 제13장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제1절 개요

〈표 3-13〉 K-SDGs 13 “기후변화 대응”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	관련 계획 및 제도 소개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	지표 설명 제공
		○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목표치 기반 평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	메타데이터 부재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 온실가스 총량(MtCO <sub>2</sub> )		목표치 기반 평가

K-SDGs 13번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와 그로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위한 목표이다. 4개 세부 목표와 6개의 지표가 수립되어 있는데, 가용 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친환경차 확대 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개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친환경차 확대 수는 K-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의 지표로도 들어가 있는 중복 지

표이다. 이 두 지표를 제외하면 13번 목표에서 단독으로 평가에 활용한 지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하나뿐인데,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이나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목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관련 정책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19년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립한 것이다<sup>22)</sup>.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①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②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③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신기후체제를 대비하여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 세부목표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 (참고)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 2015년 12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수립. 이는 1차 대책의 성과를 보완·발전하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연계·통합을 강화한 것. 국제적으로 적응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내적으로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함

22) 환경부 보도자료(2019.10.22)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4대 정책부문(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관리)와 1개 정책기반(국내·외 이행기반 마련)으로 구성
- 핵심·부문별 지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부장관 주재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함.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매년 이행평가 및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적응대책의 성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3, 5차년도에 발간

**< 2차 적응대책 주요지표 >**

지 표	'15 ~ '20	지 표	'15 ~ '20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상세화)	AR5기반 (전지구)  → AR6기반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물종 (누적)	147건  → 200건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구축 (현형화)	AR5기반  → AR6기반 취약성 지도 	적응대책 수립기업 (누적)	46개소  → 100개소 
적응정보 공동 DB (구축여부)	- → 구축 	한반도 유전자원 DB (누적)	42,756건  → 48,000건 
기후변화 취약계층 DB (구축여부)	- → 구축 	기후적응 지역사회 모델	유형별 모델  → 지자체 확산·보급 
홍수위험지도 (누적)	19%  → 64% 	기후적응 남북협력사업	- → 10기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요약본」

-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http://kaccc.kei.re.kr/>)의 메타자료실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표에 대한 메타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세부목표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75	6.41	6.97	7.60	8.30	20	

지표 정의:  $\frac{\text{신·재생에너지 발전량}}{\text{총발전량}} \times 100$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비고:

-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발전량, 1차 에너지, 최종에너지 기준 모두 현저히 낮은 수준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폐기물, 바이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 지표상으로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현 추세면 2030 목표치인 20% 달성 가능
- 본 보고서는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속도가 충분한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맑음☀️’으로 나왔음에 유의

◦ **(참고)산업계·지자체 적응 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

-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지침」을 2016.8월 제정하고, 2019년 12월 개정하였음
-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http://kacc.kei.re.kr/>)의 ‘기후적응정책’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 시행계획 확인 가능. 2020년 7월 기준 15개 광역 지자체(제주, 경남, 강원, 울산,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충북, 경북, 충남, 서울, 대전, 경기, 인천)와 32개 기초지자체(고창군, 공주시, 광명시, 논산시, 서천군, 수원시, 여주시, 연수구, 예산군, 옥천군, 용인시, 장성군, 청주시, 태안군, 포항시, 화천군, 고양시, 파주시, 평택시, 울주군, 안성시, 단양군, 고령군, 칠곡군, 의정부시, 음성군, 괴산군, 천안시, 제천시, 원주시, 아산시, 포천시)의 세부 시행계획 확인 가능
- 국가기후변화적응포털(<http://kacc.kei.re.kr/>)의 ‘기후적응정책’에서 수립 및 이행 지원자료를 확인 가능. 이행지원자료는 환경부 지침, 간담회 및 심포지엄 발표자료, 기초대책 수립지원 전문교육 자료집, 기후변화 적응대책 역량강화 교육 자료집 등을 포함
- 지표의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친환경차 확대 수(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075	2,907	5,914	13,826	31,696	880만대	

지표 정의: 친환경차 보급 대수

출처: 환경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현황

비고: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은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
- 전기차는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으로 평가되고 있음. 버스 및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천연가스 혹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정책 추진
-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30 목표 도달에는 아직 부족함

세부목표 13.4. (신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691.5	692.3	692.6	709.1	-	608~ 574	

지표 정의: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비고:

-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으로 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나타냄.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에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을 말함.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삼불화질소(NF<sub>3</sub>)의 7개 물질을 대표적 온실가스로 정하고 있음.
- 국가온실가스 배출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야별 배출 통계를 관장부처(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작성
- 본 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국제협상 시 우리나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30까지 608MtCO<sub>2</sub>에서 574MtCO<sub>2</sub> 사이의 배출량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나 해가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제14장

##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 제1절 개요

〈표 3-14〉 K-SDGs 14 “해양생태계 보전”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	지표방향성 없음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 갯벌복원면적(km <sup>2</sup> )	-	메타데이터 부재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 TAC : 총허용어획량	-	지표설명 제공
		○ TAC 대상 어종수(어종)		
		○ 감척어선 수(건)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어가 소득(백만원)		
		○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만원)	-	제도 소개

#### ※참고

-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지표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어획량 통계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평가에서는 제외

14번째 K-SDGs “해양 생태계 보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8개 세부목표와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평가보고서에는 자료가 가용한 9개 지표에 대한 목표순향도를 평가하였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으나 수거량이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모두 해양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어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연안 평균 pH농도 적정범위 유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어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어가 소득’이 2030 목표를 향해 순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AC 대상 어종 수’와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 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관측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 관련 정책 이슈

- 연안어선 세력을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해야 함
-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 발표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근해어선 감축 시행계획에 따라 근해 어선 감축

-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8년 현재 14개 업종,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어획량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적정어획량은 과학적인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된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연육도서 제외) 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어가당 60만원 지원(어촌마을공동기금 30% 포함)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좋은	71	78	84	75	81.8	100	
나쁨	11	4	2	1	-		

지표 정의: 한국 연안의 수질 조사정점에 대한 자료를 연평균(2월, 5월, 8월, 11월)하여 해수수질을 평가한 수질등급 개수를 조사 정점수로 나눈 값

출처: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

비고

- 수질평가 지수값(WQI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은 한국 연안을 해역별 (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생태구)로 구분하여 해수수질을 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

- 최근 5년간 해수수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2015년부터 좋음의 비율은 약간씩 증가하고 나쁨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연안 해수수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 목표치인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세부목표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388	2,574	3,236	3,064	3,043	-	54,000	

지표 정의: 잘피 등 해초류를 바다에 이식하여 조성된 바다숲의 면적

출처: 해양수산부(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산자원 조성 사업 현황)

비고:

-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잘피 등 해초류의 이식을 통한 바다숲 조성으로 연안생태계 기능 및 역할 복원
- 고갈된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추구
- 표의 지표 값은 해당 년도의 신규 바다숲 조성 면적이고, K-SDGs에서는 2030년까지 바다숲 전체 누적 면적 54,000ha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의 누적 추세를 유지하면 2030 목표 54,000ha 달성 가능

**세부목표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8.16	8.17	8.16	8.16	8.17	-	8.1	

지표 정의:  $\frac{\text{한국 연안 조사 정점별 연평균 pH농도의 합}}{\text{조사 정점 수}}$

출처: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

비고:

-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부영양화로 인한 빈산소수괴 발생 등으로 인한 해양 산성화 등이 심화되어 다부처가 함께 고려해야할 영역
- 연안은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해수 중 pH농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해양산성화의 직접적인 요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장기적, 단기적으로 8.0~8.2 사이의 값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로 평가하였으나 경계선에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표임

#### 세부목표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표값	28.9	29.9	26.9	30.2	22.4	-

- TAC 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 지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어획량 통계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평가에서는 제외
- 배타적경제수역(EEZ) 시행 및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전 세계 주요 연안국들은 TAC 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어장 및 조업시기 제한 등을 보조적 수단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혼합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
- 최근 5년간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비율은 증가 후 감소추세에 있음

◦ TAC 대상 어종수(어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20	

지표 정의: TAC 대상 어종수(어종)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비고

- TAC 제도에 의해 관래되고 있는 어종 수를 말함
- 2018년 기준 지난 10년간 11종에서 변화가 없어 2030 목표인 20종 달성이 어려움
- 단, 2018년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업종의 오징어 어종을 시범 도입함

◦ 감척어선 수(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80	371	350	292	297	1,200	

지표 정의: 정부의 연간계획 및 예산확보를 통한 연근해 감척 어선수

출처: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4~'18)

비고

-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표
- 연근해어선 감척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어업의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직권 감척 및 자율감척을 추진함으로써 과잉어획능력 감축
- 표의 지표 값은 당해 연도의 신규 어선감척 수입. K-SDGs 에서는 2017년부터 2030 까지 누적 1200척 감척을 목표로 함. 현재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세부목표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12	-	14	16	18	20	21	22	24	28	39	

출처: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보호구역관리

비고:

- 해양보호구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의 가치가 높아 보전 필요성이 있는 해역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매년 1-2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있음. 2018년부터는 서천갯벌 등 5개소를 4개소로 통합하고 면적을 대폭확대
- 현재 추세대로 해양보호구역을 꾸준히 늘리면 2030 목표인 39개 달성 가능

**세부목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어가 소득(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41.0	43.9	47.1	49.0	51.8	78	

지표 정의: 어가소득(백만원)


출처: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비고:

- 전국 1000어를 표본 조사한 자료. 어업법인 관련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 및 어업 경영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속도면 2030 목표 7800만원 달성 가능

◦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72	76	80	82.3	80	87.5	

지표 정의:  $\frac{\text{어가 소득}}{\text{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times 100$


출처: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평가결과

- 전국 1000어를 표본 조사한 자료. 어업법인 관련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 경영실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도시근로자와의 상대적 격차를 측정하여 어업정책 수립 및 어업 경영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속도면 2030 목표 87.5% 달성 가능함

**세부목표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3.1	3.1	3	3	3.1	6.0	

지표 정의:  $\frac{\text{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text{정부연구개발예산}} \times 100$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결과:

-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3.1%로 일정
- 2015년의 중국 5.5%, 일본 7.5%, 미국 8.2%보다 낮은 수치임

세부목표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참고)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연육도서 제외) 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한다 (2019.03.29)”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 지원
- 2018년 기준 어가 당 60만원 지급. 이는 어촌마을공동기금 30%를 포함한 금액


**제15장**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제1절 개요**

〈표 3-15〉 K-SDGs 15 “육상생태계 보전”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지표설명 제공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산녹색보호지수	-	지표 정의 불분명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국가산림경영지표 확장(건)	-	국가 산림경영지표 소개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지표설명 제공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지표설명 제공 및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 소개
		○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지표설명 제공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	지표설명 제공
		○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	메타데이터 부재
15-8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 도심/생활권 복원(ha)	-	지표 소개

15번째 K-SDGs “육상 생태계 보전”은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을 추구하는 목표이다. 8개 세부목표와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립되어 있는 지표수에 비하여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지표는 적은 편이다.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은 현재 국가보호지역 통합 DB(KDPA)에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가 승인 시계열 통계자료가 아니라 목표순향도 평가는 보류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환경통계연감을 통해 생태·경관 보전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를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수원함영보호구역(제1~3종)·생활환경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은 2030목표치인 700ha를 기준으로 현 추세가 충분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은 200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지속확대’의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은 2015년의 실적이 좋았으나 특별한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도심/생활권 복원’ 지표는 산림청의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2018~2022)”에 따르면 ‘17년 150ha에서 ’22년 269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k-SDGs의 2030 목표치는 500ha이다. 현재 ‘17년 자료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순향도 평가는 불가능하였다.

## 관련 정책 이슈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보호지역((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DB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7년 5월 2일부터 운영 중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으로부터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 이행. 이 전략에 의거하여 산림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보호지역 확대 추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환경부 제2차 외래생물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외래생물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퇴치·제거사업,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1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 수립. 멸종위험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야생생물 I급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관찰종으로 지정하여 관리. 2016년 이후 환경부 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해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재지정
-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2018-2022)” 수립. 산림보호지역의 지속적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등 위협 요인의 관리,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외 보전 강화, 훼손 산림생태계 복원, 산림생명산업 기반 마련 및 자원체계 구축, 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확대 및 평가체계 구축,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민관협력을 통한 대국민 인식 재고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두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수립.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국내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관리 강화, 외래생물 확산 방지체계 구축,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두고 있음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 (참고)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국가보호지역(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통합DB관리 시스템 (URL: <http://www.kdpa.kr>)에서 현재의 보호구역 비율확인 가능
- 2020년 7월 현재 기준 국토면적 대비 16.63%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남
- 국토면적 대비 비율에 대한 연도별 승인 시계열 통계가 부족하여 목표순향도 평가는 보류
- 한편,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환경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환경통계연감 2019」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9개소, 248.03 $km^2$ , 시도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4개소 37.764 $km^2$

###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연도	2000	...	2009	...	2015	2030 목표	목표 순향도
지표값	64.4	...	64.1	...	63.7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text{산림면적}}{\text{총 육지면적}} \times 100(\%)$

출처: 산림청, 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비고:

- 산림자원은 청정식품, 보건·휴양 등과 같이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해 주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 핀란드(73.1%), 일본(68.5%), 스웨덴(68.4%)
- 전용, 산림조성 등 산림경영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6.225천ha가 될 것으로 전망<sup>23)</sup>

## 세부목표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 (참고) 국가 산림경영 지표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4”를 통해 7개 기준과 36개 지표를 제안

#### ◦ 기준 1. 생물 다양성 보전

1-1.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산림 소유에 따른 면적과 비율, 1-2. 산림 보호지역 내 생태계 유형과 영급, 천이단계에 따른 산림의 면적과 비율, 1-3. 산림 내에 분포하는 생물종 수, 1-4. 법률적 근거 또는 과학적 평가에 의해 규정되는 위기 산림생물 종 수, 1-5.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현황, 1-6. 유전변이와 지역 적응 유전자형이 소실 위험에 처한 산림종, 1-7. 대표적 산림종 집단의 유전다양성, 1-8. 유전다양성 보존을 위한 현지내 및 현지외 보전 현황

#### ◦ 기준 2.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

2-1. 산림면적 비율 및 목재생산 가능 면적, 2-2. 목재생산 가능 면적의 임상별 임축 목적과 연간생장량, 2-3. 재래종과 외래종 식재지 면적과 임축목적, 2-4. 순생장량 또는 보속수확량의 비율로서 연간목재 수확량

#### ◦ 기준 3. 산림생태계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

3-1. 산림병해충 등 생물적 피해 산림면적, 3-2. 산불, 태풍, 산사태 등 무생물적 요인에 의한 산림피해면적

#### ◦ 기준 4. 토양과 물 자원의 보전 및 유지

4-1. 토양 및 물 자원 보호림 면적, 4-2. 토양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사업 실적, 4-3. 토양의 질적 저하 면적과 비율, 4-4. 물 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 사업 실적

#### ◦ 기준 5.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5-1. 산림바이오매스 총탄소저장량, 5-2. 산림바이오매스 탄소수지

#### ◦ 기준 6.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의 유지 강화

6-1. 목재 및 목제품 생산량/생산액, 6-2.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생산액, 6-3. 목

23) 국가지표체계, “산림면적 및 임축목적”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00&board\\_cd=INDX\\_001](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00&board_cd=INDX_001) 검색일: 2020.6.22

재 및 목제품 소비량, 6-4. 단기소득 임산물 소비량, 6-5. 임업부문의 고용과 임금, 6-6. 국내총생산과 산림부문의 GDP, 6-7. 산촌체험 프로그램 방문자 수와 연간 소득, 6-8. 공공휴양과 관광을 위해 경영되는 산림면적과 비율, 6-9. 산림휴양유형별 방문자 수

◦ **기준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법, 제도, 경제구조**

7-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법규와 경제정책, 7-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영향을 주는 세제와 경영전략, 7-3. 토지와 자원의 소유권과 재산권의 명확성과 안전성, 7-4. 산림 관련 법률의 집행, 7-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와 기타 자원, 7-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연구와 기술의 개발과 적용, 7-7. 산림관련 의사결정에 민간참여 및 분쟁해결

- K-SDGs에서는 국가산림경영지표를 2030까지 54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세부목표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참고)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지구 전체 토지 면적의 20%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황폐화. 유럽과 북미,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육지면적의 22.4~35.5%가 황폐화되었으며, 이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
- ‘황폐화된 토지 비율’은 식량 안보의 문제와 연계되고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와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립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을 유도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표
- 본 지표는 UN 사막화방지협약의 토지황폐화중립(LC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지표와 동일한 것으로 UNCCD<sup>24)</sup>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토지 황폐화 여부는 ①토지면적, ②토지생산성, ③토양산소 등 3가지 세부기준의 상태를 통해 평가하여 산정

24) UNCCD(2018), Reporting manual for the 2017-2018 UNCCD reporting progress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참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을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에서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급 지정 현황을 제공 중에 있음.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야생생물 I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을 말함
- 2018년 10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 발표하여 멸종위기 생물종 보전을 위한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 ①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②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③국민 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④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 운영을 주요 전략으로 함
- 2018년 기준 국내 야생생물 4만 9천종 중 26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
- 2018년 기준 증식·복원 대상 관리 종은 총 64종이고, 아래의 25종을 우선복원대상지정으로 하여 관리

(\* : 고유종(6종), 볼드체 : 신규대상종)

분류군	등급 및 생물명		분류군 별종수
	I급	II급	
포유류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수달	무산쇠족제비	5
조류	저어새, 황새	따오기, 양비둘기	4
양서파충류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남생이, 금개구리*	4
어류	여울마자*, 모래주사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4
곤충		소동구리	1
무척추동물		참달팽이*	1
육상식물	나도풍란, 만년콩	가는동자꽃, 서울개발나물, 신안새우난초, 한라송이풀*	6

**세부목표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참고) ABSCH 국가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abs.go.kr>) 운영 중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와 관련해 2017년 비준된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배경으로 하여, 유전자원법 제 17조 1항에 근거해 유전자원 등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K-SDGs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및 당사국회 결정에 따라 ABSCH를 통해 공유해야 하는 국가법률, 국가기관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2022년 10건, 2030년 30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부목표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5,751	7,768	4,425	5,214	4,719	지속 확대	

지표 정의: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출처: 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비고: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해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증가
- 2015년 실적이 7,768건으로 유난히 좋았던 것 이외에 특별한 추세 없이 정체상태

**세부목표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참고)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가리킴
- 침입외래종에 기인한 국내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생태계 위협요인 저감을 위해 기존 침입외래종 통제 제도 확대 및 정착 필요
-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수립. 이에 따르면 최근 외래생물 유입이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국내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험관리 강화, 외래생물 확산 방지체계 구축,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두고 있음

**세부목표 15.8.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72	105	148	198	233	269	297	315	334	700	

자료 출처: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2018-2022)

비고 :

- 백두대간이란 백두에서 금강산을 걸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도란 백두대간 구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고시된 지역을 말함

-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 핵심 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결하는 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을 의미<sup>25)</sup>
- 중점추진과제로 “백두대간, DMZ 등 한반도 주요산림 훼손지 복원”이 있으며, 2010년 이후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30 목표인 700ha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도심/생활권 복원(ha)

-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8-2022)”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 1항에 의거에 수립.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유지·증진·이용·평가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력,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룸
-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산림 외에도 정맥·지맥, 채광·채석지 및 생활권 대규모 훼손지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훼손규모, 생태계 영향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함
-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8-2022)”의 목표는 2017년까지 150ha에서 2022년 369ha 복원임. K-SDGs에서는 2030년 500ha 복원을 목표치로 두고 있음

25) FGIS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백두대간보호지역도”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gis/UI\\_KFS\\_5002\\_020500.html&mn=KFS\\_02\\_04\\_03\\_04\\_05&orgId=fgis](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gis/UI_KFS_5002_020500.html&mn=KFS_02_04_03_04_05&orgId=fgis) 검색일: 2020.07.20

**제16장**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제1절 개요**

〈표 3-16〉 K-SDGs 16 “인권·정의·평화”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설정 필요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 조치를 강화하며,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	관련연구 소개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	메타데이터 부재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	정량평가 보류. 목표치 설정 필요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	관련연구 소개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	메타데이터 부재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	메타데이터 부재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	차별금지법 소개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	관련제도 소개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	지표 소개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	관련정책 소개
16-13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참고

- 법정 전체 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비율: 지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가 보류

16번째 K-SDGs “육상 생태계 보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목표이며, UN SDGs 를 K-SDG로 자국화 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려했던 남북한 협력 관련된 세부 목표가 16번째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지표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5대 범죄 검거율은 2011년 이후의 추세와 최근 5년 추세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지표는 단순히 수치만 높다는 사실이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란 세부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가 보류하였다.

## 관련 정책 이슈

16번 목표에는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4개 포함되어 있다. 다른 정량 지표와 동등한 기준으로 4단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목표순항도를 따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책 이슈 몇 가지를 소개한다. 세부목표 16-12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은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대책이다. 2018년 4월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단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법무부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며,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시스템을 개발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월 국회 통과되었다. 또한, 여가부에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하였다.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법률 및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 제출되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 5대 범죄 검거율(%)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	-	61.3	60.4	62.6	65.5	71.0	76.3	78.2	77.4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5\text{대 범죄별 검거건수}}{5\text{대 범죄별 발생건수}} \times 100$

출처: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비고:

-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한국사회 문화와 사회구조에 내재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드러나고 있고, 군 혹은 교도소 시설 등 전통적인 폭력 발생 현장 이외에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자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다양한 원인의 생명에 대한 폭력이 다루어져야 함
- 폭력 사건에 대한 즉각 대응뿐 아니라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과 대응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지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인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의 검거율 측정
- 목표치 수립 당시 2017년 달성률 78.2%가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이후의 목표치를 “지속적인 확대”로 선정
- 2011년 이후 추세, 최근 5년 추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목표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1.1	1.32	2.15	2.64	2.98	지속 확대	

지표 정의:  $\frac{18\text{세 미만 아동 학대 피해건수}}{18\text{세 미만 추계인구}} \times 100$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비고:

- 아동을 학대, 착취, 인신매매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우선 가치
- 아동학대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인프라 확충, 아동사망 조사기구 구성·운영 등 필요
- 아동학대 발견율의 2030 목표는 ‘지속확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발견율이 지표 수립 당시 기준이었던 2017년 당시 주요국(미국 9.4%, 호주 8%)에 비해 여전이 낮은 실정인 것을 감안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수립되었음
- 본 지표 값의 증가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음에 유의. 지표 산출방식이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건수를 추계인구로 나눈 값이므로 단순히 아동학대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2030목표가 ‘지속확대’로 명시되어 선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추세 분석하였음
- 5년 동안 연평균 28%의 상승률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세부목표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건수 비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1심	0.37	0.49	0.63	0.57	0.52	0.56	0.58	0.59	0.71	0.79	목표 치설 정 필요	평가 보류
2심	1.84	1.72	1.7	1.83	2.01	1.78	1.72	1.47	1.58	1.69		

$$\text{지표 정의: 1심 무죄율} = \frac{\text{1심 무죄선고인원}}{\text{1심 전체선고인원}} \times 100$$

$$\text{2심 무죄율} = \frac{\text{2심 무죄선고인원}}{\text{2심 전체선고인원}} \times 100$$

출처: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비고:

- 연도별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하여 형사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1심 무죄판결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무죄선고인원과 무죄 선고율에서 소폭의 등락 추이를 보임
- 2심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2심 무죄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소폭의 등락변동을 보이고 있음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지표 방향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는 보류함

**세부목표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 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참고)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 비율**

- 현재 불법무기 소지 범죄 및 처벌 비율 값을 알 수 있는 국가 공인 통계 부족
- 치안정책연구소(2017) 「불법총기 근절을 위한 총기 안전관리 실태 진단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총기통제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최근 불법 밀수와 양도, 개·변조 사용 등 음성적으로 유통 또는 보유 중인 총기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 또한, 정보통신망 발달에 따라 총기·폭발물 제조법이 급속히 전파되고, 국제적으로 테러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피상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난 근본적인 총기관리 체계 점검 및 정비가 필요. 총기 안전관리 검사 및 연구체계를 갖춘 공인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있음

**세부목표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56.0	55.0	55.0	54.0	53.0	54.0	57.0	-	

지표 정의: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비고:

-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정책 강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수준 재고
- 추세분석 결과, 장기·단기에서 유의미한 추세 없음. 하지만 최근 3년 연속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19년도에는 59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제투명성 기구가 국가별 CPI 발표를 시작한 지난 1995년 이래 우리나라 역대 최고점수임
- 국가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혹은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1명의 공무원(public official)과 접촉한 사람 중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험이 있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구할 수 있음

## 세부목표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표〉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건, 0:%

년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8	671,504	555,598 (83%)	83,128 (12%)	32,778 (5%)
2017	563,597	477,870 (85%)	60,596 (11%)	25,131 (4%)
2016	504,147	427,421 (85%)	54,091 (11%)	22,335 (4%)
2015	458,059	392,330 (86%)	47,686 (10%)	48,043 (4%)
2014	381,496	326,086 (86%)	38,575 (10%)	16,835 (4%)

자료: 정보공개포털,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부터 시행함. 2020년 현재 기준 최종 개정은 2013년 11월 13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

## 세부목표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 (참고)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 문병기 등(2018)은 법무부 용역으로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위 연구에서 국내 이주아동 및 불법체류아동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결과, 이주아동 및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개념 규정, 유형 및 연령 범위를 위시해 그들을 바라보는 정책적 태도에서 보호적 시각과 관리적 시각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남. 또한, 국내 이주아동 및 불법체류아동 관련 각종 정부정책 및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이상에서 언급한 이주아동 및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개념적 혼동 및 정책 대상으로서의 범위적·유형적 불명확성에 더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이질성과 혼란 및 사각지대 발견
- 연구 결과에 따른 국내 체류 이주아동정책을 위한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국내체류 이주아동의 개념 및 범위 정립
  - ② 국내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체계 구축 및 기금 설치
  - ③ 이주아동 출생신고/등록제도 도입
  - ④ 정기적 이주아동 실태조사체계 구축
  - ⑤ 해외 선진사례의 선별적 벤치마킹

## 세부목표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 (참고)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홍관표(2013)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는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운 국회 출범시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나 2020년 9월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기독교 보수성향 교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다.

◦ **(참고)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위원회 권고안**

- 아래는 외교부 웹사이트의 “외교정책: 국제인권규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별 관련 국제인권협약 관련 내용.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있음. 법무부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법률 및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 제출되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음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입니다.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B규약이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이들 4개 협약은 A·B 규약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요(core) 인권협약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협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을 규정하는 5개 선택의정서(B규약 제1선택의정서, A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개 선택의정서(B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아동권리협약 2개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주요인권협약 이외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이 채택되어, 여성과 아동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강제실종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 세부목표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 사이버 폭력 건수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일반성인 및 학생 대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경험 비율을 파악하고,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도교육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향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 「2018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 및 피해)은 32.8% 수준으로 10명 중 3명꼴이고,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9.5%, 성인은 43.1%로 성인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총 8가지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에 대한 경험률을 말함

### • (참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K-SDGs 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여부’를 지표로 제시  
이하는 정부24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의 ‘디지털 성범죄’ 항목 내용<sup>26)</sup>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은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대책
- 2018년 4월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단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수립.
- 법무부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며,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시스템을 개발
- 여가부에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하였고, 최근 삭제요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월 국회 통과
-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 마련

26)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 제17장

## 목표 17. 지구촌 협력확대



## 제1절 개요

〈표 3-17〉 K-SDGs 17 “지구촌 협력확대” 평가 개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목표 순향도	비고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 GNI 대비 ODA 비율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	참고통계 제공
		○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	지표 없음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	지표 없음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	지속위활동 소개
		○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	지표 없음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	지표 없음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	메타데이터 부재

17번째 K-SDGs “지구촌 협력 확대”는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된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30까지 DAC 회원국의 현 평균수준인 0.3%까지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의 예외적

인 증가를 제외하면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 소폭 감소하였는데, 2030 목표치인 0.3% 달성을 위해서는 ODA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

UN의 SDGs 17번 ‘파트너십’ 항목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sup>27)</sup>,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장기투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핵심 분야에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및 운송은 물론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공공 부문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및 감독 규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최고 감사기관 및 입법부의 감독기능과 같은 국가 감독기구 체제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UN SDGs 17번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항목을 K-SDGs 17번에서도 세부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2016년 정책연구브리핑 자료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를 배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협상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 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도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관련 정책

2019년, 제9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토양보전기본계획,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계획,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를 2019년 6월 10일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도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신규과제를 공모할 때, SDGs 17개 분야와 일치하는 목표 분야를 필수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27)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lobalpartnerships/>

## 제2절 가용지표 목록

세부목표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 ◦ GNI 대비 ODA 비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0.13	0.14	0.16	0.14	0.14	0.30	

지표 정의:  $\frac{\text{총 ODA}}{\text{명목 GNI}}$

출처: OECD.Stat

비고

-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ODA/GNI 0.15-0.20% 제공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과 기여를 보여주는 지표
-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 2018년부터 증여등가액 기준임. 매년 초 전년도 확정치에 대한 통계 발표
- 한국의 對개도국 ODA/GNI는 2013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권고인 0.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0.05%에 그침. 2018년 기준 각 국가의 ODA 비율이 UN 권고안인 0.7%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5개국
- 2030목표치 0.30은 지표를 수립한 2017년 당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수준
- 5년간 정체 상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DA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함

## 세부목표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 국제무역에서 개도국과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인 개도국의 무역확대와 시장 접근개선을 나타내는 지표
- 국제상품무역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14년 기준 약 44.6%를 차지하지만, 한국의 경우 對개도국 무역 비중이 57.2% 기록. 최빈국 교역 비중은 국제적으로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한국의 경우 1.4%로 비슷한 수준
-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역액 중에서 개도국과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할 수 있음
- 한국의 對개도국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서고,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음.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무관세조치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큰 변화는 없는 실정

〈표〉 한국의 對개도국 교역비중 변화추이 (2005-2015)

단위: %

	개도국	최빈국
2005	46.70	1.13
2006	49.35	1.26
2007	51.67	0.96
2008	55.33	1.02
2009	53.19	1.46
2010	54.53	1.38
2011	56.36	1.43
2012	56.99	1.18
2013	57.81	1.26
2014	57.18	1.39
2015	55.24	1.17

주: 개도국 분류는 총 148개국 대상으로 최빈개도국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30 목표	평가
지표값	54.6	31.6	27.8	22.1	-	목표치 설정 필요	

지표 정의:  $\frac{\text{개발도상국 } FDIOutflow \text{ 총액}}{FDIOutflow \text{ 총액}}$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고:

- 개발자원 중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개발도상국이 시장경제 안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
-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는 국별 총액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한 통합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 2014-2017년 기준 DAC ODA 협력대상국을 기준으로 재계산이 필요한 지표임
- 세부목표의 목적에 따르면 점점 증가해야 하나, 감소하는 추세. 202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계 수준을 밑돌고 있음

세부목표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강화한다.

#### ◦ (참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 제16조에 따라 범부처 행정계획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함
-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토양보전기본계획,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산업집적활성화계획,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 등에 대해 2019년도 검토가 진행되었음. 검토 목록은 아래와 같음

〈표〉 2019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행정계획 검토 목록

연번	행정계획명	소관 부처	비고
1	국가환경종합계획 (20년 계획)	환경부	중점과제로 대면회의 실시
2	국토종합계획 (20년 계획)	국토부	
3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0년 계획)	산자부	
4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10년 계획)	환경부	
5	연안정비기본계획 (10년 계획)	해수부	
6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5년 계획)	산자부	

- 2019년 6월 10일 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2020년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수립 중에 있음

## 제4장

### 향후 개선과제

- 제1절 평가 결과에 기반한 향후 개선과제
- 제2절 한계 및 향후 평가 개선방향



## 제4장

## 향후 개선과제

## 제1절 평가 결과에 기반한 향후 개선과제

본 보고서는 2018년 12월 24일 첫 수립된 K-SDGs 지표를 대상으로 수행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담은 보고서이다. 분야별로 각각 수립된 지표를 일관된 기준 아래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순향도'를 기준으로 해서 4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평가는 대부분 국내에서만 모니터링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평가이므로 국제비교를 기반으로 하는 SDSN이나 OECD의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평가 대상 지표의 구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국제비교를 전제로 하는 국제기구의 평가와 국내 모니터링 정보만을 활용하는 본 보고서의 평가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SDSN이나 OECD의 평가는 개별 지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대상국의 전체 대비 상대적인 달성도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면, UN 자문기구 SDSN의 2020년 SDG 지수 평가는 한 나라의 개별 지표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화한 후 목표별로 먼저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SDG 지수를 산정한다. 한 나라의 개별 지표를 점수화할 때에는 166개국 중 평가 대상국의 상대적 달성 정도를 점수화한다. 이후 17개 목표별로 모든 지표 점수의 동일가중치 평균을 구해 목표별 점수를 부여하고, 17개 점수의 산술평균을 최종 지수로 한다. 이렇게 구한 SDG 지수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권역별 순위를 산정한다. 권역은 OECD회원국/동아시아 및 남아시아/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중동/중동 및 북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오세아니아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에 속해 있다. 2020년 SDSN에서 평가한 한국의 SDG지수는 78.3점으로 OECD 평균 77.3점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고, 평가대상 162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였다.

OECD의 목표도달거리 평가 또한 개별 지표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여 최종 도달거리를 산출하는데, 계산 시 전체 회원국의 표준편차를 구해야 한다. OECD 2019년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 도달거리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SDG 목표 도달 거리는 169개의 세부 목표 중 101개를 커버하는 126개 가용지표로 측정하였다. 2030 목표에서 2019년 보고서 기준 18개의 세부 목표가 기달성 되고 대부분의 세부 목표가 적은 거리만 남겨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몇몇 지표는 아직 목표 달성을 위한 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이 큰 것,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것, 담배 소비율이 큰 것이 있다.

K-SDGs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SDSN이나 OECD와 같은 방식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다. 국제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기아, 문맹률, 상·하수도 보급, 과학 연구 등과 같은 주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SDSN이나 OECD와 같은 국제 비교 기반 평가에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K-SDGs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도하여 UN SDGs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목표는 삭제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목표는 추가하여 구성한 체계이다. 상향식으로 수립되었고 아직 수립 초기이기 때문에 목표별 지표 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목적으로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아직 가용 지표가 없는 문제점도 있어 일괄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많은 수의 지표에 2030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목표 방향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목표순향도’를 제안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 K-SDGs 수립 당시의 목적과 반대 추세를 보이는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 • K-SDG 3.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율(%)

장애인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국립재활원(2011)의 “장애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외에서는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단체, 민간단체, 정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가 두드러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보건소만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9)의 “국내 장애인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원인과 기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 이 중 고혈압과 당뇨는 혈압계를 이용한 혈압 측정과 혈액 채취를 통한 공복혈당을 검사하는 것으로 질환 발생 유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검사 도구와 비용 또한 낮은 편이므로 지역 내 접근이 용이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꾸준히 장애인들이 혈압과 혈당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 K-SDG 4.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다문화학생과 같은 취약집단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국민의 학업중단율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와 면제(질병, 해외출국)를 이유로, 고등학교의 경우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 다시 증가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2018)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은 비다문화학생에 비해 취학률은 낮고 학업중단률은 높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벌어져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중학생의 경우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률이 전체 중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사춘기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서 상담과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여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언어절벽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큰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 K-SDG 6.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l/일/인)

인구가 늘어나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어 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인당 물 사용량이 적을수록 물 사용량이 적거나 누수량이 적음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1인 1일당 상수도 사용량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물 수요 관리와 누수율 관리를 통해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한정된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절약 추진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상수도 누수율 또한 K-SDGs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30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누수율을 2030 목표 9.2% 달성이 가능하도록 관리 시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을 효율화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 • K-SDG 8.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 기여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5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경제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이다. 정부는 관광 혁신을 위한 2020 계획으로 ① 관광거점도시 선정, ② 방한 관광시장 확대, ③ 4대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추진, ④ 관광사업 역량강화를 발표하였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K-SDG 12.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간 건강의 위협은 미래 세대에게 오염 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건강 피해에 따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해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준수여부”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 관리를 넘어 유해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 •K-SDG 1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sub>2</sub>)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된 배출원은 에너지 부문이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증가상태에 있고 현 추세이면 2030년 목표인 2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농업부문과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크지 않은 편이나,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6년 52.8백만 톤에서 2017년 56백만 톤으로 증가한 바 있으므로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K-SDG 15.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최근 조사인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산림면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용·산림조성 등의 산림경영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국가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 •K-SDG 17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5년 이후 세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개발 자원 중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시장 경제 안에서 지속가능성 성장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제2절 한계 및 향후 평가 개선방향

현재의 K-SDGs 체계는 기존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UN 2030 의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당시 초안 단계부터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 이해관계자 그룹 K-MGoS(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 및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기관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 선정 기준이 목표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K-SDGs의 전체 지표수가 214개인 것에 비해, 본 보고서에서 모니터링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수는 197개이다. 이는 K-SDGs 지표상 정의가 정확하지 않거나 통계 산출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체 지표로 모니터링한 지표도 포함한 수치이다. 이중 국가 승인 통계이면서 4단계 평가가 가능한 지표는 99개였다. 전체 K-SDGs 지표 수 214개에 비하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재 K-SDGs에 수립되어 있는 지표는 평가를 전제로 하여 수립된 지표체계가 아님을 감안해야 하며, 99개의 지표수는 「2018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진단에 활용한 65개보다 많다. 현 K-SDGs의 214개 지표 중에는 국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필요성 및 의의가 중요하여 현재 자료가 없더라도 통계산출을 위한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어 미래지

향적인 관점에서 포함되어 있는 지표가 상당수 있다. 현재 가용 통계가 없더라도 K-SDGs 세부목표를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향후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분야별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본 보고서의 평가 기준으로 고안한 ‘목표순향도’는 단순 증감에 따른 개선·미흡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2030년까지의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충분한지를 파악한다. 명시된 목표치가 없이 방향만 알 수 있는 지표 또한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같이 보는 방식을 통해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다만 전 목표를 아우르는 통일된 지표 기준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평가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2-6>의 유의점에서 설명하였듯, 서로 다른 목표 간의 ‘우월성’에 대한 비교는 현 지표 체계 아래에서는 불가능하다. 목표 간 지속가능성을 판단하여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K-SDGs 지표에 목표간 통일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점에서는 목표별 지표 개수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좋다. 지표의 조건에 가용성뿐만 아니라 정책연계성이나 국제 비교가능성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목표간 통일된 지표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서는 K-SDGs의 목표 및 세부목표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도 향후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7번 목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와 13번 목표 ‘기후변화 대응’이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음은 명확하다. 세부목표 단위에서는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매우 큰 관련성이 있다. 실제 두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물질발자국’과 ‘국내 자원 소비량’으로 서로 지표를 공유한다. UN SDGs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Coopman et al.(2016)은 SDGs의 상호연계성을 지원(supporting), 허용(enabling), 의존(relying)으로 범주화하고, 각 분류당 유형을 정의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범주당 0-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Nilsson et al.(2016)은 SDGs간 상호작용을 총 7단계 분리불가(+3), 강화(+2), 허용(+1), 중립(0), 제약(-1), 휘방(-2), 상쇄(-3)로 구분하였다. K-SDGs는 기본적으로 UN SDGs 체계를 자국화한 체계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참고하여 K-SDGs의 상호연계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Coopman et al.(2016)의 SDGs 상호연계성 범주 및 유형

범주	범주 정의	유형	유형 정의	점수
지원 (Supporting)	세부목표에 의해 표현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다른 세부목표 지원	일반적 지원 (Commonly Supporting)	두 세부목표가 같은 목적에 기여함	1
		상호 지원 (Mutually Supporting)	세부목표 A의 목적이 세부목표 B의 이행 수단에 의해 달성됨, 반대 경우도 성립	2
허용 (Enabling)	다른 세부목표 달성에 영향	무력화 (Disabling)	세부목표 B의 이행이 세부목표 A의 달성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되돌림. (예: 자원을 두고 경쟁, 혹은 첫 번째 세부목표의 일반적인 구현 수단이 두 번째 세부목표가 다루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킴)	0
		간접 허용 (Indirect Enabling)	세부목표 B의 이행이 간접적으로 세부목표 A의 달성을 가능하게 함	1
		직접 허용 (Direct Enabling)	세부목표 B의 이행이 직접적으로 세부목표 A의 달성을 가능하게 함	2
		상호간 직접 허용 (Direct Enabling in Both Directions)	세부목표 B의 이행이 직접적으로 세부목표 A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고, 세부목표 A의 이행이 세부목표 B의 달성을 가능하게 함	3
의존 (Relying)	두 세부목표 사이에 논리적 필요성 존재	부분 의존 (Partial reliance)	세부목표 B는 세부목표 A의 부분범주이고, 세부목표 A의 달성에 몇몇 세부사항을 제공함	1
		완전한 의존 (Full reliance)	세부목표 B의 이행이 세부목표 A의 달성에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필수적임	2

〈표 4-2〉 Nilsson et al.(2016)의 SDGs 상호작용 스케일링

상호작용	이름	설명	예시
+3	분리 불가 (Indivisible)	다른 목표의 달성과 불가분의 관계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2	강화 (Reinforcing)	다른 목표의 달성 지원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면 양수 시스템 및 관개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화시키면 전기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줄인다.
+1	허용 (Enabling)	다른 목표의 달성에 긍정적인 조건 제공	농촌 지역에 전력 보급률을 높이면 농촌 지역 거주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0	중립 (Consistent)	유의미한 상호작용 없음	인프라 개발,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교육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제약 (Constraining)	다른 목표 달성에 제한조건 제공	개선된 수자원 효율화는 농업 관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면 에너지 접근에 대한 옵션을 제한할 수 있다.

상호작용	이름	설명	예시
-2	훼방 (Counter-Acting)	다른 목표와 충돌	성장을 위한 소비증진은 폐기물 감소 및 기후완화를 저해한다.
-3	상쇄 (Cancelling)	다른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함	정부의 투명성 및 민주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안보 목표와 결부되지 않는다. 자연 보호 구역의 완전한 보호는 휴양지 접근을 막는다.

가용 데이터가 지금 없더라도 필요성 및 의의가 중요한 지표는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K-SDGs 지표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지표체계 안에 있어야 통계 산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노력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목표에만 큰 비율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 가용성이 없지만 필요성 및 의의가 중요한 지표는 그대로 두더라도, 방향성부터 명확하지 않은 지표나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현 K-SDGs 지표와 별개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따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SDGs 지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와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체계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야 한다.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 다양한 세부목표와 그에 따른 이행 노력이 활발해질 수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고문, 기획기사 제작, 토론회 및 포럼 개최, 홍보영상 제작 등의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 선진국은 하이킹 활동 등의 국가적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50%의 국민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sup>28)</sup>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목표 및 지표체계를 재점검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더해진다면 국가지속가능성 발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8)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and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e year closer 2018: Norway's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참 / 고 / 문 / 헌 /

###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2016),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169-174
- 국립산림과학원(201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국가보고서」
- 국토교통부 (2019), “국민 지역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보도자료
- 김덕기 (2017), 「혁신성장을 통한 관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 김용성(2017), 「한국 성인역량의 현황과 개선방향: 문제해결 스킬을 중심으로」
- 김태현 외(2017),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사례연구 및 추진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 김중호 외(2017),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문병기 등(2018), 「국내체류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법무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세계자연기금(2016),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의 현주소」
- 오욱찬(2018),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라 외(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 이정석 외(2019),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사례연구 및 추진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 통계청 (2016)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6년~2014년)” 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19)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한다(2019.03.29.)” 보  
도자료
- 홍관표(2013),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309-344.
- 환경부(2016),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 환경부(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 환경부(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 정의 개선 및 산출방법론 마련 연구」
- 환경부(201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2018.12.24)” 보도자료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12~'14)」, pp.13-16

황정원(2018), “SDGs4-교육2030’과 한국 고등교육의 이행현황”, 한국대학교육협의회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외문헌]

Coopman et al.(2016), “See the Whole: Implementing the SDGs in an Integrated and Coherent Way”, *A Research Pilot by Stakeholder Forum*, Biregional and Newcastle University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and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8), “One year closer 2018: Norway’s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ilsson et al. (2016), “Map the Interactions amo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ture*, 534, pp.320-322

SDSN(2020),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ECD(2019),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UNFPA(2018),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 5.6.2

UN (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UN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UNFPA(2018),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 5.6.2

UN Women (2015) Position paper: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York: UN Women

Wiedmann et al. (2015) “The Material footprint of nations”, *PNAS*, 112(20) pp. 6271-6276

[온라인 자료]

SDSN <http://unsdsn.org>

SDSN 네트워크 <http://networks.unsdsn.org>

UN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

UN sustainable development platform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

국가보호지역 KDPA <http://www.kdpa.kr>

국회입법조사처 (2018 11.14),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31호 2018년 11월 14일

서형수 민주당 전 의원 블로그(190123), “[190123보도자료] 재취업 어려운데... 실업급여는  
부실” <http://blog.naver.com/shsoo2016/221448839976>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 부록

- 부록 I. K-SDGs 세부목표별 소관부처





번호	세부목표 4	지표 8(UN 대비 신규 5)	소관 부처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 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복지부 기재부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신규)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복지부 고용부
		○ (신규)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가입유형별, 성별)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신규)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중(%) (지출항목별)	복지부 국토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신규)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 (EITC, CTC)의 지출 규모 ※ EITC : 근로장려세제 CTC : 자녀장려세제	복지부 기재부



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1(UN 대비 신규 7)	소관 부처
2-1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신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농식품부
2-2	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신규) 농가소득(천원)	농식품부 농진청
		○ (신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3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농식품부 농진청
		○ 농경지토양유기물함량(%)	
		○ 발토양 산도(pH)	
		○ (신규)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 (신규)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2-4	종자, 작물,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천건)	농식품부 농진청
		○ (신규) 토종종자 확보 수	
2-5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신규)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만톤)	농식품부



번호	세부목표 9 (신규 3)	지표 18(UN 대비 신규 9)	소관 부처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 (신규) 초미먼지 환경기준	환경부
3-8	(신규)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	○ (신규) 치매안심센터 개소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 (신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신규) 노인 일자리	
3-9	(신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신규) 공공 병상 수	복지부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UN 대비 신규 6)	소관부처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li> <li>○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li> </ul>	교육부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li> <li>○ (신규)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li> <li>○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li> <li>○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li> </ul>	교육부 복지부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li> <li>○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li> <li>○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li> </ul>	교육부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 참여율(%)</li> <li>○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li> </ul>	교육부 고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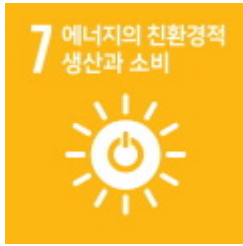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UN 대비 신규 6)	소관 부처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교육부 고용부
		○ 취약률(%)	
		○ 학업중단율(%) (다문화학생)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PIAAC) ※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교육부
		○ 청소년·성인 문해율(%)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교육부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인원(명)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교육부
		○ 학교 내진보강률(%)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교육부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교육부 복지부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수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UN 대비 신규 1)	소관 부처
5-1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정책 개선 수용률(%)	여가부
5-2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여가부 경찰청
		○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5-3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여가부
5-4	정치·경제·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여가부 행안부 고용부 지속위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	
5-5	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미련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5-6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	○ (신규) 공학계 여학생 비율	여가부 교육부
5-7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	○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	여가부



번호	세부목표 7(신규 3)	지표 14(UN 대비 신규 12)	소관 부처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 (신규) 전국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 (신규)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2	(신규)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6-3	(신규)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신규)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환경부
		○ (신규) 수질등급달성률(%) ※ BOD 기준	
		○ (신규)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 (신규)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도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신규) 상수도 누수율(%)	환경부
		○ (신규) 물공급 안전율(%)	
		○ (신규)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 (ℓ/일/인)	
6-5	(신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 (신규) 목표수질 달성률(%) ※ 목표수질 달성지점/목표수질 설정지점	환경부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 생태하천 복원율(%) ※ 복원구간/복원목표 구간	환경부
		○ (신규) 수질 ' 좋음 ' 등급 비율(%)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환경부



번호	세부목표 4(신규 1)	지표 7(UN 대비 신규 5)	소관 부처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 (만호)	산업부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	산업부 환경부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신규) 국가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 ○ (신규)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m <sup>2</sup> ·년)	산업부 국토부
7-4	(신규)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 (신규) 친환경버스 확대 수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11(UN 대비 신규 4)	소관 부처
8-1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기재부
8-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고용부 여가부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	○ 물질 발자국	환경부 산업부
		○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8-4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여성고용률(%)	고용부 여가부
		○ 남녀 임금격차(%) (남성 대비 여성급여)	
8-5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	○ (신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	고용부 기재부
		○ (신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8-6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신규)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부
8-7	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	문화부
		○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	



번호	세부목표 5(신규 1)	지표 8(UN 대비 신규 4)	소관 부처
9-1	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 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도로 보급률(km/천명) ※ 도로연장km/인구천명	국토부 통계청 과기부
		○ (신규)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	
		○ (신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중기부 금융위
9-3	(신규)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신규)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	산업부 중기부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GDP 대비 연구개발비	과기부
9-5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부 환경부
		○ (신규)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번호	세부목표 5	지표 10(UN 대비 신규 7)	소관 부처
10-1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소득하위 40%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 가구소득/ $\sqrt{n}$ (n : 가구원수)	복지부 기재부
		○ (신규) 소득격차비율(%)	
10-2	나이, 성별, 장애여부,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	○ (신규) 소득 5분위 배율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 인구집단별 빈곤율(%) (노인빈곤율)	
		○ (신규)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신규) 인구집단별 고용률(%) (55세 이상 고용률)	복지부 고용부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신규) GDP 대비 가계소득	고용부 기재부
10-5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	○ (신규)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	법무부 복지부
		○ (신규)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9(UN 대비 신규 9)	소관부처
11-1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국토부
11-2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신규)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률 등) ○ (신규)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m/인))	국토부 행안부
11-3	도시의포용성과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신규)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국토부 행안부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문화재청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 (신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신규)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행안부 국토부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9(UN 대비 신규 9)	소관부처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미세먼지 나쁨일수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일 *GDP 10억원)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
11-7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 보도면적 비율 ○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국토부 행안부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 (신규)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번호	세부목표 11(신규 3)	지표 20(UN 대비 신규 12)	소관부처
12-1	(신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신규)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기재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 (신규)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기본 계획 수립 여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물질발자국	환경부 산업부
		○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12-3	식품의생산과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	○ 식품 손실 지표	환경부 농식품부
		○ (신규) 식품 폐기물 지표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 (신규) 유해성정보화물질(개)	환경부
		○ (신규)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개)	
		○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환경부
		○ (신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12-6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	산업부 중기부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녹색제품 구매율(%)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 (신규)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 수(건)	

번호	세부목표 11(신규 3)	지표 20(UN 대비 신규 12)	소관부처
12-8	(신규)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신규)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환경부
		○ (신규)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12-9	(신규)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 (신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환경부
		○ (신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12-10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 (신규) 탄소·생태발자국	환경부 문화부
12-11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산업부



번호	세부목표 4(신규 1)	지표 6(UN 대비 신규 6)	소관 부처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기상청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환경부 산업부
		○ (신규)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 건수(건)	
		○ (신규)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신규)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기상청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13-4	(신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신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MtCO <sub>2</sub> )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4(UN 대비 신규 8)	소관 부처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해수부 환경부
		○ (신규)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해수부
		○ (신규) 갯벌복원면적(km <sup>2</sup> )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수부
14-4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 TAC : 총허용어획량	해수부
		○ TAC 대상 어종수(어종)	
		○ (신규) 감척어선 수(건)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해수부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신규) 어가 소득(백만원)	해수부
		○ (신규)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4-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해수부

번호	세부목표 8	지표 14(UN 대비 신규 8)	소관 부처
14-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li> </ul> </li> <li>○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만원)</li> </ul>	해수부



번호	세부목표 8(신규 1)	지표 13(UN 대비 신규 4)	소관 부처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환경부 산림청
		○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신규) 산녹색보호지수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 국가산림경영지표 확장(건)	산림청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환경부 산림청
		○ (신규)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농진청 산림청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환경부 기재부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번호	세부목표 8(신규 1)	지표 13(UN 대비 신규 4)	소관부처
15-8	(신규)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신규)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 (신규)도심/생활권 복원(ha)	산림청 환경부



번호	세부목표 13(신규 1)	지표 14(UN 대비 신규 14)	소관 부처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5대 범죄 검거율(%)(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경찰청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 아동학대 발견율(%)	경찰청 복지부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	경찰청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 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경찰청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 국가청렴지수	권익위
16-6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 만족도 평가결과	전부처
16-7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	전부처
16-8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	지속위
16-9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지속위 행안부

번호	세부목표 13(신규 1)	지표 14(UN 대비 신규 14)	소관부처
16-10	개도국 내 폭력,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	외교부 인권위
16-11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지속위
		○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	
16-12	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사이버폭력 건수	지속위 여가부 법무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의 이행	
16-13	(신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전부처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UN 대비 신규 9)	소관 부처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 GNI 대비 ODA 비율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기재부 지속위 산업부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지속위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외교부 기재부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지속위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지속위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외교부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	지속위 국조실 외교부